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6

CONTENTS

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	07
제2장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3

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26년도 나라살림 종합	39
1. 재정운용 여건	41
2. 세입 규모	42
3. 지출 규모	48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52
제2장 재정운용 방향	57
1. 자원배분 방향	59
2. 중점 추진과제	63
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107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109
1. 보건·복지·고용 분야	111
2. 교육 분야	135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42
4. 환경 분야	157
5. R&D 분야	167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74

7. SOC 분야	186
8. 농림·수산·식품 분야	196
9. 국방 분야	208
10. 외교·통일 분야	215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2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235

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1장 2026년도 예산	245
1. 2026년도 예산총칙	247
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s)	252
3.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286
4. 계속비 (Multiyear Expenditure)	288
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289
6. 국고채무부담행위 (Debts from National Treasury)	290
제2장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91
1.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293
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295
3. 기금 수입 (Fund Revenues)	296
4.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300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305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307

2026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6



제 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

제2장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0
26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6

제1장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



20 **나라살림**
26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6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예산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리농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입니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언설문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집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을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AI · 콘텐츠 ·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 · 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 · 판매 · 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구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하겠습니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1 안전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했습니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나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신속히 확정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1월 4일

대통령 이 재 명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예산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
26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6

제2장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0 **나라살림**
26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6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님,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에 머무르고
특히, 금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출범 직후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집행하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를 조기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지표들이 개선세로 돌아서며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금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1.2%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민간소비가 3년 만에 최대폭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반등하는 등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하고,
경기 회복세가 지방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등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대전환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지역소멸 등
구조적 난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2026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6년 예산안 주요 특징 】

2026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 ①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축,
- ②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③ 지방 우대입니다.

첫째,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선제적으로 움직여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

최근 IMF도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적절한 대응은
긴축재정이 아닌 완화적인 재정정책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에
과감히 투자하기 위해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로 향하는 성장의 교두보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둘째,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모든 사업을 성과를 기준으로 점검한 후,
저성과·낭비성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연구기관이
도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1,800여 개의 소규모 수탁과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국가 대형 임무 과제 100개에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사업 역시 10조 6천억 원으로
3배 가량 확대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3대 투자 중점】

2026년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은

-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실현,
- ② 기본이 튼튼한 포용사회 구현,
- ③ 국민의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입니다.

첫째, 기술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혁신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I 3강 도약을 위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10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로봇·자동차·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 300개와
복지·납세·신약 심사 등 공공부문에도 AI를 도입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AI 혁신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급 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로 구매하는 등
AI 필수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미래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19.3% 확대한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여
AI·바이오·콘텐츠·방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첨단인력 3만 3천 명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인재 양성·해외인재 유치·우수인력 유출방지의
3대 인재 확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년간 15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을 출자하여
국가 지원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 투자를 견인하겠습니다.

K-컬처와 관광 등 글로벌 소프트파워 확보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교통 이용과 관광지 입장이 가능한
K-관광 패스를 외래 관광객 4만 명에게 발급하고,
산재된 해외문화 기관을 집적화함으로써
체계적인 K-컬처 수출 및 확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 비용을
향후 2년간 500억 원 지원하고,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이 곧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산업·생활 기반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개 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교육·연구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9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의 투자를 지방으로 이끌기 위해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지방의 의료·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 23만 명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하여
사람이 찾고 머무르는 지방을 만들겠습니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대별 맞춤형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동수당 지급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 이하,
아이돌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정부가 납입금의 6% 또는 12%를 매칭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매트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0만 원 이상으로 늘리고,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약 74만 명에게는
월 최대 3만 8천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기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1만 2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2천 명 이상 확대하여 3만 6천 명까지
확충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천 개소에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특히, 건설·조선업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일터지킴이 1천 명을 배치하여
상시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월 5~6만 원으로 지하철·버스를
추가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 호를 공급하여
서민의 교통·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재난·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I·드론을 활용하여 재난 예측체계를 고도화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2천억 원 확대된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안전시설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신임 경찰 6천 명 이상을 충원하고
저위험 권총·조끼를 각각 7천 개 이상 확충하여
현장 대응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전에 대비하여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AI·드론·보라매(KF21)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투자를
1조 원 이상 늘려 3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여
장기 복무하는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3년간 월 30만 원의 매칭을 지원하고,
당직근무비·급식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군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한편, 일시적으로 확대된 ODA는 성과를 중심으로 점검하여
우리 산업 수요와 연계한 실용적 ODA로 재편하고,
남북협력기금을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첨단산업 육성, 지방 활력 회복, 민생 부담 완화 등
이번 예산안의 핵심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다면
728조 원 예산안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핵심사업의 결실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히 닿을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이 내년 1월 초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 윤 철**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26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6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26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장 재정운용 방향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20
26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6

제1장

2026년도 나라살림 종합

1. 재정운용 여건
2. 세입 규모
3. 지출 규모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01 재정운용 여건

2025년 세계경제는 조기선적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향후 미국 관세영향이 본격화되며 성장·교역 증가세 둔화가 전망된다. 주요국 경기부양책, AI 투자 확대 등 상방요인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세계	선진국	신진국			신흥국	주요국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2024년	3.3	1.8	2.8	0.9	0.1	4.3	5.0	6.5	4.3
2025년 ^o	3.2	1.6	2.0	1.2	1.1	4.2	4.8	6.6	0.6
2026년 ^o	3.1	1.6	2.1	1.1	0.6	4.0	4.2	6.2	1.0

자료 : IMF(2025. 10.)

금년 우리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25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내수는 심리개선, 정책효과 등에 따른 소비 증가세 확대, 선행지표 개선에 따른 건설부진 완화 등에 따라 회복세 확대가 전망되며, 순수출은 반도체 호조에도 관세영향 본격화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25년 대비 성장기여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2026년 경제 전망

(단위: %)

	2024년	2025년 ^o	2026년 ^o
경제성장률(%)	2.0	1.0	2.0
소비자물가(%)	2.3	2.1	2.1

자료 : 2025~2026년 경제전망(재정경제부 경제성장전략)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02

세입 규모



2-1 총수입 : 2025년 대비 3.6% 증가한 675.2조원

-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 전체 총수입은 2025년보다 3.6% 증가한 675.2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2025년 대비 2.4% 증가한 428.6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25년 대비 2.0% 증가한 390.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398.9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9.7조원으로 전망된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 등에 따라 2025년 대비 5.9% 증가한 246.6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1] 2026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총 수입	651.6	675.2	3.6
■ 예산	418.7	428.6	2.4
(국 세)	(382.4)	(390.2)	(2.0)
• 일반회계	390.5	398.9	2.1
• 특별회계	28.2	29.7	5.3
■ 기금	232.8	246.6	5.9
(사회보장성기금) ¹⁾	(135.6)	(146.2)	(7.8)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참고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7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은 중앙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text{총수입} = \text{일반회계수입} + \text{특별회계수입} + \text{기금수입} - \text{내부거래} - \text{보전거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을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국채발행 수입·차입금 등도 총수입 계산시 제외된다. 국채발행 수입 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정부 전체 수입규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총수입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3부에서는 회계·기금별로 독립된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총계 개념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예산안 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예산 및

2-2 예산 수입 : 2025년 대비 2.4% 증가한 428.6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회계 세입 : 2025년 대비 2.1% 증가한 398.9조원

-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26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5년(371.8조원) 대비 1.8% 증가한 378.6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5년(18.7조원) 대비 8.6% 증가한 20.3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6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5년 대비 1.8% 증가한 378.6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25년 대비 1.7% 증가한 343.9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정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서, 2025년 대비 8.6% 증가한 20.3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2026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 계(Ⅰ+Ⅱ)	390.5	398.9	2.1
■ 국세(Ⅰ)	371.8	378.6	1.8
• 내국세 ¹⁾	338.1	343.9	1.7
• 관세	8.4	7.2	△14.1
• 교통·에너지·환경세	15.1	16.4	8.7
• 교육세	6.0	6.4	6.7
• 종합부동산세	4.1	4.6	12.2
■ 세외수입(Ⅱ)	18.7	20.3	8.6

¹⁾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 특별회계 세입 : 2025년 대비 5.3% 증가한 29.7조원

- 2026년 특별회계 세입은 2025년(28.2조원) 대비 5.3% 증가한 29.7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용자회수·부담금 등 자체수입으로 구성된다. 2026년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는 2025년 대비 9.6% 증가한 11.6조원으로 전망되며, 자체수입은 2025년 대비 2.7% 증가한 18.1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3] 2026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 계(Ⅰ+Ⅱ)	28.2	29.7	5.3
■ 국세(Ⅰ) ¹⁾	10.6	11.6	9.6
■ 자체수입(Ⅱ) ²⁾	17.6	18.1	2.7

1) 주세·농어촌특별세 / 2)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용자회수, 수수료 등

2-3 기금 수입 : 2025년 대비 5.9% 증가한 246.6조원

- 2026년 기금 수입은 2025년 대비 5.9% 증가한 246.6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5.7% 증가한 102.0조원, 용자원금 회수는 3.6% 감소한 35.6조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9.6% 증가한 108.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 수입은 크게 사회보장기여금, 용자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2025년 대비 5.7% 증가한 102.0조원으로 전망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서정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자금을 만기에 회수하는 융자원금 회수 규모는 2025년 대비 3.6% 감소한 35.6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 확대 등으로 인해 2025년 대비 9.6% 증가한 108.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4] 2026년 기금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 계(Ⅰ+Ⅱ+Ⅲ)	232.8	246.6	5.9
■ 사회보장기여금(Ⅰ)	96.5	102.0	5.7
■ 융자원금 회수(Ⅱ)	37.0	35.6	△3.6
■ 이자수입 등 기타(Ⅲ)	99.3	108.9	9.6

기금 유형별로는 사업성 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타재산수입 증가 등으로 2025년 대비 1.1% 증가한 61.7조원,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기타재산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7.1% 증가한 170.9조원, 계정성 기금은 복권기금의 복권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14.4% 증가한 13.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2-5] 2026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 계(58개)	232.8	246.6	5.9
■ 사업성 기금(48개)	61.0	61.7	1.1
■ 사회보험성 기금(6개) ¹⁾	159.6	170.9	7.1
■ 계정성 기금(4개) ²⁾	12.2	13.9	14.4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2)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참고로 앞서 설명한 기금 수입 246.6조원은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기금 수입으로서, 국회에서 확정된 67개 전체 기금의 수입(기금운용규모) 990.8조원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에는 회계·기금 등 정부 내부간 거래, 민간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자체수입만을 반영한다.

둘째,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한 재정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통합재정 관점에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정부전체의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58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포함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편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03

지출 규모



3-1 총지출 규모 : 2025년 대비 8.1% 증가한 727.9조원

- 2026년도 총지출은 727.9조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규모이다.

2026년 총지출은 2025년 예산 대비 8.1% 증가한 727.9조원이다.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주요 핵심과제 등 고성과 부문에 집중 투자하면서 저성과 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성과 중심의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자 한다.

예산 총지출은 481.4조원으로 2025년(447.4조원) 대비 7.6%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5.5% 증가한 385.3조원, 특별회계는 17.0% 증가한 96.1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5년 계획 대비 9.1% 증가한 246.5조원이다.

[표 3-1] 2026년 총지출 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총 지 출	673.3	727.9	8.1
■ 예 산	447.4	481.4	7.6
• 일반회계	365.3	385.3	5.5
• 특별회계	82.1	96.1	17.0
■ 기 금	225.9	246.5	9.1

참고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 **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총지출 개념은 국제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는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한국은행이 1993 SNA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반정부 통계를 작성해 왔으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2011.9월 국무회의)하여 정부의 국제기구 제출용 재정통계와 한국은행 통계기준을 일치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포괄범위는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며,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제도단위 :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 자금운용계정 보유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3-2 예산지출 규모 : 2025년 대비 7.6% 증가한 481.4조원

- 2026년 예산 지출 규모는 2025년 대비 7.6% 증가한 481.4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5% 증가한 385.3조원, 특별회계는 17.0% 증가한 96.1조원이다.

일반회계는 AI 대혁신, 신산업 혁신 등 초혁신경제 및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등 포용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하여 2025년 예산 대비 5.5% 증가한 385.3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6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예산 대비 17.0% 증가한 96.1조원이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 간 및 계정 간 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산순계의 2025년 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은 6.9%이다.

[표 3-2] 2026년 예산지출 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 예산지출	447.4	481.4	7.6
• 일반회계	365.3	385.3	5.5
• 특별회계	82.1	96.1	17.0
■ 예산순계	510.1	545.4	6.9

3-3 기금지출 규모 : 2025년 대비 9.1% 증가한 246.9조원

- 2026년 기금지출 규모는 2025년 대비 9.1% 증가한 246.5조원으로 이 중 사회보장지출은 9.1% 증가한 91.1조원이다.

기금 사업비는 2025년 대비 8.3% 증가한 212.9조원이고, 이 중 사회보험성 기금사업비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2025년 대비 8.4% 증가한 124.6조원이다.

한편, 기금운영비는 2025년 대비 4.4% 증가한 1.9조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2025년 대비 15.4% 증가한 31.6조원이다.

[표 3-3] 2026년 기금지출 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 계(59개) (사회보장지출 ¹⁾)	225.9 (83.5)	246.5 (91.1)	9.1 (9.1)
■ 사업비	196.6	212.9	8.3
• 사업성 기금(49개)	76.2	82.3	8.0
• 사회보험성 기금(6개) ²⁾	114.9	124.6	8.4
• 계정성 기금(4개) ³⁾	5.5	6.0	9.9
■ 기금운영비	1.9	1.9	4.4
■ 차입금이자상환	27.4	31.6	15.4

1)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지출

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3)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0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1 재정수지

-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52.7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7.8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52.7조원) 적자,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9%(△107.8조원) 적자가 예상되며, 2025년 통합재정수지 △0.8%(△21.7조원) 및 관리재정수지 △2.8%(△73.9조원)에 비해 악화되었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등 고성과 부문에 대한 투자 및 포용 사회 구현,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재정의 필수적 역할은 지속하면서, 저성과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표 4-1] 재정수지

(단위: 조원)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
			(B-A)
■ 통합재정수지(Ⅰ) (GDP 대비, %, %p)	△21.7 (△0.8)	△52.7 (△1.9)	△31.0 (△1.1)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Ⅱ)	52.1	55.1	3.0
■ 관리재정수지(Ⅰ-Ⅱ) (GDP 대비, %, %p)	△73.9 (△2.8)	△107.8 (△3.9)	△34.0 (△1.1)

참고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시행 초기단계로 구조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실제 국가채무 증가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4-2 국가채무

- 2026년 국가채무는 1,413.8조원(GDP 대비 51.6%)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증가(108.3조원) 등에 기인한다.

2026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 1,413.8조원 중에서 향후 국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2.7%(1,027.9조원)이며, 나머지 27.3%(385.9조원)는 외화자산, 용자채권 등 채무에 상응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원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로 구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순수하게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주택도시기금 채무는 서민 주거 안정용 국민주택채를 발행하고, 대출금 형태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정부는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 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4-2] 국가채무*

(단위: 조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
■ 국가채무 (GDP대비, %)	1,175.0 (46.0)	1,273.3 (48.1)	1,413.8 (51.6)
① 적자성 채무	815.2	879.5	1,027.9
• 일반회계 적자보전	756.7	824.6	980.0
•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58.5	54.8	47.9
② 금융성 채무	359.8	393.9	385.9
• 외환시장 안정용	210.3	238.2	238.2
• 서민주거 안정용 등	149.5	155.7	147.7

* 2025년, 2026년 본예산 국회 확정 기준

2026년 예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이며,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2029년 말까지 50%대 후반 수준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
26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6

제2장

재정운용 방향

1. 자원배분 방향
2. 중점 추진과제
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01

재원배분 방향



2026년 예산은 (1)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2)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세 가지 정책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1-1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먼저, AI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대한 투자를 2025년 3.3조원에서 2026년 9.9조원으로 3배 수준 대폭 확대한다.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년간 6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생활밀접형 제품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AX-Sprint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 공공부문에도 AI를 도입한다. 아울러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고급인재 1.1만명을 양성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국민 AI 붐업을 유도하며, 고성능 GPU 1.5만장을 추가 구매하여 5만장 확보 목표 중 정부구매분을 조기 달성하는 등 필수 인프라도 조성한다.

미래 신산업 혁신을 위해 R&D 예산을 35.5조원으로 전년 대비 역대 최대 수준인 19.9% 확대하여, A(AI)·B(바이오)·C(콘텐츠)·D(방산)·E(에너지)·F(제조)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성과 가시화를 촉진한다. 또한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원을 출자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뒷받침한다.

대미 투자 뒷받침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에 1.1조원을 출자하고, 관세로 인한 피해 분석, 물류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바우처를 800개사에 신규 지원하는 등 대미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타정책계획

관세협상 등 통상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한다. 추가로 유망 내수 중소기업 100개에 마케팅·R&D 등을 지원하여 수출업체로 집중 육성하고, 수출바우처 지원물량도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비용경감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용자·보조를 2025년 0.5조원에서 2026년 0.9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저금리 용자, 보증 등 8.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기업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탄소중립 가속화를 뒷받침한다.

K-컬처 확산과 K-관광·푸드·뷰티 등 한류 연계 붐업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문화강국 기반을 조성한다. 문화분야 모태펀드 등 콘텐츠 정책금융을 2025년 0.3조원에서 2026년 0.5조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창작자 3천명 지원 및 예술인 복지금고 신설 등을 통해 K-컬처 제작·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통·입장료를 할인 지원하는 K-관광 패스를 신설하고, 푸드·뷰티 등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유통·홍보 등 수출 수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1-2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지방이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산업·생활 기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거점국립대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집중육성 분야에 대한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지원에 0.9조원을 투자하며, 2026년 3개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전략산업(조선·방산-동남권, 에너지-서남권, 휴머노이드-대경권, 첨단과학·산업-중부권)에 기반하여 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특화 지원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생활·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출산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 추가 지급을 통해 육아부담을 경감한다. 미래세대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월 납입액(50만원 한도)의 6/12%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또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에 0.1조원을 투자한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메트도 촘촘히 구축한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급액을 월 200만원 이상으로 늘린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인원을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2,300개 확대하여 3.6만개까지 확충하는 등 장애인 돌봄·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위기가구 누구나 기본적인 생필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기본보장 코너를 150개소까지 확대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서민층 생계·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매출신장을 유도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다.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발행 지원과 함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상향(수도권 2→3%,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5→7%)하고, 연 매출 1.04억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창업희망 500팀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원 모델을 신규 도입하며, 마을기업·우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기반도 구축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편모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7만개소에 필수 안전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건설·조선업 등 주요 업종 대상으로 일터지킴이 1,000명을 선발하여 상시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다.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범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보장을 강화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1-3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재난에 대한 예측·예방·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한국형 기상모델을 개발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AI·드론을 활용하여 재해·재난 예측력을 강화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0.9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상습침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호우 등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군 자긍심을 고취하고 첨단군대 육성도 지원한다. 3년간 동결되었던 급식단가를 일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고, 장기 복무하는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3년간 1,08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고 당직비를 인상하는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보라매(KF-21) 최초 개발·양산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착수하며, 미래전에 대비한 AI·드론·로봇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함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도 평화도 지원한다. ODA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재편하고, 민생·경제협력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0.8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02

중점 추진과제



1.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1-1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재정투자

1) 추진 배경 및 목적

글로벌 AI 기술패권 경쟁이 단일 기업간 경쟁을 넘어 '국가 단위' 경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AX(AI Transformation) 전환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인프라, 핵심기술, 인재, 전산업 확산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과 산업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26년 예산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인프라 확충 및 산업 현장 적용을 확대하면서도 예산 편성·편성·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비 및 예산 범주 정교화를 병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26년 AI 예산 규모 및 편성 방향(3.3→10.1→9.9조원)

'26년 AI 예산은 총 9.9조원 규모로 AI 인프라·핵심기술·인재·AX 확산을 축으로 편성하였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초공용계획

☞ AI 인프라 등('25년 1.9조원 → '26년 5.5조원)

AI 산업의 병목으로 지적되어 온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6년에는 AI 고속도로 중심의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AI컴퓨팅 자원활용 기반 강화는 정부 재정으로 GPU 1.5만장 구매 등을 추진하여 연구·산업 현장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단위 컴퓨팅 허브를 구축하여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출자금 11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데이터·바우처 등 AI 저변 확대를 위해 AX 통합바우처 등 각종 바우처를 900억원을 지원하고, 독자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300억원, 데이터 스페이스·클러스터 구축 420억원 등 AI 수요 확충도 편성하였다.

특히, 바우처는 기업 현장의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클라우드·GPU·실증 바우처를 묶는 'AX 통합바우처(300억원)'를 신설하되, 중소기업의 수요절벽 우려를 고려하여 기존 소규모 바우처도 병행한다.

'26년 바우처는 통합바우처 신설 이후에도 4종 바우처 합산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향후 기업당 2년 지원 구조를 감안하면 연차적으로 확대 여력이 있다.

아울러, AI 원천·응용 경쟁력을 동시 강화하기 위해 AGI·피지컬AI·버티컬AI 연구지원, 출연연 AI-ISD, AI 자율제조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기 위한 3조원을 편성한다.

☞ AI 인재확충('25년 0.7조원 → '26년 1.4조원)

AI를 '전문가의 기술'이 아니라 전국민의 업무·일상 역량으로 확산하기 위해 교육, 실습, 검증, 고급인재 확보를 전주기로 지원한다.

먼저, AI 온라인 테스트베드·오프라인 라운지에 125억원, 전국민 AI 챌린지 등에 138억원을 지원한다. AI거점대학·중심대학 555억원, AI이노아카데미·마에스트로·부트캠프 등에 투자하고, AI 최고급·고급인재를 위한 Brain to Korea 등에도 지원한다.

☞ 전산업 AX 대전환('25년 0.6조원 → '26년 2.4조원)

'26년은 기술개발 중심에서 나아가 제조·서비스·공공의 현장 문제 해결형 AX 확산에 방점을 두고, 단기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상용화 지원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병행한다.

휴머노이드·자율주행차·정밀제조·AI팩토리 등 5극3특과 주요 산업의 AX를 통해 지역주도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1~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AI 응용제품·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AX스프린트 사업을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AI 응용제품을 신속히 시장에 창출하여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협의한다.

한편, 공공분야는 공공AX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안전, 국민편의, 기업편의를 위한 지원에 총 0.1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창업 기업은 AX 창업 사업회와 AI 반도체 실증사업, AI Tips 등을 통해 스케일업이 가능하도록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 자금지원 등(0.7조원 → 0.6조원)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위해 출자를 지원하고, AI·딥테크 펀드를 통해 AI분야의 스타트업에 폭넓게 투자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2 R&D 확대, 유망기업 스케일업으로 신산업 혁신

1) R&D 투자 확대

📌 첨단기술 R&D 집중 투자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금년도 R&D 예산은 전년 대비 19.9% 증가한 35.5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AI·바이오·반도체를 포함한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국가 전략기술의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아울러 스마트팜·피셔리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형 기술 기반을 구축한다.

📌 민간연계 기반 기술사업화 강화

R&D 성과가 연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 수요 기반의 기술사업화 연계를 강화한다. 민간 투자와 정부 R&D를 연계하는 TIPS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스케일업 TIPS를 중심으로 기업당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기업당 12 → 30억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 R&D 사업화 보증을 신규 도입하여, 기술력은 확보했으나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는 유망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 뒷받침한다.

📌 첨단산업 인재 양성 및 확보

첨단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인재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재 양성 및 유치 전략을 추진한다. 국내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강화하여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실전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인재 유치(5년간 2,000명)를 통해 글로벌 연구 역량을 보강하고, 신진·우수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확대와 신규 박사 우수 장학금 도입(연 750만원) 등을 통해 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연구기반 확충 및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R&D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기반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지방 및 신진 연구자의 연구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풀뿌리 소액연구를 도입(2,000개)하고, 개인 기초연구 과제를 확대하여 기초연구 생태계의 저변을 복원한다. 아울러, 출연연과 대학을 중심으로 국가 대형 임무형 과제를 추진하고, 기초-응용-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구 연계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중장기 국가 연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간다.

2) 신산업 혁신

금융지원을 통한 신산업 성장 촉진

R&D 투자 확대와 연계하여, 신산업 분야의 본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 또한, 모태펀드 출자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1.0 → 1.5조원)하고, 신규 첨단산업 유니콘 육성과 재창업 기업 재도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특례보증을 확대(4.7 → 7.5조원)하여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 창업 생태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AI·딥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이 창업 후 빠르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패키지 내에 AI·딥테크 전용 특화트랙을 신설(255개)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도입(50개)하여 유망기업의 신속한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해나간다.

또한 대기업·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523 → 600개)함으로써, 홀로서기 어려운 벤처·중소기업이 외부 역량을 활용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스타트업 파크와 제조창업 공유공장 등 지역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기술 창업이 수도권을 넘어 지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타공용계획

📌 신산업 기반 확보 및 공급망 강화

신산업 경쟁력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핵심 인프라 구축을 병행 추진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 인프라를 신규 조성하여 차세대 반도체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원자재·소재 평가·실증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자립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R&D 성과, 금융 지원, 창업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1-3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강화

관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예산을 2025년 1.6조원에서 2026년 3.6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1) 통상현안 적극 대응

대미 관세 협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의 대외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2026년 관련 예산 1.3조원을 지원한다.

📌 전략적 대미투자 추진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이행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출자 예산 1.1조원을 지원한다. 공사는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사항, 재정·금융 여건, 외환시장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심의·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MASGA 프로젝트 등 조선·방산 수주 지원

한-미 협력이 강화되는 조선·방산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마중물을 지원한다.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 중소조선사의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Repair-Operation) 역량 강화,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 구축 등 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리고 K-조선·방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예산 705억원을 통해 4,600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고, 방산수출기업 지원펀드에 대한 출자를 확대(200 → 300억원)하는 등 우리 기업이 수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 관세 피해기업 지원

우리 수출기업이 관세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은 수출기업 약 8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지원바우처를 발급한다(424억원). 긴급지원바우처는 국내외 컨설팅사, 물류법인 등과 연계하여 관세피해 분석 및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물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고관세 품목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하여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원자재 매입, 시설투자, 연구개발, 경영안정 등 대출(기업당 최대 100억원)에 대해 중소기업은 2.0%p, 중견기업은 1.5%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수출역량 강화

☞ 수출역량 강화 및 저변 확대

유망기업 및 분야의 수출역량 제고를 통해 국내기업 수출의 저변을 넓힌다. 유망 내수기업을 수출 중추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402억원). AI·방산 등 유망산업 기업 100개사를 매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인증, Post-R&D 서비스 등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요가 큰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2025년 4,690개사에서 2026년 6,394개사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605 → 630개사),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770 → 954개사)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한편, K-뷰티, K-푸드 등을 찾는 해외 소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유통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예산 49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유통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전준비, 한류 연계 팝업스토어, 마케팅, 동반진출 기업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국내 유통플랫폼의 해외진출을 통한 K-뷰티·푸드 등의 동반수출을 촉진한다.

☑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안정화

기술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 고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설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핵심광물 재자원화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였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관련된 입지·설비 투자금액의 30~50%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1,0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또한,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처리·고순도화 등 시설·장비 구매비용의 50~70%를 보조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핵심광물의 경우에는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 특별 용자 공급 규모도 2025년 390억원에서 2026년 67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단위: 억원)

	'25년	'26년	비고
■ 대미투자지원 프로그램	-	11,000	신설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 반영
■ 긴급지원바우처	-	424	관세대응, 물류비 등 지원바우처 신설
■ 유통기업 해외진출	-	492	유통기업과 유망 소비자 동반수출 촉진
■ 소부장 투자보조금	- (추경700)	1,000	지원규모 확대(^{25추경} 700→1,000억원)

1-4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가속화 뒷받침

1)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에 대한 용자·보조 규모를 대폭 키운다(0.5 → 0.9조원). 해상풍력 대규모 사업자 저리용자(+800억원) 및 보증(+1,000억원)을 확대하고, 영농형 태양광 기반 확보를 위해 유희농지 매입도 늘린다(+1,700ha, +0.7조원).

또한, '25년 석탄공사 조기폐광 완료, 비축유 1억 배럴 달성 등 당초 지원 목적을 달성한 화석연료 지원사업을 축소하는 한편,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폐광지역에 대해 경제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신속한 산업전환을 뒷받침한다(총사업비 1.1조원).

한편, 대규모 설비 확충 전에 소규모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 가파도를 대상으로 RE100 실증사업을 추진한다('26년 80억원). 본 실증사업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모델의 기술적·운영적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 에너지 고속도로·차세대 전력망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기반기술이자 장거리·대용량 송전에 필수적인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설계·제작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전력망 수요에 대응하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적기 구축을 뒷받침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하여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기 위한 배전망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사업자 대상 에너지 저장체계(ESS, Energy Storage System) 지원사업을 신설한다(1,176억원). 이를 통해 시간대별 전력 불균형에 대응한 전력계통 안정화 기반을 강화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아울러,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계획」(25.7월)의 신속 이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25.12월 4개 특구 선정) 효과성 제고를 위해 ‘미래지역 에너지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372억원)’을 신설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적용한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VPP, V2G, ESS Farm 등, 100억원)과 농공산단·캠퍼스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272억원)을 본격 지원한다.

2)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 추진

☞ 전기·수소차 보급을 가속화하여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추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정책의 핵심수단인 전기·수소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구매보조금 정책을 보다 고도화하여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한 다양한 모델의 전기·수소차가 시장에 출시되도록 유도하고, 2026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신설,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자에게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2026년부터 전기·수소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기·수소버스 등 상용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 용자를 지원하고(국비 735억), 인프라 확충 및 유관 산업 육성을 위해 충전 시설 구축·운영, 충전 기술개발 등에 정부·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를 조성(국비 740억)하여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고보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전기차 제조사가 공동부담한 보험료(국비 20억)를 기반으로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한다.

☞ 탈탄소 산업 전환

기업이 산업·공정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3조원 규모의 장기·저리 용자를 제공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투자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819억원 규모의 용자*도 정부가 직접 제공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담보력 부족으로 용자혜택에 소외받지 않도록 1.41조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을 공급한다.

* 금리 1~1.44%(25년 4/4분기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용자금 지원조건 고시)

탄소중립 녹색생활

탄소중립 국민실천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2026년 예산을 2025년 대비 13.1%(21억원) 증액된 181억원으로 편성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문조사, 시민단체 및 참여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실천항목별 탄소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포인트 단가를 조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흡수원,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분야의 신규 항목도 추가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은 5개로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kw이하) 설치’(10,000원/회),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이며, '26년 1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또한, 지역축제,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을 '25년 100억원에서 '26년 157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 지자체도 '25년 119개소에서 '26년 144개소로 늘려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향후 폐배터리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을 '26년 498억원으로 '25년 대비 215억원(74.6%)을 증액 편성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서설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5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1) K-컬처 확산 및 수출강화 (1.3 → 1.8조원)

📌 콘텐츠산업 수출확대 뒷받침

정책금융, 장르별 특화지원, 인재양성, AI 활용 제작 등 집중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 수출 확대를 뒷받침한다. 문화분야 모태펀드, 전략펀드 및 글로벌리그펀드, 예술산업 금융 등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한다(0.3 → 0.5조원). 또한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을 강화하고,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을 2배 수준 확대한다(100 → 200억원). AI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1,200명)하고, 교육과정 융합운영과 일괄 통합공고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AI 장르별 제작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업계 AI 확산을 가속화한다(17 → 150편).

📌 기초예술 지원 강화로 제2의 토니상·노벨문학상 적극 발굴

대형공연장 임차-제작-공연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12편), 해외시범공연(13편) 지원사업도 발굴하여 K-뮤지컬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집필-번역-출판 전주기 문학 해외진출 패키지 사업(10편)도 신설하여 해외 독자들에게 한국 문학을 널리 알린다. 또한 청년 창작지원 사업도 신설하여 3,000명의 청년 창작자에게 연간 900만원을 지원한다(180억원). 예술인 복지금고 신설(50억원) 등을 통해 예술인 복지도 강화한다.

📌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

산재된 해외문화 기관과 사업을 통폐합하여 「국외 문화수출거점+협업·연계」를 통해 K-컬처 글로벌 무대를 확산한다. 아시아 거점 베트남에 코리아센터를 신축(90억원)하고, 통합형 허브를 확대(6 → 11개소) 하여 세계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문화기관을 거점기지화한다.

2) 한류연계 붐업 (2.3 → 3.2조원)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 지역관광 확충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관광 홍보 국가를 확대(20 → 25개국) 하고 K-관광패스를 신설하여 교통과 입장료를 할인하며, 맞춤형 AI 안내 서비스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20개 지자체 여행비의 50%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하고, 여행가는달 확대(연 2 → 3회), 글로벌 관광특구 2개소도 지원한다.

㉮ 생산-가공-물류-홍보 지원을 통해 K-푸드 수출 확대

수출바우처 확대(460 → 878개사), 융자 지원 강화(0.6 → 0.7조원), 복합 거점형 물류센터(50억원) 및 해외 모방품 대응(7개소)을 강화한다.

㉮ 벨류체인별 지원과 생태계 강화로 뷰티, 제약, 의료 수출 활성화

화장품 제조원료 국산화(50개사) 지원을 신설하고, 안전성평가 컨설팅 제공(1,200개사)을 통해 생산 역량을 강화한다. 컨설팅 및 마케팅 등 글로벌 진출 통합 프로그램(225억원)을 신설하여 판매 및 유통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뷰티 해외 공동물류기지를 미국에 신규 구축(1개소)하고, 플래그십 스토어도 2배 확대(4→8개소)하여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한다. 제약과 의료 분야에서는 임상3상 특화펀드(0.2조원)를 조성하여 후기 임상 단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바이오시밀러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406 → 295일)하여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3) 문화향유 (0.6 → 0.7조원)

☞ 취약계층 및 청년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단가를 1인당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연령에 대해서는 추가 1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문화패스 장르를 영화, 도서로 확대하고, 지원연령도 19세에서 20세로 상향한다. 지역 격차를 고려하여, 비수도권 청년들에 대해서는 5만원 추가지원하여 지역간 격차도 완화한다.

☞ 지방 공연과 전시 순회 대폭 확대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수한 공연과 전시 지방순회 기회를 400회에서 1,200회로 약 3배 수준 확대하여 지역에서도 우수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2.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2-1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전방위 지원

1) 거점국립대

지역전략산업 연계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우선, 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혁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신설(0.4 → 0.9조원)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 특화 분야 집중육성, 지역 혁신 허브화를 중점 지원한다. 첫째, 거점국립대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확대(1,992 → 2,622억원)하여, 학사 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과 학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거점국립대별 집중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학부-대학원-연구소까지 정책 패키지를 지원(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1,200억원 등)하고, 과기원·출연연·기업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셋째, 거점국립대가 지역혁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의 교육·연구 협업 및 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지역혁신허브화 인센티브 1,200억원 등)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사립대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하여 각 대학이 보유한 자원과 강점을 살린 특성화(850억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한, RISE 체계를 통한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2.0 → 2.1조원)하고 인센티브를 성과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계획 및 전략산업과 발맞추어 대학 재정지원이 거점국립대부터 국·사립대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편람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타운영계획

2) 전략산업

📌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

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도출하여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 등을 특화 지원한다. 동남권의 경우 조선·방산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중소조선사의 합정 MRO 역량 강화 및 특화 클러스터 조성(150억원), 조선산업 인력양성 및 AI 선박 실증(62억원) 등을 지원한다.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서남권은 AI 기반 분산형 전력망 산업 육성(2,171억원) 및 K-그리드 인재·창업(245억원) 등을 지원한다. 대경권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577억원)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개발·실증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중부권에 대해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후공정 테스트베드(25억원), 첨단소재 AX 플랫폼(22억원) 등을 구축하는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다.

📌 지역산업 기반조성

비수도권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규모를 2025년 2,251억원에서 2026년 2,553억원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기업투자 유치가 시급한 균형발전 하위지역 투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가 현재 투자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에서 기업당·투자건당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입지투자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균형발전 하위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 및 균형발전 하위지역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초광역권 지원 강화

5극 3특 구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권 계정 신설을 추진 중이며,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 및 자원 공동활용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초광역권 사업을 발굴·구체화할 계획이다.

3) 생활여건

☞ 의료

의료서비스 공백 최소화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2025년) 0.9조원 → (2026년) 1.2조원으로 지속 확대한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0.3조원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진료효율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진료시스템 구축비용 142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운영비 한시지원을 연장하고 (2025년) 621억원 → (2026년) 791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개선을 위하여 1,000억 규모의 저리 용자를 지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91억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 교통·도시

지역간 연결성 개선을 위해 도로 및 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 확충도 지속해나간다. 특히,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남부내륙철도 등 고속, 일반철도망 구축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GTX B·C, 부산-양산-울산 광역 철도 등 권역별 지방 광역철도가 신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

한편, 주요 교통시설 확충과 함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노후화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지적된 주요 국가 기간 교통시설에 대한 시설개량·보수도 지속한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지적된 전국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량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조류충돌 예방 시스템,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도입 등 새로운 안전시설도 추가 확충해나간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 나간다. 국가균형발전 및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간 국정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4) 농어촌

㉮ 정주여건 개선

인구감소지역 군 대상 공모를 통해 월 15만원 수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0개군, 2,341억원)을 추진한다. 생활·영농쓰레기 수거(68억원) 및 해양폐기물 처리비용(527억원)을 지원하는 국토 대청소 사업을 통해 농어촌 환경 개선하는 한편, 난개발된 농어촌을 쾌적한 환경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확대(118개소, 1,045억원 → 133개소, 1,519억원) 추진한다.

㉮ 소득안정

농어촌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안정보험과 직불금을 확대하여 농어가 소득망을 확충한다. 수입안정보험은 (2025년) 15개 → (2026년) 20개로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은 (2025년) 3조 3,586억원 → (2026년) 3조 4,409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 소비촉진

농수산식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직장인, 청년, 어린이의 식사를 지원한다.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직장인들의 식사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아침밥 지원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를 (2025년) 450만식 → (2026년) 540만식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 과일간식’을 통해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으로 주 1회 과일 간식을 지급한다.

2-2 저출생·고령화 대응

1) 저출생 반등(32.8 → 36.0조원)

☞ 양육부담 완화

합계출산율 반등을 유지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1세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연령을 확대할 때 2017년생 아동이 연중 지급개시와 지급중단을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아동은 연중 지급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 대상 기저귀와 분유 바우처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까지로 확대한다.

☞ 아이돌봄 확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야간 할증요금을 전액 지급한다.

☞ 일·가정 양립

저출생 반등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주 10시간 단축까지는 250만원으로, 주 1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60만원으로 인상해 상한액까지는 임금감소분을 100% 보전한다.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규모를 인당 1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한다. 또한, 대체인력지원금 사후지급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 복귀 후 업무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도 1개월까지 추가 보장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서정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 4.5일제 도입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일·생활 균형을 촉진한다.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을 단계별로 지원(부분도입 인당 월 20만원, 전면도입 인당 월 40만원)하고, 주 4.5일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시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 주거 지원

신혼 및 육아기 부부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3.1만호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인근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육아친화플랫폼을 신규 10개소 조성한다.

〈 저출생 대응 예산 주요 변동 내역 〉

(단위: 억원)

구분	'25년	'26년	비고
아동수당	19,588	24,822	지급대상 7세 → 8세 이하 확대
아이돌봄	4,750	5,978	중위소득 200 → 250%, 돌봄시간 확대
유아 단계적무상교육·보육	— (예비비 1,289)	4,703	지급대상 5세 → 4~5세로 확대
모성보호육아지원	40,225	40,728	육아기근로지원금 220 → 250만원 상향

2) 미래세대(4.2 → 7.1조원)

📌 자산형성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월 납입액(50만원 한도)의 일반형6% 또는 우대형12%의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대비 만기는 2년 줄이고(5년 → 3년),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은 높여(3~4.7% → 6%/12%) 혜택을 대폭 강화하였다. 일반형 가입자는 만기 시 최대 약 2,080만원(정부기여금 108만원),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및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시 최대 약 2,200만원(정부기여금 216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미래세대 지원 주요 변동 내역 〉

(단위: 억원)

구분	'25년	'26년	비고
신규청년미래적금	-	7,446	월 납입한도 50만원, 정부 매칭 6/1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72	9,080	비수도권 취업청년 근속 인센티브(894억원)
청년월세지원	777	1,300	신규 6만명, 계속 12.7만명 지원

3) 고령화 대응(25.6 → 27.3조원)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6.3월 본사업 시행)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을 71억원에서 91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든 지방정부에 최대 10억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며, 지방정부의 전담 공무원 인건비도 한시적으로 보조한다.

노인일자리도 110만개에서 5.4만개 확대하여 노인인구의 10% 이상으로 지원한다. 민간 부문에서의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령자통합장려금을 신설하여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비수도권은 월 10만원 추가 지급한다. 한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도 월 34.3만원에서 34.9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 등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0면서정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기초연금
2026년도 예산 및
00면서정

〈고령화 대응 예산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5년	'26년	비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71	914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노인일자리	21,847	23,851	노인일자리 110 → 115만개 확대
고령자통합장려금	-	107	월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계속고용시)
기초연금	218,146	231,378	기초연금 月 34.3 → 34.9만원 인상

2-3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1) 저소득층(21.0 → 23.1조원)

□ 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5년 20.4조원에서 2026년 22.4조원으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고, 이와 관련된 급여액과 수급 기준도 상향한다

먼저 생계급여는 급여기준액이 6.51% 증가하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가 월 195.1만원에서 207.8만원으로 인상되고, 월 최대 지급액이 최초로 2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론 월 76.5만원에서 82.1만원으로 7.20% 인상된다. 청년들의 자활 의지 제고를 위해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액과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은 8.5조원에서 9.2조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유일하게 적용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완전 폐지되고 요양병원 간병비가 신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예산은 8.7조원에서 9.8조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가 4.7%에서 11%로 상향되며 월 1.7만원에서 3.9만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76.8만원에서 86.0만원으로 9.2만원 인상되고 전체 평균 6%가 인상된다.

〈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원) 〉

구분		'25년	'26년	증가율	비고
■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6,097,773	6,494,738	+6.51%	
(1인 가구)		(2,392,013)	(2,564,238)	(+7.20%)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1,951,287	2,078,316	+6.51%	선정기준 = 월 최대급여액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2,439,109	2,597,895	+6.51%	부양비 완전폐지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2,926,931	3,117,474	+6.51%	기준임대료 4인 (1급지): 54.5 → 57.1만원/월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3,048,887	3,247,369	+6.51%	고교생 교육 활동지원비: 76.8 → 86.0만원

바우처

농식품바우처의 경우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신부, 영유아, 초중고생을 포함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청년층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만원에서 4인 가구 1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초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신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다자녀 기초수급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사용·저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초공용계획

☞ 보험료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월 최대 3.8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기존에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했으나, 2026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약 7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 장애인(6.8 → 7.4조원)

☞ 돌봄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인원을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한다. 도전적 행동이 심해 돌봄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을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4배 인상한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3,000원이었던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를 10% 증가시켜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도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개소 신설하여 그간 돌봄 사각지대였던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 소득·고용

고용 취약 계층인 장애인 대상 일자리를 3.4만명에서 3.6만명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여 장애인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도 75.6만명에서 81.1만명으로 늘려 장애인의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한다.

〈 장애인 지원 주요 변동 내역 〉

(단위: 억원)

구분	'25년	'26년	비고
발달장애인지원	4,030	4,880	주간활동서비스 확대(1.2 → 1.5만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 수당 인상(5 → 20만원/월)
장애인활동지원	25,323	28,164	가산급여 인상(3,000 → 3,300원/시간)
장애인일자리지원	2,345	2,546	장애인 일자리 확대(3.4 → 3.6만개)
장애아동가족지원	2,327	2,545	장애아동지원센터 신설(17개소)
장애인고용장려금	3,774	4,032	고용장려금 인원 확대(75.6 → 81.1만명)

3) 한부모

☞ 한부모 가족 양육 부담 경감

한부모 가족의 양육 환경 조성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월 23만원)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조손가족과 미혼모·부 등에 대한 추가양육비 지원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또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지원되는 생활보조금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 한부모 지원 예산 주요 변동 내역 〉

(단위: 억원)

	'25년	'26년	비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5,528	5,722	중위소득 63 → 65% 이하

4) 사각지대 해소(0.7 → 0.8조원)

☞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는 누구나 기본적인 생필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필품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센터)를 150개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누구나 최초 방문시에는 기본 생필품을 2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고, 2번 이상 방문 할 경우 복지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을 3,501억원에서 4,053억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단전·단수·연체 등 47종 행정정보를 통해 발굴한 위험가구 대상으로 AI콜을 발신하여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는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청년·청소년

가족의 주된 돌봄자가 청년인 가족돌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기돌봄비(연 200만원) 지원 대상을 기존 4개 시도에서 8개 시도로 확대된다.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사전 훈련 프로그램을 신규 3개소 지원하고 인문·문화 활동을 포함한 청소년 그룹 활동도 1,020팀 신규 지원한다.

☞ 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내실화를 위해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이를 위해 9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톱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신변 보호를 위한 안심 장비도 보급한다. 성평등가족부 출범에 맞춰 직장 내 성평등 개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한 예산 7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5) 심리안정

📌 자살예방정책 지원 강화

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 반전을 위해 전반적인 자살예방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핵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을 660여명에서 1,300여명으로 약 2배 확충한다.

또한, 자살유족에 대해 현장출동부터 법률, 일시주거, 특수청소, 행정 등을 지원하는 심리·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12개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 사각지대 해소 및 심리안정 지원 주요 변동 내역 〉

(단위: 억원)

	'25년	'26년	비고
신규그냥드림센터	-	73	필요한 사람에게 생필품 무료 지원
긴급복지	3,501	4,053	생계지원 대상 33.1 → 37.5만건 확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562	736	고위험군 치료비·사후관리 강화 등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6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4 민생경제 회복,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1) 민생회복(17.1 → 23.8조원)

☞ 서민금융 확대

저소득·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적극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했던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폐지하고,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을 신설하여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2025년 6.0조원 → 2026년 6.2조원)할 계획이다. 성격이 유사한 기존 햇살론 상품을 통·폐합하여 상품체계를 단순화하고 상품 취급 창구를 확대하여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한다. 나아가 저소득·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 교통비 지원

청년, 어르신, 다자녀 가구 등 일반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지하철·버스)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한다. GTX·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10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무제한 이용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한 교통요금 일부를 정률로 환급하는 기존 K패스는 계속 지원되며,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정률 지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주거 지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주택을 향후 5년간 110만호 공급한다. 특히, 내년부터 공적주택 공급 관리기준을 기존 '사업승인'에서 '착공'으로 전환하여 현장의 공급 체감도를 높이고, 연간 공급물량을 2025년 18.1만호→2026년 19.4만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공주택 품질 제고도 병행한다. 2026년부터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3개소 조성하고, 초등학교 인근에는 신혼·육아기 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플랫폼도 신규 10개소 조성한다. 고령층의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돌봄서비스가 강화된 고령자친화주택도 2025년 3,000호 → 2026년 3,5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위: 억원)

사업명	'25년	'26년	비고
■ 햇살론 특례·유스	3,424	4,797	서민금융 공급규모 6.0 → 6.2조원
■ 대중교통비 환급	2,375	5,580	정액패스 신설(일반 6.2 청년등 5.5만원)
■ 공적주택 사업군	165,170	227,701	공적주택 공급 18.1 → 19.4만호

2) 소상공인

☞ 경영안정·재기지원

소상공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1.04억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 대상으로 공과금·보험료·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한다(2026년 5,790억원).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위기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확대(2,450 → 3,056억원)한다. 특히,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600만원(기존 400만원)까지 늘리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전직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 지급인원도 확대한다(1.0 → 1.2만명, 인당 100~120만원 지급).

☞ 매출신장·경쟁력 강화

2026년 총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국비 보조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상향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4.5조원 발행하여 이용 편의성을 강화한다(2026년 4,580억원).

나아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지원도 대폭 신설·확대한다.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선정 후 해외진출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 신설(95억원), AI 교육부터 상품화까지 지원하는 사업(144억원)을 신설하고,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판로지원 참여인원을 확대한다(150억원 → 210억원).

3) 사회연대경제(0.1 → 0.2조원)

📌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성장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사회적기업 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창업지원을 신설(300억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최대 3년간 월 50~90만원)을 신설(321억원)하여 취약계층 고용창출 및 초기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판로플랫폼 개선, 맞춤형 스탭업 지원(초기경영지원-사업모델 고도화-규모화), 융자지원 신설 등 판로·경영·자금지원도 강화(+71억원)한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137억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시범사업을 도입(50억원)하여 사회성과 창출 유인을 제고한다.

📌 협동조합 등 성장지원

우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등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실시하고,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약 단계에 있는 경제성 있는 유망 협동조합 30개사를 대상으로 진단·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우수 협동조합 27개사에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6년 신규로 지정되는 마을기업 130개사를 대상으로 5천만원의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목 공정경제 뒷받침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신속화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조사·심의 인력을 대폭 증원(본부 +117명, 소속 +50명)한다. 또한, 다크패턴, 허위·과장광고 등 온라인 불공정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온라인 불공정행위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2026년 ISP 수립비 2억원).

(단위: 억원)

사업명	'25년	'26년	비고
■ 사회적기업 지원	284	1,180	창업자금 지원(500팀), 지역사회 문제해결
■ 마을기업 육성사업	17	53	마을기업 130개선발, 사업화자금 지원

2-5 산재예방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

1) 안전한 사업장(1.3 → 1.5조원)

목 예방투자 확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재기금 예방 사업을 대폭 확대(1.3 → 1.5조원)한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사업장·건설현장 등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지원을 강화(1.1 → 1.7만개소)하고,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한다. 재정여력이 취약한 사업장들이 산재예방시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금도 4,588억에서 5,388억으로 늘린다. 또한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물량도 확대(3.35 → 3.5만개소)한다. 한편,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신설(10곳, 143억)하여 현장 밀착형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 안전점검 강화

역량·경험이 있는 민간·공공분야 퇴직자, 노사단체 소속 인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1천명)하여 주요 업종(제조·건설·조선업 등) 대상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산재위험 신고시 포상(고의적인 법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등)하는 국민참여형 포상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해 500인 이상 기업 대상으로 재해현황·재발방지 대책·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 안전보건 투자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 추진한다.

2) 권익보장(2.3 → 2.8조원)

📌 취약노동자 보호

임금체불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노동자의 생계보장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증가추세였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확대(3 → 6개월)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고용개선장려금(50~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최대 월 45만원)을 신설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을 확대(+700명)하는 등 장애인들의 노동현장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확충(+10개소)하여, 다국어 상담, 한국어 교육을 수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현지 적응을 지원한다.

📌 근로복지 증진

일하는 근로자 누구나 직장·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주 10시간, 통상임금 100%)으로 높이고, 출산·배우자출산·유사산·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단가도 각각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사후지급제도를 폐지하여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주4.5일제 시범사업 도입(월 20~50만원 장려금 지급), 육아기 10시출근제(0.2만명) 신설 등을 통해 자발적 일·생활 균형을 촉진한다.

☞ 근로감독 강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한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2,000명)하여,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국민의 노동법 질문에 24시간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 등 행정서비스까지 제공하는 AI노동법 상담 시스템도 구축한다.

3) 고용안전망(12.4 → 13.3조원)

☞ 구직지원

고용취약계층의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청년 구직자들 대상 생계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여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의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30.5 → 35.0만명)한다. 또한 50세 이상 중장년이 구인난 업종(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등)에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한다.

☞ 실업자 보호

비자발적 이직자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의 지급단가를 높이고(+2.9%), 지원 대상은 161.1만명에서 163.5만명으로 늘린다. 또한,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확대(0.3 → 0.4만명)하여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3.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 · 안보

3-1 재난 예방 및 민생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

1) 재해 예측 · 예방 · 대응 (3.7 → 5.4조원)

AI ·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해 · 재난 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고, 호우 · 산불 · 화재 · 싱크홀 등 빈발 재난에 대비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재해예방 인프라 설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그리고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재난안전 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안전펀드 설치 등 사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재난 예측 역량 강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한국형 기상모델을 신규 개발(27억원)하고,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해 수위관측소를 확대 구축한다(+40개소). 또한,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드론과 재난안전상황실을 연계하는 드론 기반 재난 대응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34억원).

📌 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

① 호우 대응

펌프장 설치, 지방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등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대폭 확대(0.9 → 1.1조원)하고, 국가하천 전 구간에 지능형 CCTV를 설치(+1,000개소)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호우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상습침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한다(21만개).

② 산불 · 화재 대응

지능형 산불감시 카메라를 추가 설치(+120대)하여 '29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소방력 도착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불 비상소화장치를 산림인접마을

대상으로 확충한다(+456개소). 아울러, 중용량포 방사시스템(4대)과 화재 연기감지기(50만 세대)를 신규 도입하여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③ 싱크홀 대응 및 재난 대응 인력 처우 개선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반침하 사전 탐지를 위해 싱크홀 지반탐사 장비를 추가 도입한다(+19대). 또한, 재난 대응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소방 등 고위험 직종 종사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월 7 → 8만원)하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격무·정근 가산금을 신설한다(각 월 5만원).

☞ 재난 복구 및 관리체계 강화

재난 현장에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규 구축하여 피해 접수부터 지원까지 일괄 처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재난안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안전펀드를 신규 조성(200억원)하고, 민간 자본을 연계한 투자 기반을 구축한다.

2) 민생범죄 대응 (0.2 → 0.3조원)

기술 발전에 따라 범죄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현장 대응 중심의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 전반의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한다.

☞ 현장 대응 수사역량 강화

치안공백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26년 신입 경찰 인력을 전년 대비 1,600명 증원한 6,400명 규모로 대폭 충원하고, 저위험권총 및 차세대 외근조끼 등 현장 장비 보강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 인력과 장비의 양적·질적 기반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 인프라 고도화에도 투자를 이어간다. CCTV 영상 분석, AI 기반 마약 채널 첩보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지능화·비대면화되는 범죄에 대한 탐지·분석 역량을 제고하고, 수사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보완한다. 법무부-경찰 간 스토킹 위치추적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경찰 보이스포싱 통합대응단과 검찰 사칭 보이스포싱 확인 시스템(짚센터) 기능 보강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역량을 높인다.

📌 피해자보호

범죄 피해 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취약 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자녀·손자 사망시 월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보장하는 등 유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5주 이상 상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를 새롭게 도입하여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야간·주말 운영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과 지원 실효성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 권리구제

형사사건에서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인을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회생법원 추가 신설 및 통합도산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 기반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3-2 군 자긍심 고취, 첨단군대 육성

2026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65.9조원으로 2025년 61.2조원 대비 7.5% 증가한 규모이다. 전력운영비 규모는 45.9조원으로 2025년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군 간부 처우 개선 및 장병 복무여건 제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탄비 규모는 20.0조원으로 2025년 17.8조원 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AI·드론·로봇 등 최첨단 무기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첨단전력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

1) 군 장병 복지 향상

④ 군 간부 처우 개선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공통 보수인상률(26년 +3.5%) 외에도 추가 보수인상률(최대 +3.1%)을 적용하여 경제적 보상을 강화한다. 단기복무장려수당(부사관 대상)을 단기복무장려금(장교 대상) 제도와 통합하여, 부사관 임관을 확정지을 경우 임관 전이라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지원대상을 현재 현역모집 부사관에서 민간획득 부사관과 학군부사관(RNTC)까지 확대하고,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학사 졸업여부에 따라 장려금 지원여부가 결정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졸업 후 학사사관을 지원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초급간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숙련된 군 인적자원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임관 시 장기복무 확정자 및 단기 복무에서 장기 복무로 전환한 간부이며, 3년간 월 30만원을 한도로 적금 납입금의 100%를 매칭 지원(1인당 최대 1,080만원)한다.

군 당직근무비를 각각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소령 대상 직책수행경비를 신설한다(월 3~5만원). 부대 지휘 및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전투역량강화비를 전년대비 증액(+3.2%)하고, 부대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의 지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주임원사활동비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한다.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간부 대상으로는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격년 주기, 20만원)을 추진한다.

④ 장병 복무여건 제고

미래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복무여건 제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군 급식은 3년간 동결되었던 급식비 단가를 인상(1일 13천원 → 14천원)한다. 지역상생장병특식도 지역상생자율특식으로 확대 개편하여, 연 4회 특식 제공에 더해 장병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 자율적 증·부식을 제공함으로써 장병 급식 만족도 제고와 군부대 인근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장병들의 동계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투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성·기능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신형 전투피복 4종을 전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장병에게로 확대 보급한다. 장병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 지원과 전투력 재충전을 위해 부대 내 낡은 운동기구를 대대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이사비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사다리차 비용도 신규 지원(1회 36만원)하여 잦은 이사로 인한 군 간부들의 이사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2) 첨단 기반 전력 증강

📌 첨단전력 등 전투능력 보강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러·우 전쟁을 계기로 확인된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통·재래식 무기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한편, AI(정찰용무인시스템 등)·드론(중거리자폭드론 등)·로봇(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 등 최첨단 무기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1.7 → 3.0조원).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북 핵·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F-21(보라매), F-35A 2차, 장보고-III Batch-II 등),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대량응징보복능력(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등 무기체계 전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6.1조원 → 8.8조원).

3)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 보훈급여금 합리화 및 참전유공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해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월 45 → 49만원), 무공영예수당(월 51~53 → 55~57만원), 4·19혁명공로수당(월 46.1 → 50.1만원)을 전년 인상액(+3만원) 대비 1만원씩 추가 인상한다. 특히,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은 2022년 도입 이후

50%인 5만원을 인상하여 월 15만원씩 지급한다. 아울러 재해부상7급 군경에게도 부양가족수당(월 10만원)을 신규 지급(3.8천명)하고 홀로 계신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약 1.6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월 15만원씩 신규로 지급하여 보훈대상 유족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 보훈의료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가보훈대상자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의원급 등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20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제주권역에는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도 2026년 하반기부터 운영하여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중앙·대구·광주보훈병원 시설확충 및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구축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수원 보훈재활센터에 사이클 실내훈련장 및 노후 시설환경도 개선한다.

☞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광복회 등 16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전년대비 22억원 증액) 또한,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시군구 등 지역 보훈단체 회원에게 보훈문화 프로그램과 식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보훈단체 등이 입주한 지방보훈회관에 대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신축사업 9개소에 국비를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가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 문화 조성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의 해’ 및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범국민 참여 보훈 문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외 사적지 전수조사 및 보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사적지 탐방도 확대한다. 아울러 튀르키예 참전기념시설 건립, LA홍사단 옛본부 리모델링, 독립의 전당 등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체험공간을 구축하고 유엔참전국 교류·협력 활동도 지속 강화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3-3 전략적 외교·ODA로 국익 창출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기반 강화를 위해 ODA 예산은 5.4조원 수준으로 감축하고,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하였다.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외교 전략 수립, 공공외교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 예정이며, 해외동포 청년의 국내 유치·정착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도 신설하였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성장의 미래를 위한 철도·도로 등 분야별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1) 국민 중심의 실용외교

📌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전략 수립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새로운 외교전략 수립(9억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 사우스 등 새로운 협력 지역과의 경제, 인프라, 인적 교류 등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의 상생 발전 및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외교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최초 개최

2026년에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첫 번째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68억원)한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에너지·인프라·디지털·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외교 활성화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이미지 제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 확대(225 → 256억원)하였다.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와 예술 등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주요 외교계기와 연계한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이 직접 외교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7억원)하였으며, SNS, 온라인 플랫폼 등 최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책과 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차세대 동포 인재의 국내 유치 및 정착지원

해외 동포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학업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31억원)한다. 학업 지원(150명)은 등록금 50% 지원, 어학연수, 학업장려금 등을 제공하고, 취업 지원(250명)은 직업교육 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차세대 인재의 국내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	9	순증
■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69	68	△1.4
■ 공공문화외교	225	256	13.7
■ 재외동포 인재 유치·정착	-	31	순증

2) 국익 연계 실용적 ODA로 개편

☞ ODA 효율화 · 내실화 추진(6.6 → 5.4조원)

그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ODA 예산을 2022년 3.9조원에서 2025년 6.6조원으로 빠르게 확대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잠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우리나라의 ODA 지원실적은 39.4억불로 OECD DAC의 32개 회원국 중 13위를 기록하였다. 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6년 ODA 예산은 전년대비 18.7% 감소한 5.4조원 수준이다. 그간 우리 ODA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여, ODA 예산의 효율화 ·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재점검하고, 일시적으로 확대된 사업은 정상화한다. 저성과 · 집행부진 사업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에 재투자하고,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여 정비한다. 역량 있는 시행기관의 고성과 사업 위주로 사업을 지속 재편하여, 우리 ODA의 가시성 ·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

ODA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국익과 연계할 수 있는 실용적 ODA 사업은 확대하였다. 개도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개도국 산업인재의 국내 학위연수 및 직무실습을 지원하는 사업(68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철도차량 공급, 랜드마크 건설 등 양자 차관(1.4 → 1.6조원)을 확대한다. 개도국 산업 기반 조성 및 공급망 강화를 연계한 전략적 ODA를 확대한다. 핵심광물, 희소금속 기술협력(80→10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 기업 해외 진출, 문화 수출 등으로 연계되는 우리 강점 분야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한다.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 ODA 규모 〉	65,835	53,548	△18.7
■ 외교부 인도적 지원	6,775	3,415	△49.6
■ EDCF 민간·국제기구 협력 차관	7,752	2,731	△64.8
■ KOICA 개도국 기술인재 양성 지원	-	68	순증
■ KOICA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	127	320	151.6
■ EDCF 대개도국 차관	13,747	16,275	18.4

3)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

☞ 국민 공감 대북·통일정책 추진

국민주권정부로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대북·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관련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평화·통일·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교육과 지역맞춤형 평화·통일문화체험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통일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평화공존과 남북교류를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복합 플랫폼’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남북간 관계 개선에 대비한 남북협력기금 확대

공동성장의 미래를 위한 철도·도로 등 분야별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산림·환경협력 사업 등에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견인하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1편 01면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심리안정지원·의료지원·안부확인·지역 소모임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지원, 교육지원금 등을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 평화통일기반 조성	136	136	-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2	130	6,500
■ 통일교육 추진	141	141	-
■ 남북협력기금	7,981	10,001	25.3
■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526	551	4.8

0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원)

구분	'25년 본예산 (A)	'26년 본예산 (B)	증감 (B-A)	증감율
총지출	673.3	727.9	54.6	8.1%
1. 보건·복지·고용	248.7	269.1	20.4	8.2%
2. 교육	98.5	99.9	1.5	1.5%
3. 문화·체육·관광	8.8	9.6	0.9	9.7%
4. 환경	13.0	13.9	0.9	7.3%
5. R&D	29.6	35.5	5.9	19.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31.8	3.6	12.7%
7. SOC	25.4	27.7	2.3	9.1%
8. 농림·수산·식품	25.9	28.0	2.1	8.3%
9. 국방	61.2	65.9	4.6	7.5%
10. 외교·통일	7.7	7.0	△0.7	△8.8%
11. 공공질서·안전	25.0	27.3	2.3	9.2%
12. 일반·지방행정	110.7	121.4	10.7	9.7%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초운영계획

20 **나라살림**
26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6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1. 보건·복지·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체육·관광 분야
4. 환경 분야
5. R&D 분야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7. SOC 분야
8. 농림·수산·식품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01

보건·복지·고용 분야



1-1 재정지원 방향

- 2026년 보건·복지·고용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9.1조원이며, 총지출 대비 비중이 37% 수준으로 12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촘촘하고 두툼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양육부담 경감 등 저출생 반등 공고화 및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한다.

기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기초생활수급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고, 4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도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초수급 청년들의 근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대상연령을 만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 금액도 늘린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약 74만명을 대상을 월 최대 3.8만원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필품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센터)도 150개소 신설한다. 1차 방문시 2만원 한도의 생필품을 무료 제공하고 2차 방문시에는 복지 상담을 연계한다. 또한 AI 복지 상담콜 시범사업 추진 등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실업·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는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도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일자리도 3.4만개에서 3.6만개로 늘려 장애인들의 소득 활동을 돕는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1편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공유계획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늘리고, 조손가족 등에 대한 추가 양육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지역도 4개 시도에서 8개 시도로 확대한다.

☞ 양육부담, 돌봄, 일·가정양립, 주거 등 저출생 반등 투자 확대

저출생 반등 추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양육부담 완화, 돌봄, 일·가정양립, 주거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먼저, 아동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자녀·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저귀·분유 바우처의 지원요건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은 본인 부담금 5%를 추가로 지원한다. 한부모, 장애 가구 등 취약계층의 정부 지원시간을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신설한다.

육아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하고,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도 각각 최대 140만원, 60만원으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8만호에서 3.1만호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육아친화플랫폼을 신규 10개소 조성하는 등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속적 투자 확대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지원하고, 취약지 지방의료원에도 보조를 확대한다.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저리융자와 보조금 지원을 신설하고, 최종중 치료역량 확대를 위해 중증외상센터 2개소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수련환경 평가·인증체계 구축, 우수 수련병원 인센티브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전공의 수련환경을 지원하고, 지역외사와 시니어외사, 진료간호사(PA)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표 1-1]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2,487,466	2,691,271	8.2
기초생활보장	218,616	239,868	9.7
취약계층지원	58,322	65,063	11.6
공적연금	883,794	969,923	9.7
보훈	65,375	67,747	3.6
주택	355,911	383,986	7.9
사회복지일반	10,820	12,170	12.5
아동·보육	52,304	61,164	16.9
노인	274,413	290,922	6.0
성평등·청소년·가족	17,383	19,683	13.2
고용	235,801	249,693	5.9
노동	111,048	118,990	7.2
고용노동일반	6,899	8,261	19.7
보건의료	47,958	52,213	8.9
건강보험	141,277	143,241	1.4
식품의약품안전	7,544	8,348	10.6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 부문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 (2025년) 21조 8,616억원 → (2026년) 23조 9,868억원 (9.7% 증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선정 기준이자 생계급여 등 약 80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기준중위소득은 '26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다. 특히 수급자의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가중치 상향에 따라 전년 대비 7.20% 인상된다.

〈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원) 〉

구분	'25년	'26년	증가율	비고	
■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6,097,773	6,494,738	+6.51%		
(1인 가구)	(2,392,013)	(2,564,238)	(+7.20%)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1,951,287	2,078,316	+6.51%	선정기준 = 월 최대급여액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2,439,109	2,597,895	+6.51%	부양비 완전폐지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2,926,931	3,117,474	+6.51%	기준임대료 4인 (1급지): 54.5 → 57.1만원/월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3,048,887	3,247,369	+6.51%	고교생 교육 활동지원비: 76.8 → 86.0만원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95.1만원에서 207.8만원으로 월 12.1만원 증가한다. 또한, 기초수급

청년들의 근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의 공제 요건을 대상연령을 만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함과 동시에 공제 금액도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늘린다. 또한, 승합·화물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환산율을 하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의료급여는 부양비 제도의 완전폐지를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건강보험과 같이 중증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지역·가구별 4.7~11.08% 수준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6% 인상한다. 특히 고교 교육활동지원비는 76.8만원에서 86만원으로 인상한다.

[표 1-2]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부문 계	218,616	239,868	9.7	
생계급여	84,900	91,727	8.0	4인가구 급여액 6.51% 인상
의료급여	86,882	98,400	13.3	부양비 제도 폐지
주거급여	30,368	32,309	6.4	기준임대료 4.7~11.08% 인상
교육급여	1,652	1,711	3.6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 평균 6.0% 인상
긴급복지	3,501	4,053	15.8	생계지원 33.1만 → 37.5만건
자활사업	8,206	8,409	1.9	지원단가 2.9% 인상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서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초생활보장계획

☞ 취약계층지원 부문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설한다.
☞ (2025년) 5조 8,322억원 → (2026년) 6조 5,063억원 (11.6% 증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인원을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인력 전문수당을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4배 인상한다. 시간당 3,000원이었던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를 10% 증가시켜 최종중 장애인 대상 돌봄도 강화한다.

장애인 일자리 수를 3.4만개에서 3.6만개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개소 신설하여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한다.

[표 1-3] 취약계층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부문 계	58,322	65,063	11.6	
발달장애인지원	4,030	4,880	21.1	주간활동서비스 확대(1.2 → 1.5만명) 최종중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 수당 인상(5 → 20만원/월)
장애인활동지원	25,323	28,164	11.2	가산급여 인상 (3,000 → 3,300원/시간)
장애인일자리지원	2,345	2,546	8.6	장애인 일자리 확대 (3.4 → 3.6만개)
장애아동가족지원	2,327	2,545	9.4	장애아동지원센터 신설(17개소)

☞ 사회복지일반 부문

- 먹거리 안전망을 위한 그냥드림센터를 확충하고, 일상돌봄과 긴급돌봄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독사 대응 범위를 사회적 고립까지 넓히고 위기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 (2025년) 1조 820억원 → (2026년) 1조 2,170억원 (12.5% 증가)

제도를 모르거나 기존 복지제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도움 요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그냥드림센터를 본격적으로 신설한다. 2026년 15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은 사회적 고립으로 지원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을 1.7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사회로부터 단절된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질병·사고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돌봄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일상돌봄서비스는 월 6,000명에서 8,300명으로, 긴급돌봄사업은 월 10,000명에서 11,000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표 1-4] 사회복지일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부문 계	10,820	12,170	12.5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77	146	90.5	그냥드림센터 본격 확대 (150개소)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66	75	13.4	지원확대(1.7 → 3만명), 위기대응시스템 운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531	2,658	5.0	일상돌봄 8,300명/월 긴급돌봄 11,000명/월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아동·보육 부문

-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해 저출생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학대피해아동 등을 위한 가정위탁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미래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 (2025년) 5조 2,304억원 → (2026년) 6조 1,164억원 (16.9% 증가)

합계출산율 반등을 유지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1세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학대 피해 아동, 만 2세 이하 영아,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고립·은둔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고,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미래센터를 공모 절차를 거쳐 4개 시도에 추가로 설치한다.

[표 1-5] 아동·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부문 계	52,304	61,164	16.9	
아동수당	19,588	24,822	26.7	지급대상 연령 +1세 확대
가정위탁 지원·운영	57	68	18.8	전문아동보호비 지급 확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3	59	38.7	청년미래센터 4개소 신설

성평등·청소년·가족 부문

- 경력단절여성,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2025년) 1조 7,383원 → (2026년) 1조 9,683원 (13.2% 증가)

성별 인식격차와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취업·직장·일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 불균형 사례를 청취하고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청년세대 성별 균형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양육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을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하고,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폭력 피해 대응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신변 보호를 위한 장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폭력피해이주여성, 성매매피해)에 대한 개보수를 확대하여 폭력피해자의 주거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센터 수도 확대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적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맞벌이 가정, 한부모 등 취약가구의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완화한다.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 가구(가형)에 대해 야간 할증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0~2세 돌봄 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3~5세 돌봄 시 지급하는 유아돌봄수당(1,000원/시간)을 신설한다.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돌봄 시간은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을 2배로 확대(월 5 → 10만원), 조손가족 등에 대한 추가아동양육비도 확대(월 5 → 10만원)한다.

청소년 활동 기반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청소년국제교류 지원), 청소년 그룹 활동 지원(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보강을 확대한다.

한편, 고립·은둔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해 대상 발굴, 상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립·은둔 윈스톱 패키지’ 사업을 12개소에서 14개소로 2개소 확대하고, 자살·자해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 클리닉 전문 인력과 청소년1388 온라인 상담사를 확충한다

[표 1-6] 성평등·청소년·가족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부문 계	17,383	19,683	13.2	
아이돌봄지원	4,750	5,978	25.8	- 지원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200% → 250% 이하) - 취약계층 지원 시간 확대(960 → 1,080시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8	5,722	3.5	- 지원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63 → 65% 이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877	1,002	14.2	- 지역주도형 직업훈련(99억) - 경력단절예방지원 확대
청소년사회안정망 구축	718	744	3.6	-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 상담사 확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395	444	12.6	- 국립중앙·평창청소년 수련원 시설 보수(+27억) -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8억)

노인 부문

- 초고령사회 대응, 베이비붐 세대 노인 진입 등을 고려하여 노인 돌봄·소득지원 및 고령산업 육성에 중점 투자한다.
☞ (2025년) 27조 4,413억원 → (2026년) 29조 922억원 (6.0% 증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6.3월 본사업 시행)을 지원한다. 고령인구 비율, 의료취약지 여부 등에 따라 지방정부에 최대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전담 공무원 인건비도 한시적으로 보조한다.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110만개에서 5.4만개 확대하여 노인인구의 10% 이상으로 공급하고, 어르신들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도 37%에서 38.5%까지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도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령자통합장려금을 신설하여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적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초고령화 사회 적응을 위해 고령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에이지테크 실버산업 육성, 리빙랩 조성 등 고령친화산업 지원예산을 신설하고,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서비스도 신규 도입한다.

[표 1-7] 노인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부문 계	274,413	290,922	6.0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71	914	1,18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847	23,851	9.2	노인일자리 확대 (110 → 115만개)
치매환자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	19	순증	치매환자 대상 공공신탁 서비스 제공

주요 주택 부문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품질을 제고한다.
☞ (2025년) 35조 5,911억원 → (2026년) 38조 3,986억원 (7.9% 증가)

최근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적주택을 향후 5년간 110만호 공급한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목표 중 최대 수준이며, 특히 주택 공급 관리기준을 기존 '사업승인'에서 '착공'으로 전환하여 현장의 공급 체감도를 높였다. '26년 연간 공급물량은 전년 18.1만호 대비 확대된 19.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공주택 품질 제고도 병행한다. 2026년부터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3개소 조성하고, 초등학교 인근에는 신혼·육아기 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플랫폼도 신규 10개소 조성한다. 고령층의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돌봄서비스가 강화된 고령자친화주택도 전년 3,000호 대비 확대된 3,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한시사업으로 추진되던 월 20만원의 월세지원 사업을 상시사업으로 전환하여 매년 6만명에게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급여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를 4.7~+11.0% 상향하였으며, 지원가구 수도 139.2만호에서 142.5만호로 확대하였다.

[표 1-8] 주택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355,911	383,986	+7.9	
공적주택 사업군	165,170	227,701	37.9	18.1 → 19.4만호
청년월세지원	777	1,300	67.2	상시사업 전환

공적연금 부문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통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한다.
☞ (2025년) 88조 3,794억원 → (2026년) 96조 9,096억원 (9.7% 증가)

공적연금 부문에서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국민,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교직원 등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 지급을 지속한다.

연금제도의 성숙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물가상승 등에 따라 연금급여 지출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793 → 835만명으로 약 42만명 증가하여 급여지급액도 6.1조원 늘어날 전망이며, 직역연금인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제1부)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각각 72.1 → 74.5만명, 15.1 → 15.9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연금지출이 확대된다.

[표 1-9] 공적연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부문 계	883,794	969,096	9.7	
국민연금	492,904	554,360	12.5	793 → 835만명
공무원연금	282,530	300,514	6.4	72.1 → 74.5만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	64,010	67,123	4.9	15.1 → 15.9만명
군인연금	43,822	47,099	7.5	12.3 → 12.3만명

☞ 보호 부문

-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문화를 조성한다.
☞ (2025년) 6조 5,375억원 → (2026년) 6조 7,747억원 (3.6% 증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해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월 45 → 49만원) 등 수당도 4만원씩 인상한다. 아울러,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은 2022년 도입 이후 50%인 5만원을 인상하고 재해부상7급 군경에게도 부양가족수당(월 10만원)을 신규 지급(3.8천명)하고 홀로 계신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약 1.6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월 15만원씩 신규로 지급하여 보훈대상 유족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의원급 등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20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제주권역에는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도 2026년 하반기부터 운영하여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의 해’ 및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범국민 참여 보훈 문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광복회 등 16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전년대비 22억원 증액) 또한,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시군구 등 지역 보훈단체 회원에게 보훈문화 프로그램과 식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보훈단체 등이 입주한 지방보훈회관에 대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신축사업 9개소에 국비를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가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의 해’ 및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범국민 참여 보훈 문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외 사적지 전수조사 및 보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사적지 탐방도 확대한다. 아울러 튀르키예 참전기념시설 건립, LA홍사단 옛본무 리모델링, 독립의 전당 등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체험공간을 구축하고 유엔참전국 교류·협력 활동도 지속 강화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표 1-10] 보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고
부문 계	65,375	67,747	3.6	
보상금	35,628	37,175	2.7	- 기본 보상금 5% 인상 - 재해군경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참전명예수당 등	6,345	5,978	△5.8	- 월 4만원 인상 * 참전: 45만원 → 49만원 * 무공: 51~53만원 → 55~57만원 * 4·19: 46.1만원 → 50.1만원
생활조정수당	847	1,201	41.7	- 생계지원금 월 5만원 인상 - 저소득·고령 참전유공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월 15만원)
위탁병원 진료	2,491	2,695	8.2	- 위탁병원 확대(+200개소) - 준보훈병원 도입(2개소)
보훈병원진료	3,923	4,505	14.8	- 의료지원 규모 현실화
보훈단체운영 및 선 양활동등	343	380	15.9	-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확대
현충시설건립 · 관리	117	150	43.1	- 독립의전당 건립, 민간현충시설 지원 확대

건강보험·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도모한다.
 ☞ (2025년) 19조 6,780억원 → (2026년) 20조 3,801억원 (3.6%)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12.6 → 12.7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2.27 → 2.32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필수·지역의료 복원 및 고령화 시대 등 미래 대비를 위해 2024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9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의료서비스 공백 최소화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2025년 0.9조원에서 2026년 1.2조원으로 지속 확대한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0.3조원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진료효율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진료시스템 구축비용 142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운영비 한시지원을 연장하고 2025년 621억원에서 2026년 791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특히, 비수도권 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본보조금을 2025년 10억원에서 2026년 15억원으로 인상한다.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개선을 위하여 1,000억 규모의 저리 용자를 지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91억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중증외상센터 중 2개소를 지정하여 최중증 치료 거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수술실·입원실·헬기계류장 등 구축비용 154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 부문의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172억원을 반영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신기술·신개념 제품 심사 가이드라인과 차세대바이오의약품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을 2품목 확대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직접 공급하기 위해 30억원을 투입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화장품 분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9억원을 투자하여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유럽·중국 등 수출대상국들의 안전성평가 제도 운영에 대응하여 영세 업체 대상 컨설팅을 12개소에서 1,2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할랄 화장품 인증 또한 지원한다. 또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국내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도 지속할 계획이다.

[표 1-11] 건강보험·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합계	196,780	203,801	3.6	
건강보험	141,278	143,24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일반: 10.6 → 10.8조원) (기금: 2.00 → 1.9조원)
보건의료	47,958	52,213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764 → 3,458억원)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629 → 1,783억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28 → 424억원) -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664 → 826억원)
식품의약품 안전	7,544	8,348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심사지원 등 (286 → 349억원) - 식의약 규제과학혁신지원 강화 (5 → 114억원) -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45 → 75억원) -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21 → 50억원)

〈참고1〉 일자리 분야

참고1-1 재정지원 투자방향

- 2026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32.3조원으로 2025년 30.4조원 대비 6.2% 증가한 수준이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지역일자리 창출에 적극 투자하고, 산재·체불 등 취약근로자 권익을 두텁게 지원한다.
- ☞ (2025년) 30조 4,089억원 → (2026년) 32조 3,016억원 (6.2% 증가)

2026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세대·지역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일자리 창출,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및 주 4.5일제 도입 지원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임금체불·장애인·외국인 등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취약계층 구직지원, 실업자 보호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직업훈련 과정 자부담 도입 및 훈련장려금 재설계, 유사·중복 훈련과정 정비를 통해 훈련 품질을 제고하고 AI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였다. 일자리 사업 총량은 전년대비 6.2%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110 → 115만명)하여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훈련 사업은 재구조화를 통해 AI 산업전환에 대응한다. 내일배움카드 Top-tier AI 융복합 과정(1만명)·중소기업 AX 전환지원(600개소)·재직자 AI 특화과정(고급 3만명, 기초 10만명)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AI 전환 촉진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부과, 훈련장려금 재설계, 유사·중복 훈련 과정 정비도 병행하여 훈련 품질도 제고한다. 또한,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특화과정 신설(200개), 글로벌 과정 확대(60 → 100개) 등도 추진한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일·가정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육아지원 등 투자를 확대(+0.2조원)하면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 채택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상한을 최대 30만원 인상하여 월소득 250만원까지는 100% 임금감소분을 보전(주10시간 단축 220 → 250만원, 주10시간 초과 단축분 150 → 160만원)하고, 출산·배우자출산·유사산·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인상(월 210 → 220만원)한다.

고용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사업도 확대(+0.2조원, 전년대비 +11.7%)하고, 실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의 양질의 민간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75.6 → 81.1만명) 등 지원고용 및 재활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표 참고1-1] 일자리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304,089	323,016	6.2
직접일자리	36,824	39,854	8.2
직업훈련	22,628	22,548	△0.4
고용서비스	17,120	19,117	11.7
고용장려금	57,046	59,164	3.7
창업지원	28,762	30,143	4.8
실업소득 유지·지원	130,954	140,504	7.3
지원고용 및 재활	10,754	11,686	8.7

참고1-2 주요 지원내용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등 양적지표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업종간·세대간·지역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구인배수 등 고용창출 어려움 하락 및 노동생산성 정체, 인구구조 변화 등 다방면의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문 재정투자는 노동자 권익보장 및 산업전환 대응, 고용안전망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소기업 재직자·청년의 AI 활용을 집중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간에 존재하는 산업전환 대응역량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인상하고 주 4.5일제 도입 컨설팅과 장려금 신설을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을 촉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청년·은퇴계층 구직자의 원활한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안전망은 지속 확충하되, 허위·형식적 구직자보다 꼭 필요한 이들이 생계 걱정 없이 노동시장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 제도개편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투자

수도권·경력직 중심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저소득층·청년·은퇴계층 구직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충분한 취업·재도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 대상으로 2년 근속시 비수도권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600~720만원을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아울러, 뿌리산업 등 국가기간 전략 직업훈련과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이수한 50대 이상 은퇴계층이 뿌리산업, 운수·창고업 등 구인난 업종에 취업시 근속기간(6·12개월) 등을 고려하여 1년간 360만원을 지원하는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도 시범 도입한다.

한편, 관세·통상 등 산업변화로 인해 고용둔화를 겪고 있는 자치단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초광역, 광역-기초 및 기초간 지역연계 강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지역일자리 창출-정주지원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형태를 마련하고, 예기치 못한 고용변동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근로자 대상 패키지 지원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사회적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업형 사회문제 해결 모델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편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산재·체불·장애인 등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산재 예방의 사각지대인 영세사업장의 사고(추락·끼임·부딪힘 등) 예방을 위해 필수 안전시설·장비지원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안전 컨설팅 제공물량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조선업 등 중점 관리업종 사업장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는 ‘안전한 일터지킴이’(1천명) 사업을 신설하여 촘촘한 산재예방 및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증가추세였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근로지원인을 확대(+700명)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고용개선장려금(월 35~45만원, 50~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들의 노동현장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 직업훈련 재구조화를 통한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 강화

그간 훈련기관 간 경쟁 부재, 영세 훈련과정 난립 등으로 막대한 재정 투입 대비 취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던 내일배움카드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훈련 품질 제고와 훈련생 훈련 완수 및 취업 촉진을 유도한다. 먼저, 내일배움카드 중 국비가 100% 지원되는 전 과정에 자부담을 부과하여 훈련생의 훈련참여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훈련생의 신중한 선택을 통한 훈련기관 간 경쟁을 촉진한다. 동시에 훈련장려금 인상(11.6 → 20만원) 및 지역우대 특별훈련수당을 도입하고, 취약계층 자부담 면제 및 분할납부 등을 병행하여 자부담에 따른 훈련생 추가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한, 훈련 과정 간 유사·중복 과정도 대폭 정비하여 내일배움카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

상기 재구조화로 절감된 재원은 AI 산업전환 대응에 적극 재투자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선도기업 및 우수대학 등이 참여하는 Top-tier AI 융복합 과정을 포함하여 내일배움카드 내 AI 특화과정 신설을 통해 높은 수준의 AI 실무인재 양성(7만명)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한 AI 고급(3만명) 및 기초과정(10만명)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전반의 AI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민간능력개발주치의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AI 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AX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 4.5일제로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저출생 극복 및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는 누구나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일·육아 병행을 위한 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최대 30만원 인상하여 월소득 250만원까지는 100% 임금감소분을 보전한다(주10시간 단축 220 → 250만원, 주10시간 초과 단축분 150 → 160만원). 출산·배우자출산·유산사산·난임치료휴가 급여상한도 210 → 2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시 대체인력지원금 규모를 인당 월 120 → 130만원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대체인력지원금 사후지급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 복귀 후 업무인수인계 기간(1개월)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추가 보장한다. 또한 업무분담지원금 단가도 2배 인상(인당 월20 → 40만원)하여 육아휴직 등 업무 공백에 대한 동료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하여 기업 규모별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대체인력지원금은 140만원을 지급하고, 업무분담지원금은 단가를 3배 인상(20 → 60만원)한다. 또한 일·가정양립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신설하여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주4.5일제 도입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주4.5일제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일·생활 균형 촉진한다. 주4.5일제 도입 장려금을 단계별로 지원(부분도입 인당 월20만원, 전면도입 인당 월40만원)하고, 주4.5일제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도입에 따라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추가로 지급(인당 월60만원)한다. 이 경우에도 50인미만 영세사업장은 지원 단가를 추가 인상하여 주4.5일제 도입장려금 최대 50만원(부분도입 인당 월30만원, 전면도입 인당 월50만원), 신규채용 인건비는 80만원을 지원한다.

㉔ 고용안전망 강화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저소득·청년 구직자들 대상 생계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여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의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구직급여 지원단가도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상향하고 지원인원 역시 현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수급자의 단기 입·이직 증가로 인한 반복수급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안전망의 근간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 확보 및 지출 효율화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02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 2026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99.9조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한다. 이 중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71.7조원, △0.6조원)이 차지하며, 이를 제외하면 28.3조원으로 7.9%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육성 및 사립·전문대 특성화, 첨단분야 대학 교육혁신,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 교육세 배분구조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및 영유아 투자 확대

그간 교육세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내 3-5세 유치원 소요분이 먼저 배분되고, 나머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50%씩 배분되었다. 2026년부터는 이를 개편하여 고등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교육세 인상분(금융·보험업자 수익액 1조원 초과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0.5→1.0%))을 포함한 금융·보험업분 전액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우선 배분한다. 또한, 3-5세 대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0-5세 대상 영유아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교육세 중 고등교육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60%를 동 회계에 배분하여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등 지원을 확대한다.

📌 거점국립대-지방대학 육성 및 첨단분야 대학 교육혁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는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지방사립대·전문대는 특성화 및 RISE 체계를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우선 거점국립대 혁신을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신설(0.4→0.9조원)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 특화 분야 집중육성, 지역 혁신 허브화를 중점 지원한다. 또한 지방사립대·전문대 특성화를 위한 예산을 신설(사립대 850억원, 전문대 340억원)하고,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RISE 지원도 강화(2.0→2.1조원)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또한 첨단분야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혁신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부트캠프 44 → 88개교, 특성화대학 28 → 33개교)한다. 아울러 우수 이공계 학생의 취업·연구 및 박사후까지 전주기 성장 단계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트랙(85억원), 첨단분야 인턴십(41억원) 등 신규사업을 신설한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강화

기존 3-5세 대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0-5세 대상 영유아특별회계로 확대·개편(2026년 9.3조원)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특별회계는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5세)에 더하여 일반회계로 지원되어 왔던 영유아 보육사업(0-2세)을 통합한 것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도 4-5세 대상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경비 등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4,703억원)한다. 또한,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을 기존 1:3에서 1:2로 개선(3,262억원)하고, 오전 9시 이전 아침 돌봄도 지원(365억원)한다. 아울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안정적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0-2세 부모보육료를 3%, 기관보육료는 5%를 인상한다. 이에 더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영아반 교사 지원비를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유아반 교사는 월 36만원에서 38만원으로 2만원씩 인상한다.

[표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984,633	999,231	1.5
영유아및초중등교육	813,807	821,165	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2,794	716,687	△0.8
고등교육	157,600	162,965	3.4
평생·직업교육	11,588	13,425	15.8
교육일반	1,638	1,677	2.4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 2026년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82.1조원으로 전년대비 0.7조원, 0.9% 증가한다. 영유아특별회계(9.3조원)를 신설하여 기존 3-5세 대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0-5세 대상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틈새돌봄 등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국비 지원을 연장하고,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인상, 특수학교 설립 등 저소득층 및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 (2025년) 81조 3,807억원 → (2026년) 82조 1,165억원 (0.9% 증가)

「영유아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보육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원이 통합 운영된다. 2026년 영유아특별회계는 9.3조원(2025년 기준 +10.2%)으로 기존 3-5세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0-5세 대상으로 확대·개편한 재정지원체계이다. 동 회계에는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가 세입으로 전입될 계획이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2026년에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틈새돌봄 등 영유아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도 4-5세 대상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등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4,703억원)한다. 또한, 세심한 보살핌이 요구되는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을 기존 1:3에서 1:2로 개선하여 추가 교사 약 1.5만명의 채용을 지원(3,262억원)하고,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에 충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오전 9시 이전 아침돌봄 교사 수당도 지원(365억원)한다.

특히,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안정적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0-2세 부모보육료 3% 인상, 기관보육료 5%를 인상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단가를 확대하여 영아반 교사 지원비는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유아반 교사 지원비는 월 36만원에서 38만원으로 2만원씩 인상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타운영계획

한편,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6년 기준 71조 6,687억원으로, 세수여건 변동에 따라 '25년 본예산 72조 2,794억원 대비로는 0.8% 감소한 수준이나, '25년 2차 추경 70조 2,812억원 대비 약 2% 증가한다. 이를 통해 AI 디지털 교육지원, 유보통합, 인재양성 등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여, 필요 비용 중 47.5% 내에서 국비를 지원('26년 5,785억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6% 인상하고, 장애학생도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지원도 강화(한국교원대 +79억원, 부산대 +40억원)한다.

[표 2-2]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813,807	821,165	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2,794	716,687	△0.8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 (예비비1,289)	4,703	순증
영유아보육료 지원	32,400	36,635	13.1
고등학교 무상교육	- (예비비4,677)	5,785	순증
교육급여	1,652	1,711	3.6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31	150	383.9

고등교육 부문

- 2026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16.3조원으로 전년대비 0.5조원, 3.4% 증가한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집중 육성하고, RISE 체계를 통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강화한다. 또한 대학의 첨단분야 교육과정의 혁신과 이공계 학생의 취업·연구 및 박사후 과정까지 전주기 성장 단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 (2025년) 15조 7,600억원 → (2026년) 16조 2,965억원 (3.4% 증가)

우선, 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혁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신설(0.4 → 0.9조원)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 특화 분야 집중육성, 지역 혁신 허브화를 중점 지원한다. 첫째, 거점국립대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확대(1,992 → 2,622억원)하여, 학사 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과 학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거점국립대별 집중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학부-대학원-연구소까지 정책 패키지를 지원(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1,200억원 등)하고, 과기원·출연연·기업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셋째, 거점국립대가 지역혁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의 교육·연구 협업 및 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지역혁신허브화 인센티브 1,200억원 등)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사립대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하여 각 대학이 보유한 자원과 및 강점을 살린 특성화(850억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한, RISE 체계를 통한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2.0 → 2.1조원)하고 인센티브를 성과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계획 및 전략산업과 발맞추어 대학 재정지원이 거점국립대부터 국·사립대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이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실습 및 융복합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학부 단계의 단기 집중교육부터 전공 과정까지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분야(반도체·이차전지 등 → AI·로봇까지 확대) 및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연설문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공연계 계획

대상 학교를 대폭 확대(부트캠프 44 → 88개교, 특성화 대학 28 → 33개교)한다. 또한 AI 단과대학·전공 등을 설치·운영하는 AI 거점대학을 신설하여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300억원)한다.

이와 함께 이공계 분야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학부부터 박사후과정까지 이공계 우수 인재의 성장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핵심 인재의 안정적 성장과 국내 정착을 도모한다('26년 학부생 400명, 연 2천만원). 또한 우수 인재에 대해 글로벌 교육, 인턴십, 연구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설(81억원)하여, 취업 및 연구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그간 집행이 부진했던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다만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을 '25년 본예산 대비 최대 지원한도를 평균 4% 인상하고, 인문사회 우수장학금(신규 1,500 → 2,000명) 및 선취업후학습 장학금(신규 4,000 → 5,000명)을 확대하는 등 대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은 지속 강화한다.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157,600	162,965	3.4
국립대학 육성사업	4,243	8,736	105.9
대학혁신지원	7,961	8,192	2.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010	21,403	7.0
산학협력력 고도화 지원	1,827	2,625	43.7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3,050	51,161	△3.6
국립대학 시설확충	10,929	9,109	△16.7

평생·직업교육 부문

- 2026년 평생·직업교육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1,837억원, 15.8% 증가한다.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특성화 인센티브와 AI·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 선정사업을 신설한다. 한편, 한국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2025년) 1조 1,588억원 → (2026년) 1조 3,425억원 (15.8% 증가)

평생·직업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역량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전문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여 특성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 인센티브를 신설(+340억원)하고, 재학생·교직원·성인학습자 등이 AI 기초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육성(24개교)한다. 또한, 전문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신규로 지원(5개교)한다.

또한,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재외교육기관 지원을 확대(+107억원)한다. 특히, 재외교육기관에 교과용 도서와 한국어 학습자료를 지원(+12억원)해 재외동포의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해외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채택되도록 지원을 확대(+18억원)한다.

[표 2-4]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11,588	13,425	15.8
전문대학 혁신지원	5,555	5,907	6.3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828	935	12.9
해외 한국어 보급	193	213	10.4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연설문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초연계 계획

03

문화·체육·관광 분야



3-1 재정 지원 방안

- 2026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9.6조원으로 2025년 8.8조원보다 9.7% 증가하였다.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하여 K-컬처 확산 및 수출강화, 한류연계 관광활성화, 국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청년 예술창작자 지원을 신설하는 등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지원하고,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제도 개편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그리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지역관광활성화 투자를 확대한다. 우수선수에 대한 훈련여건을 개선하고, 경기참가지원을 강화하며, 어르신 스포츠프로그램 지원도 신설한다.

📌 콘텐츠 수출 등을 중심으로 K-컬처 확산 지원

정책금융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장르별 특징을 고려한 단계별 투자를 강화하며, 인재양성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한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여 한류기반 외래관광객 유치를 도모한다.

콘텐츠 정책금융은 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리그를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모태펀드는 문화계정(2,050 → 2,600억원), 영화계정(350 → 450억원), 전략펀드(150 → 650억원), 글로벌리그펀드(400 → 600억원)를 대폭 확대하여 기존 중소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중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등 투자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장르별로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OTT 특화제작지원(303 → 399억원) 확대로 IP 확보에 주력하고, 음악산업은 중소기업사 해외진출 지원산업을 신설(30억원)하여 제2의 BTS, 블랙핑크가 빠른 시일 내에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연장 환경개선 사업(120억원)을 신설하여 공연장 부족에 따른 K-팝 지역 향유 애로를 해소한다.

콘텐츠 인재양성 사업은 장르별 산발적 지원체계를 통합 공고 및 운영 체계로 전환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인재양성 과정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특히 AI 특화아카데미(192억원)을 신설하여 AI 기술을 다양한 장르에 접목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류기반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과 영상박물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비(155억원) 및 K-팝 체험시설 조성(80억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아레나를 신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8억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 예술의 세계적 확산 및 예술인들의 창작기반 확충

국내 뮤지컬 및 문학작품의 토니상,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창작 뮤지컬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제작 → 공연 →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을 추진하고, 문학작품의 집필, 번역, 출판을 통합하여 지원한다. 그리고 청년창작자의 순수 창작활동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2년간 시범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타 사업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중소형 공연 중심의 뮤지컬 상영 지원 제도를 중대형 공연장(500석 이상, 4개소) 임차를 통한 제작과 공연 복합 지원(180억원) 및 해외 시범공연(20억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단계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외 창제작 인재들과의 교류 및 국제협업 프로젝트 지원(10억원)을 신설한다.

문학작품 해외진출 통합지원을 위해 창작기반 및 번역·현지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상주작가 지원(24 → 33억원)을 확대하고, 번역·현지화 지원을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의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고도화한다.

또한 청년 창작자의 순수 창작분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총 3천명의 청년창작에 대하여 9개월간 1인당 9백만원을 지원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편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역의 문화재단들과 협업하여 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 창작자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 통합문화이용권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제도 개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단가를 14 →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 및 생애전환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원을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문화예술향유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청소년(13-18세), 생애전환기(60-64세)에 대한 추가 지원은 사업시행(06년) 이후 연령별 차등지원을 최초로 도입한 사례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20세로 확대하고, 영화 관람을 허용하는 등 장르 확대를 통해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영화관람 횟수 제한을 통해 순수예술향유를 위한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도서구입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5만원 재정 지원을 통해 재원분담을 유도하고, 국비는 지역간 차등(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출판 생태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K-북 해외 진출 목표 시장과 장르를 다양화하여 권역별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도서를 연간 20종씩 선정하여 수출까지 통합 지원(10억원)한다. 또한 1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세계인쇄회의를 지원(5억원)하여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위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편, 웹소설 지식재산 유통 기반 강화를 위한 일러스트 제작 및 2차 콘텐츠 제작 지원을 신규로 지원(10억원)하고 전자책과 오디오북 제작 지원예산도 확대(30 → 45억원)해 디지털 독서 환경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서점에서의 독서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확대 지원한다. 주문 도서를 하루 한 번 순회 배송하는 공동수배송을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하고, 키오스크·무인도서 물품 보관함 등 스마트 장비 지원 규모(5 → 10억)를 늘린다. 또한,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 사업을 개편하여 기존 60곳에서 120곳으로 늘리고, 연령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도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신문 지원 예산을 확대(83 → 118억)하여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한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기획취재지원(5 → 10억), 디지털 전환 지원(3 → 20억), 취재장비 임대지원(17 → 31억)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신문이 지역 소식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또한, 기존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까지 넓혀 폭넓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27 → 29억)이다. 언론사 심층 보도,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을 통해 고품질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사업(14억)도 이어갈 계획이다.

박물관에 대해서는 국립충주박물관 개관준비(66억원) 예산을 신규 지원하여 지역거점 박물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한다. 또한 중앙박물관의 가족 관람객 수요를 고려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7억원) 예산을 신규 지원한다.

미술관에 대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명 작가의 우수한 콘텐츠를 지역에 순회 전시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우수작품 순회 전시(50억원)를 통해 지역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우수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표 3-1]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본예산)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87,888	96,420	9.7
문화예술	39,857	45,633	14.5
관광	13,477	14,804	9.8
체육	16,739	16,987	1.5
문화행정 일반	3,941	4,024	2.1
국가유산	13,874	14,971	7.9

3-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문화예술 부문

- 콘텐츠 수출 등을 중심으로 K-컬처 확산을 지원하고, 예술 확산 및 예술인들의 창작기반을 확충하고, 소득과 지역에 따른 문화 향유기회 격차를 완화한다.
콘텐츠 수출 등을 중심으로 K-컬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리그 펀드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장르별 특화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인재양성 체계를 개편하여 AI 기술 활용 중심으로 통합하고, 한류를 기반으로 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순수예술에 대한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술금융사업을 신설하여 융자,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뮤지컬과 문학의 해외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청년창작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그리고 소득과 지역에 따른 문화향유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통합 문화이용권은 청소년과 생애전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지원대상 연령을 상향조정한다.
☞ (2025년) 3조 9,857억원 → (2026년) 4조 5,633억원 (14.5% 증가)

콘텐츠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는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전략펀드(150 → 650억원)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2,950 → 4,300억원) 되었고, 문화산업보증(250 → 290억원), 이차보전(40 → 50억원)도 확대해 자금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전략펀드 이외에도 글로벌리그 펀드(400 → 600억원)도 강화하여 외국 운용사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여 해외투자가 용이하도록 투자하였다.

콘텐츠 장르별 특화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콘텐츠의 원천이 되고 있는 웹툰 번역 등 해외진출 지원(20 → 24억원)을 확대하고, 게임 해외쇼 진출도 강화(18 → 22억원) 하였으며, 글로벌 게임 현지화 지원사업(25억원)신설을 통해 K-게임의 세계화 전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에 대해서는 AI 제작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75억원)을 신설하여 콘텐츠 산업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한다. 청장년애니메이션 지원도 확대(95 → 101억원)하여 제2의 케데헌 제작을 도모한다.

영화 관련 지원 중예산영화제작,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 등 대중성 있는 영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독립영화 제작지원도 함께 확대하여 국가재정이 영화산업 발전에 균형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중예산영화제작 지원은 '25년 100억원에서 '26년 200억원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대중영화의 극장개봉작을 확대한다. 또한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30억원)을 통해 국가재정이 국제 협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독립영화 제작지원도 확대하여 (70 → 77억원) 작품성 있는 독립영화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원한다.

AI 제작지원은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범장르 지원(80 → 198억원) 뿐만 아니라 장르별 지원도 신설하여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영화는 영발기금에서 장단편 제작을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며(22억원)이다. 노동집약적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K-애니에 대한 AI 제작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10억원).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해외 K-콘텐츠 허브 구축을 실현한다. 우선, 세계 주요도시 내에 분산되어 있는 문화분야 센터들을 직접화하여, 기관 간 업무 협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거점형 인프라 구축 사업 중 하나인 베트남 코리아센터(2026~2029년)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 세계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해외센터를 직접화하는 'K-컬처 허브' 5개소를 신설하여 2030년까지 총 21개소의 거점기지를 구축한다. 또한, 공연, 전시, 체험 및 홍보가 융합된 고품격 해외홍보관인 '글로벌 K-존'을 6개 신설한다. 문화예술·관광·콘텐츠·뷰티·푸드 등 다양한 한류 사업들을 융합하여, 현지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재편한다.

순수예술에 대해서는 용자와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순수예술산업 생태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용자사업은 총 200억원 수준 반영하여, 예술업계의 고질적 자금난을 해소할 예정이며, 보증사업도 50억원(운영비 포함) 수준으로 신설하여 민간자금 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뮤지컬에 대해서는 토니상 수상을 계기로 국내의 중소 창작뮤지컬 스케일업 지원 트랙을 신설하여 4개의 중대형 공연장 임차, 제작 및 공연 지원(180억원), 해외시범공연(20억원), 글로벌 역량강화(10억원) 지원을 시작한다. 스케일업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시범공연을 통해 브로드웨이 등에서 K-뮤지컬 시대를 개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작자에 대해서는 지원제도를 신설(180억원)하여, 총 3천명 청년 창작자에 대해 월 1백만원씩 9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문화재단에서 청년 창작자들이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방비도 분담하여 청년 예술창작자 지원 제도에 대한 지방의 책임을 강화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도 신설하여 예술인들의 자생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원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는 '26년부터 다양한 공제사업을 추진하여 예술인들이 활동기간 중 적립한 금고를 기반으로 활동하지 않는 기간의 소득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며, 국가는 복지금고 출범에 일정 부분 기여하여 예술인들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또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확대(180 → 280억원)하여 예술인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문화예술기금의 융자사업으로서,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 중이며, '26년 확대된 예산은 전세자금 지원 강화(90 → 190억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세 자금은 직전년도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써,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소득, 연령, 지역에 따른 문화예술향유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예술 패스 제도를 개편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지원단가를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지원대상 연령을 19세에서 20세로 확대하여 사회초년기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대상 장르를 순수예술에서 상반기 영화, 하반기 도서를 추가하여 문화예술향유 저변을 확대한다.

수요측면 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서도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순회 공연 및 전시 횟수를 400회에서 1,200회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국립예술단체 등의 우수공연 관람기회를 확대하고, 문예회관 중심의 지역 공연 확산 계기를 마련한다.

지속 가능한 출판 생태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K-북 해외 진출 목표 시장과 장르를 다양화하여 권역별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도서를 연간 20종씩 선정하여 수출까지 통합 지원(10억원)한다. 또한 1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세계인쇄회의를 지원(5억원)하여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위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편, 웹소설 지식재산 유통 기반 강화를 위한 일러스트 제작 및 2차 콘텐츠 제작 지원을 신규로 지원(10억원)하고 전자책과 오디오북 제작 지원예산도 확대(30 → 45억원)해 디지털 독서 환경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서점에서의 독서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확대 지원한다. 주문 도서를 하루 한 번 순회 배송하는 공동수배송을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하고, 키오스크·무인도서 물품 보관함 등 스마트 장비 지원 규모(5 → 10억)를 늘린다. 또한,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 사업을 개편하여 기존 60곳에서 120곳으로 늘리고, 연령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도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신문 지원 예산을 확대(83 → 118억)하여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한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기획취재지원(5 → 10억), 디지털 전환 지원(3 → 20억), 취재장비 임대지원(17 → 31억)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신문이 지역 소식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또한, 기존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까지 넓혀 폭넓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27 → 29억)이다. 언론사 심층 보도,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을 통해 고품질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사업(14억)도 이어갈 계획이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박물관에 대해서는 국립충주박물관 개관준비(66억원) 예산을 신규 지원하여 지역거점 박물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한다. 또한 중앙박물관의 가족 관람객 수요를 고려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7억원) 예산을 신규 지원한다.

미술관에 대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명 작가의 우수한 콘텐츠를 지역에 순회 전시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우수작품 순회 전시(50억원)를 통해 지역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우수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표 3-2] 문화예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39,857	45,634	14.5
K-콘텐츠 펀드 출자	2,950	4,300	45.8
문화예술향유 지원	2,806	3,276	16.8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1,003	983	△1.9
문화예술 창작제작 거점 조성	580	988	70.3
공연예술진흥기반 구축	245	391	59.7
미술진흥기반구축	469	427	△9.0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400	505	26.3
국민문화활동 지원	274	238	△13.1
국제문화정책지원	210	184	△12.6
문화콘텐츠국제협력및수출기반조성	904	930	2.9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372	438	17.8
영화창제작 지원	217	409	88.5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745	894	20.1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	-	7	순증
국립현대미술관운영	504	662	31.3

관광 부문

- 최근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주목에 힘입어 외국인들의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향후 글로벌 관광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책역량을 다방면으로 집중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한국관광 홍보를 지속 강화하고, 교통·결제 등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내국인 관광객의 지역관광 유인 제고를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신설 등도 병행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모멘텀을 강화한다.
- ☞ (2025년) 1조 3,477억원 → (2026년) 1조 4,804억원 (9.8% 증가)

2026년은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과 더불어 한국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대국 도약을 위해 정책역량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외래관광객 대상 국내관광지 매력도 제고를 위한 글로벌 홍보를 집중 강화한다. 국내관광 홍보 대상 국가를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OTT 등과 협업하여 K-콘텐츠와 연계한 관광 홍보영상 제작 등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외래관광객의 국내관광 편의성 제고를 위해 AI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관광지, 숙박, 교통 등을 추천해주는 관광 안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일정기간(예: 5일권) 동안 교통, 관광지 입장 및 관광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외래객 대상 K-통합관광패스도 신설하여 외래객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 특색있는 음식 거리를 선정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과 접목하는 'K-푸드로드 사업'(25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당초 지자체 중심으로 조성하던 관광특구를 전 세계적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특구'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류 콘텐츠, 전통시장, 공연, 스포츠, 크루즈,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관광을 접목하여 한국관광 다양성을 지속 확대하고, 특색있는 지역별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충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외래객 유치 확대와 더불어 내국인의 여행·휴가도 적극 지원한다. 당초 연 2회 진행하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연 3회로 확대(96억원)하고, 숙박할인권 지원사업 내 섬·연박 여행시 높은 단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섬·연박 숙박할인권을 신규 도입하여 다양한 지역으로 관광수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국가와 기업, 근로자가 휴가지원비를 함께 적립하여 관광상품 등 구매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규모를 확대(6.5만명 → 10만명) 하고,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사용한 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일명 ‘반값여행’)’ 사업을 20개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사업 업종 대상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관광기금 용자를 총 6,441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관광기업 육성 펀드에 73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기존 일반 관광기업 육성과 더불어 지역관광, M&A, 관광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기업들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우수한 관광기업과 신규 벤처기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30억원)하였다.

[표 3-3] 관광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13,477	14,804	9.8
관광산업 융차지원	5,919	6,441	8.8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637	1,045	64.0
국내관광 역량강화	428	642	50.1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351	371	5.7
한국관광 해외광고	234	345	47.7
융합관광콘텐츠 활성화	279	325	16.3
MICE산업육성지원	244	258	5.7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186	204	9.7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131	143	8.7
문화관광축제지원	65	104	58.8

☞ 체육 부문

- 전 생애 맞춤형 스포츠 기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체육인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 및 체육인 복지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스포츠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직·간접 지원 확대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 (2025년)1조 6,739억원 → (2026년)1조 6,987억원 (1.5% 증가)

생활체육 분야는 전 생애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국민 맞춤형 스포츠 기회를 보장한다. 우선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어르신 100만명 대상 지역 인근에서 무료로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국민들이 맞춤형 체력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확대(75 → 101개소)한다. VR·AR을 활용한 스마트형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누구나 쉽게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스마트·장애인·시니어·유아형 국민체육센터를 30개소 신설한다. 노후화된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첨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전문체육 분야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예비국가훈련제도를 신설하여 국가대표 선발 전 기량있는 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천 선수촌 내에 메디컬체크를 신설하여 훈련을 병행하면서 주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은퇴선수 창업·인턴십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선수 출전 숙박비·식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태릉 선수촌 등 훈련환경 개선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25.8.1)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업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및 정보보완 시스템도 증액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맞춤형 스포츠 도시 설계가 가능하도록 용자·도시계획 설계·인프라·대회·산업육성까지 연계한 신규 '지역특화 스포츠 산업 거점'을 2개소 신설하였다. 또한, K-pop 공연 수요에 걸맞은 중·대형 스포츠 복합 아레나 건립을 신규 추진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용자, 펀드 등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규모로 지원하여, 영세 스포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중심의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시군구장애인체육회를 추가 설립(156 → 169개소)하여 지역 단위별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시간제로 운영중이던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에 월급제를 도입하여 장애인 국가대표의 안정적인 훈련지원을 돕는다. 또한 이천 선수촌 내 다목적 숙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여, 선수 및 방문객의 편의를 돕는다.

[표 3-4] 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16,739	16,987	1.5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	75	순증
국민체력인증	155	157	1.6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726	727	0.1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59	953	44.7
우수선수 양성지원	1,398	1,485	6.3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94	106	13.0
스포츠 산업 금융지원	303	403	33.0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447	495	10.7

📌 국가유산 부문

- 국가유산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훼손 등은 조속히 보수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여 K-컬처·관광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 또한 우리 국가유산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하여 국격을 제고한다.

☞ (2025년)1조 3,874억원 → (2026년)1조 4,971억원 (7.9% 증가)

기후변화 및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유산 보수정비·보존기반 구축을 확대 지원하고, 화재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방염포 비축 및 자동소화시설 등을 신규 지원한다.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등을 확충하기 위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211억원),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87억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109억원), 세계유산축전(55억원),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143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국가유산 채널 구축·운영(46억원), 세계유산 홍보 지원(31억원) 사업도 확대 지원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서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공운용계획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유치에 따라 차질없는 행사 개최지원을 위해 1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 센터 및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지원,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지원도 지속하여, 세계 속 우리 국가유산의 위상을 제고한다.

[표 3-5] 국가유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13,874	14,971	7.9
국가유산 보수정비	5,299	4,995	△5.8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	716	순증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460	623	35.4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335	519	55.0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	240	316	31.6

04

환경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 2026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7.3% 증가한 13.9조원이다.
탈탄소 녹색 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 안전인프라 확충, 사람과 환경의 공존사회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 추진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수송분야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 운수사업자 대상의 전기·수소버스 구매 용자, 재정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충전 인프라펀드,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 해소를 위한 전기차 안심 보험도 신설한다.

또한 차질 없는 탈플라스틱 정책 이행을 위해 지역축제, 카페,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 신속 조성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맨홀추락방지 시설(20.7만개) 설치도 신규 추진한다.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확대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강화한다.

또한 녹조 오염원 관리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간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개선도 가속화한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강원·영동지역 해수담수화 도입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지하수 저류댐 설계 및 관련 기술개발 사업 투자도 확대한다.

한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 사람 · 자연 ·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고 개발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한다. 훼손지 생태복원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항국가습지 복원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도 확대한다.

2025년 10월 24번째로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도 2025년 대비 확대한다.

[표 4-1] 환경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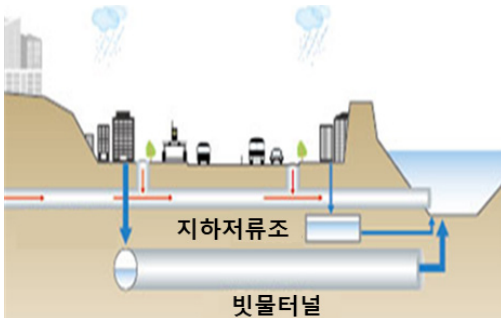
구분	2025년		2026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합계	129,717	129,238	139,136	7.3	7.7
물환경	51,223	52,670	58,007	13.2	10.1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43,612	39,406	43,289	△0.7	9.9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7,364	18,018	17,747	2.2	△1.5
자연환경	8,118	8,623	9,156	12.8	6.2
환경일반	5,671	6,791	6,339	11.8	△6.7
해양환경	3,729	3,729	4,598	23.3	23.3

4-2 부문별 주요지원내용

☒ 물환경 부문

생활 속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 예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 인프라의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을 2025년 6,748억원에서 2026년 8,338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강남역과 광화문에 설치비(199억원)를 지원한다. 더불어,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침수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20.7만개, 1,104억원) 설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도 2025년 796억원에서 2026년 820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도시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하수도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심도 빗물터널 개념도 〉



〈 대심도 빗물터널 사례(신월) 〉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례 〉



한편, 녹조 오염원의 원천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2025년 381억원에서 2026년 65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이 중 대규모 경작지 등 고농도 비점오염원을 집중관리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저감시설 설치사업(67억원)도 추진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은 2025년 1,167억원에서 2026년도 1,399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2025~2026년 준공예정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을 적기에 준공(808억원)하고, '25년부터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19억원)하여 가축분뇨처리에 에너지화까지 고려한 처리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



〈 가축분뇨 퇴비의 무단적치 〉



아울러, 처리 후 방류되는 수질을 보다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화처리시설의 효율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36억원)도 지원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2] 물환경 분야 주요 사업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2026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합계	18,515	19,521	21,926	18.4	12.3
하수관로정비 (자율, 지역지원)	16,264	17,177	19,052	17.1	10.9
면단위처리시설	796	796	820	3.0	3.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167	1,167	1,399	19.9	19.9
비점오염저감시설	288	381	655	127.4	71.9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 온실가스 감축설비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설비 교체·설치 사업을 지원한다.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이용설비, 탄소포집설비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 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특히 '26년부터 시행되는 제4기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기업의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다배출 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 투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EU CBAM 등 국제탄소규제 대상 기업에 대해 배출량 산정 컨설팅('26년 100개사),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탄소중립 국민실천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개선(안)도 추진한다. 예산을 '25년 대비 13.1%(21억원) 증액된 181억원으로 편성하고, 혜택 강화를 위해 단가 조정과 신규 항목도 추가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은 5개로 △흡수원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kw이하) 설치’(10,000원/회),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이며, '26년 1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택·주민공동시설을 대상으로한 라돈 측정·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도 계속 시행한다.

수송부문은 차종별 수요를 고려한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지원하고, 수소차는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등에서 강점을 가지는 대형 상용차 중심으로 보급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기술적·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법령(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불필요한 동물희생을 줄이고 신뢰성 높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생산을 위해 추진했던 동물대체시험시설을 2026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화학사고·테러 대응장비 확충(이동식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장비 3대 등)과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사고나 테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사업 】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



〈 화학안전 컨설팅(기술지원) 〉



〈 화학사고 대응장비(차량) 확충 〉

[표 4-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주요 사업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2026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합계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311	311	325	4.5	4.5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	-	-	80	순증	순증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617	617	659	6.7	6.7
유해화학물질 테러 · 사고대비	109	109	112	2.4	2.4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1면적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녹색금융 공급을 강화하여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하는 기업대상으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예산을 2025년 540억 원에서 2026년 665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녹색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녹색전환보증 예산을 2025년 1,420억 원 규모에서 2026년 1,5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축제·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25년 100억원 → '26년 157억원)하고, 제주에서 발생한 사용후 배터리를 농기구 등으로 재활용하여 농어촌·에너지 취약지역에 보급하는 시범사업('25~'27년, 8억원/년)과 글로벌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용후 배터리 환경규제, 안전관리 측면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25년 28억원 → '26년 62억원), 이차전지 재활용 원료 수급조절,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이차전지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구축사업('26년 5억원), 전기차 폐차시 발생하는 인버터·모터·감속기 등 핵심부품의 재사용을 위한 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체계 구축사업('26년 23억원) 등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을 고르게 반영하였다.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기초시설에 대한서도 지속 투자한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2,196억원을 지원하고, 폐기물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사이클센터(5개소) 설치 예산(41억원)도 지원한다.

[표 4-4]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주요 사업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2026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합계					
녹색정책금융활성화	540	-	665	23.1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	100	100	157	57.0	57.0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16,018	16,018	31,653	97.6	97.6

🌿 자연환경

소외계층 없이 국민 모두가 자연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조성 3개소·정비 5개소, 31억원), 저지대 숲체험인프라(5개소, 60억원) 조성 및 취약계층 생태복지 서비스(2개 사업, 4.5억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된 금정산국립공원 초기 관리기반(25억)을 마련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을 지속추진(150억원) 한다.

또한, 전국에 확산되어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키는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기 위해 59억원이 투자되며, 동물매개 질병 해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검역장을 설치·운영 할 예정(26년 완공)이다.

아울러, 훼손지 생태복원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천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한반도 생태축 복원, 도시생태축 복원 등 훼손·단절된 지역의 복원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지속 지원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1편 제1부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 〉



〈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조감도 〉

[표4-5] 자연환경 부문 주요 사업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2026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합 계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1,455	1,760	1,361	△6.5	△22.6
국토환경 녹색복원	34	34	98	191.5	191.5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자율)	125	125	305	102.5	102.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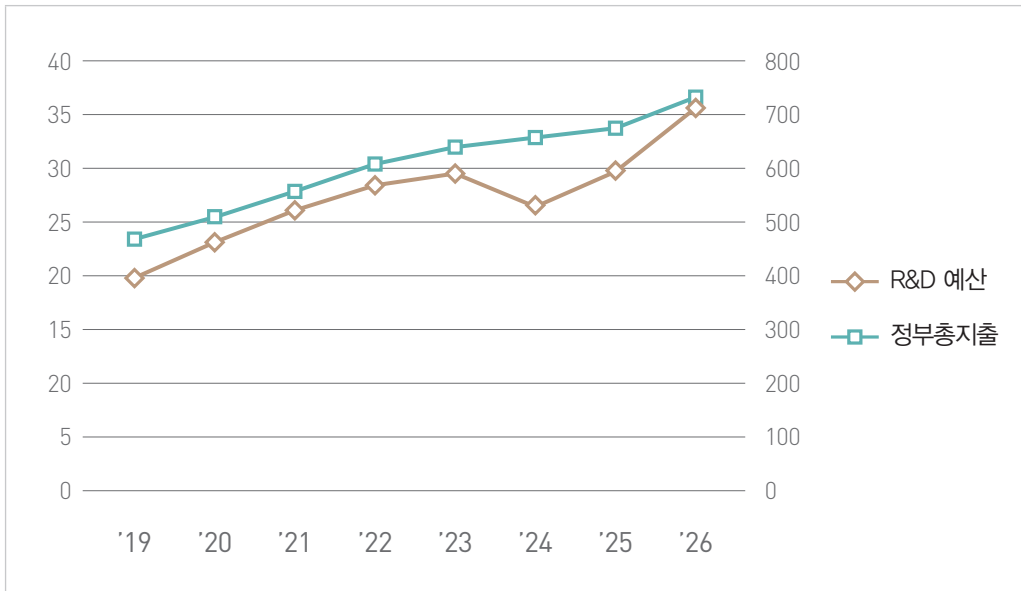
R&D 분야



5-1 재정지원 방향

- 2026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5년 대비 19.9% 증가한 35.5조원이다. 이는 규모 및 증가율 측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초혁신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A·B·C·D·E·F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프로젝트 중심 소액 다건 연구(PBS) 체제에서 국가 임무 중심 대규모 융합연구 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1억원 미만 소액 기초연구 과제 복원 등 연구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첨단인재 확충을 위한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1) 초혁신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R&D 투자 확대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장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24년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R&D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연구 생태계가 위축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역량의 장기간 축적을 통해 연구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세계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단순한 R&D 생태계 복원을 넘어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R&D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6대 첨단산업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R&D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2026년도 정부R&D 예산은 2025년 대비 19.9% 증가한 35.5조원이다. 이는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이다.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첨단제조 등 6대 첨단산업 선정 및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초혁신경제를 실현한다. 또한 PBS 제도를 전면 개편해 국가 임무 중심의 대규모 융합연구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첨단인재 확충을 위한 3대 프로젝트(국내인재 양성, 해외인재 유치, 인재유출 방지)를 시행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5-1]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 계	295,968	354,978	19.9
과학기술·통신 분야	108,576	131,474	2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1,806	88,474	23.2
교육 분야	14,864	16,736	12.6
보건·복지 분야	13,992	15,571	11.3
SOC 분야	9,892	11,412	15.4
기타 부문	76,837	91,313	18.8

5-2 부문별 지원 내용

1) A·B·C·D·E·F 첨단기술 육성

- 적극적인 투자로 초혁신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A·B·C·D·E·F 첨단산업('25년 8.3 → '26년 11.3조원)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A·B·C·D·E·F 첨단기술 육성에 정부 R&D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2025년) 8.3조원 → (2026년) 11.3조원). 이는 전년대비 약 36.1% 증가한 수치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먼저, 인공지능 대전환(AI Transformation)으로 AI 3강 도약을 위해 전 분야에 걸쳐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1.1 → 2.4조원). 「AGI준비프로젝트」, 「피지컬AI 선도기술개발」 등을 통해 차세대 AI 핵심기술에 대한 선점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5대 선도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

<p>(전북) 피지컬시 기반 협업지능 컴포넌트 기술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AI 팩토리 ('26 예산) 767억원 • (총사업비/국고) 10,000/6,000억원 	<p>(경남)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실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초정밀 제어 AI ('26 예산) 667억원 • (총사업비/국고) 10,000/6,000억원
<p>(전북) 피지컬시 기반 협업지능 컴포넌트 기술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AI 모빌리티, AI 에너지 ('26 예산) 297억원 • (총사업비/국고) 6,000/3,600억원 	<p>(대구)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AI 로봇, AI 바이오 ('26 예산) 229억원 • (총사업비/국고) 5,510/2,976억원

바이오 산업에서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추진한다(1.3 → 1.6조원). 고품질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조기 개방하기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112억원). 또한 신약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신약개발 전 주기에 걸쳐 AI 도입을 가속화한다(+233억원).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제1회)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1000억계획

콘텐츠 산업에서는 AI 콘텐츠 제작기술 및 IP 기획·창작 기술 등 개발을 추진한다(0.1 → 0.2조원). 자동화된 AI 기술로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문화콘텐츠 플랫폼의 다변화에 맞춰 IP 확보를 통한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전환을 추진한다(2.2 → 2.7조원). 주력산업인 철강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저·무탄소 기반 공정 기술 및 실증을 지원한다(501억원, 신규). 또한 이산화탄소 전환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탄소 다배출 업종 대상 기술개발, 실증 플랜트, 사업화를 연계하는 CCU 메가프로젝트를 실시한다(200억원, 신규).

첨단제조 산업에서는 특수탄소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를 구축한다(0.4 → 0.5조원). 로봇 제품의 개발·실증·인증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가상환경 기반 테스트필드를 구축해 로봇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한다(577억원).

[표 5-2]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5년	'26년	증감
계	82,548	112,945	30,397
A(AI)	11,257	24,324	13,067
B(바이오)	12,904	16,261	3,357
C(콘텐츠)	1,552	2,101	549
D(방산)	30,834	38,661	7,826
E(에너지)	22,237	26,768	4,531
F(첨단제조)	3,765	4,831	1,066

2) PBS 제도의 단계적 폐지

- 국가임무 수행을 위한 출연연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PBS 제도를 개편해 전략연구 체제로 전환한다.
(기존) 2~3억원, 1,877개 과제 → (개편) 최대 450억원, 100개 과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경쟁적 연구과제 수주에 골몰하지 않고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30년 만에 PBS 제도를 개편한다. 연구관리체계를 기관 단위가 아닌 프로젝트(과제) 단위 중심체제로 일원화하여 운영·관리하는 PBS 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출연연 고유임무 강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매년 소규모 정부 수탁과제 종료분(연 4~5천억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경우 정부수탁과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인문사회계 출연연의 경우 기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고, 부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부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다.

전환된 출연금은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해 기관별 임무중심 전략 연구과제로 재설계한다. A·B·C·D·E·F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0개의 국가 대형 임무 과제를 선정해, 최대 450억원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 주요 기관별 전략연구과제 예시

(단위: 억원 %)

기관	'26년	증감
GIST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 기술 개발	437
KIST	자율구성 모듈형 휴머노이드 개발	231
전기연	고성능 방사선암 치료기 개발	396
철도연	전력반도체 기반 차세대 전력공급시스템 개발	347
에너지연	폭발위험없는 24시간 사용 수계 배터리 개발	299

3) 연구생태계 회복 지원

- 위축된 연구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과제 지원 개수를 확대한다.
(2024년) 1.31 → (2025년) 1.18 → (2026년) 1.53만개(2.3조원)

2024년 R&D 예산 삭감 등으로 위축된 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를 삭감 이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방·신진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1억원 미만 소액 기본연구에 대한 지원을 복원한다.

기초연구 과제 지원 개수는 2023년 1.45만개였으나, 혁신적인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 트랙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1.31만개, 1.18만개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2026년에는 PBS제도 개편에 맞춰 지방·신진연구자 등의 연구기회 확대를 위해 폐지되었던 1억원 미만 소액 기본연구 유형을 재신설해 2,000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신규 지원하는 등 기초연구 트랙 개편 이전 수준(1.45만개)을 상회하는 개수를 지원한다.

[표 5-3] 2026년 금액별 기초연구 과제 개수

(단위: 억원,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소계
신규	2,030	3,335	1,490	19	6,874
계속	-	3,969	4,391	77	8,437
합계	2,030	7,304	5,881	96	15,311

4) 첨단인재 확충

- 첨단인력 확보를 위해 인재양성, 인재유치, 유출방지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5년) 2.7 → (2026년) 3.3만명)

R&D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 과학기술 고급인재(석·박사급) 확보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첨단인력 3.3만명 확보를 위한 국내인재 양성, 해외인재 유치, 우수인력 유출방지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내인재 양성) 현장수요에 기반한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한다(2.7 → 3.1만명, 1.1조원). 특히 인재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한 AI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사업」을 통해 신진연구자가 주도·자율적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계형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협력기업과 함께 수행한다.

(해외인재 유치) 해외 최고급 인재 및 우수 신진 연구자를 영입하기 위한 다부처 협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5년간 2,000명 유치 목표). 이는 글로벌 수준의 연봉, 연구비, 정착지원 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를 통해 바이오 분야(복지부), 에너지·첨단제조·조선 분야(산업부) 인재를 영입한다. 또한 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트랙을 신설(200명)해 재외 한인 과학자에 대한 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수인력 유출방지)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국내에서도 충분한 연구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4대 과기원 InnoCORE」를 통해 4대 과기원 박사후연구원을 총 1,000명 선발하여 ISD 연구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 5년간 年 1.5억원 이상의 인건비·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박사우수장학금을 신설하여 우수 박사과정생 1,000명에게 年 750만원 장학금을 지원하며,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규모와 인원을 확대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 2026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31.8조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한다. 첨단·주력산업 고도화 및 유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RE100 산단조성 등 에너지대 전환 촉진, AI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딥테크·혁신창업 생태계 확충 및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민간 경제 도약을 위한 마중물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

▶ 첨단·주력산업 기반 고도화 및 유망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을 뒷받침하고, 조선·해양·항만·방산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 인프라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원료·소재 실증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한·미 조선협력 확대를 위해 신규 조선기술협력센터를 구축하고, MRO 역량 강화 신설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美 진출을 적극 뒷받침한다(193억원).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유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 플랫폼과 소비재(K-뷰티 등)를 연계한 대중소 동반 해외진출 지원사업(492억원)을 신설한다.

▶ 통상현안 적극 대응 및 수출지원 기반 강화

美 관세 부과 등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피해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바우처를 제공하고, 일반 수출바우처 대비 기업당 지원한도를 상향(1 → 1.5억원)한다. 철강 등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신규 지정하여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한편, 철강·알루미늄 등 고관세 업종에 대한 연구개발·시설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현지 로펌·마케팅기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시장 진출 패키지를 추가하여 수출 신시장 개척을 촉진한다. 또한, 유통플랫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K-푸드·뷰티 등 유망 소비재 기업과의 대중소 동반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 지원

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2026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자·보조 예산을 대폭 확대(0.5 → 0.9조원)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정책용자·보증도 강화(0.4 → 0.6조원)한다.

한편,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목적을 달성한 석탄·석유 재정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 과정에서 석탄 발전의 조기폐지와 연계된 산업·지역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원전 산업의 경우, 에너지 믹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원전 유망기업 육성,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기술 확보 등 미래 원전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한다(0.9조원).

또한,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신규 ESS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추진한다(0.2조원). 아울러,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신규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 AI·딥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 강화

AI·딥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AI·딥테크 특화형 창업패키지를 확대하고, 신규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도입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및 성장지원을 연계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편람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아울러, 대기업·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벤처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523 → 600개)하고, 스타트업파크 등 지역 창업인프라도 확충한다. 또한, 모태펀드 출자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딥테크 등 첨단분야를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특화자금 공급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모태펀드는 그간 체계적인 유형분류 없이 각 펀드별로 개별 검토되어 전략적 투자가 제한되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개별 자펀드를 투자대상, 투자조건 등을 토대로 전략육성, 민간협력, 시장보완, 회수시장 활성화 등 4유형으로 체계화하고, 투자규모도 역대 최고인 1.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정부는 2026년에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 지원한다.

특히, 매출 회복이 더딘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를 지원하고, 디지털·수출 등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회복기반을 구축한다.

먼저, 연매출 1.04억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게 공과금·보험료 등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한다(2026년 5,790억원). 아울러, 점포철거비 인상(4 → 6백만원)과 폐업자 전직·취업연계수당 확대 등을 통해 폐업 이후 재도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2,450 → 3,056억원). 동시에, AI 활용, 수출지원, 온라인 진출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150억원 → 449억원)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4.5조원 규모로 발행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소비기반을 강화한다(4,580억원).

이와 함께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전국 66개 상권을 규모별로 혁신 지원하고, 지역 거점형 브랜드 전통시장 10곳을 종합 패키지로 육성하는 등 시장·상권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표 6-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281,772	317,591	12.7
무역 및 투자유치	9,718	11,591	19.3
창업 및 벤처	39,505	42,512	7.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106,835	115,916	8.5
에너지 및 자원개발	46,185	52,738	14.2
산업혁신지원	68,172	82,667	21.3
지식재산일반	3,567	4,142	16.1
산업·중소기업일반	7,790	8,025	3.0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설문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6-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 관세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 (2025년) 9,718억원 → (2026년) 1조 1,591억원 (19.3% 증가)

관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투자를 2025년 1.0조원에서 2026년 1.2조원으로 확대한다.

먼저, 한-미 협력이 강화되는 K-조선 수주 확대를 위한 마중물을 지원한다.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중소조선사, 기자재 기업 등에 대해 현지 인증 획득, 기술 컨설팅,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K-조선 글로벌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을 4,600억원 공급한다.

한편, 우리 수출기업이 관세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미 관세 영향기업 약 800개사를 대상으로 관세피해 분석 및 대응, 물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바우처를 신설하고, 철강·알루미늄 등 고관세 업종 대상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하여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국내기업의 수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유망 내수기업을 수출 중추기업으로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402억원).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유통플랫폼을 대상으로 팝업스토어,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492억원)하여, 국내 유통플랫폼의 해외진출을 통한 K-뷰티·푸드 등의 동반수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현장 수요가 큰 수출바우처(4,690 → 6,394개사), 중소기업 해외인증(605 → 630개사), 수출중소기업 글로벌화 자금(770 → 954개사)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표 6-2]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합계	9,718	11,591	19.3	
수출지원기반활용(산업부)	914	1,811	98.1	
수출지원기반활용(중기부)	1,276	1,502	17.7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	492	순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293	3,414	3.7	

창업 및 벤처 부문

- AI·딥테크 중심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적극 확충한다.
 (2025년) 3조 9,505억원 → (2026년) 4조 2,512억원 (7.6% 증가)

신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 창업 생태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AI·딥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이 창업 후 빠르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패키지 내에 AI·딥테크 전용 특화트랙을 신설(255개)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도입(50개)하여 유망기업의 신속한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해나간다.

또한 대기업·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523 → 600개)함으로써, 홀로서기 어려운 벤처·중소기업이 외부 역량을 활용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스타트업 파크와 제조창업 공유공장 등 지역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기술 창업이 수도권을 넘어 지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R&D 투자 확대와 연계하여, 신산업 분야의 본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모태펀드 출자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1.0 → 1.5조원)하고, 신규 첨단산업 유니콘 육성과 재창업 기업 재도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특례보증을 확대(4.7 → 7.5조원)하여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타정책계획

[표 6-3] 창업 및 벤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합계	39,505	42,512	7.6	
민관협력창업자육성	2,083	2,399	15.2	
창업사업화지원	4,036	4,618	14.4	
모태출자(중진기금·소특회계)	5,000	8,200	64.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혁신, 글로벌 인증 등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2025년) 10조 6,835억원 → (2026년) 11조 5,916억원 (8.5% 증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바우처 지원을 확대(614 → 652억원) 하고, '25년 신설된 지역특화 R&D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216 → 969억원) 또한,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AI 특화트랙을 신설하는 등 대폭 확대(2,361 → 3,376억원)한다.

아울러, R&D를 통해 기개발된 우수 성과들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패키지를 신설(240억원)한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 R&D 사업화 보증을 신규 도입하여, 기술력은 확보했으나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는 유망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 뒷받침한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연매출 1.04억원 이하 취약 소상공인 대상 공과금·보험료 등 고정비를 2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경영안정바우처'를 한시 운영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 지원을 확대(점포철거비 4 → 6백만원)하고, 폐업자 전직·취업연계수당 수혜인원도 확대한다(1.0 → 1.2만명).

한편,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한 마케팅·제품개발 등 지원(143억원), 수출 소상공인 육성(95억원)을 신설하고,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여 유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 TOPS 프로그램도 확대한다(150 → 210억원).

상권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전국 66개 상권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지역 거점별 브랜드 전통시장(10곳)을 선정하여 종합 지원한다.

[표 6-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합계	106,835	115,916	8.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614	652	6.3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216	969	349.6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2,361	4,021	70.3	
기술혁신기반조성	165	434	162.5	
R&D 사업화 계정 출연	-	500	순증	
소상공인성장지원	2,651	6,212	134.4	
소상공인지원(융자)	37,700	33,620	△10.7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충	2,109	1,681	△20.3	
소상공인재기지원	2,748	3,516	28.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652	5,649	21.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원전산업에도 지속 투자한다.
또한, 높아지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력계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한편,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를 더욱 두텁게 확충한다.
☞ (2025년) 4조 6,185억원 → (2026년) 5조 2,738억원 (14.2% 증가)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지원을 강화하고, 전력 수요 증가와 출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망 안정성 투자도 확대한다.

먼저,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에 대한 용자·보조 예산 확대(0.5 → 0.9조원), 해상풍력 사업 정책용자·보증 확대(0.4 → 0.6조원) 확대 등 발전설비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낮 시간대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분산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을 신설한다(1,196억원). 이를 통해 전력낭비와 접속 제한 문제를 완화하고, 계통 증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의 안정적 유지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유망기업 육성(신규 80억원) 및 신규 SMR(소형모듈원전) 제조기술확보(총 0.3조원)등 기반투자를 지속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분산형 전력망 구축(0.1조원)과 K-그리드 산업밸리 조성(0.1조원), 산업단지 내 마이크로그리드 실증(0.1조원)을 추진하여 지역단위 전력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한편, 에너지 비용지원도 확대하여 에너지바우처(4,797 → 4,888억원), 에너지복지 사각지대해소(신규 33억), 연탄쿠폰 단가도 인상(198 → 231억)하는 등 취약계층의 부담완화에 힘쓴다.

[표 6-5]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합계	46,185	52,738	14.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3,263	6,480	98.6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	2,171	순증	
원전생태계 금융지원	1,500	1,500	-	
분산에너지활성화지원	89	372	318.0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564	2,143	37.1	
K- 그리드인재·창업밸리	-	245	순증	
에너지바우처	5,014	5,172	3.2	

산업혁신지원 부문

- 초혁신경제 구현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이라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조선·로봇 등 기존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의 전산업 확대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 (2025년) 6조 8,172억원 → (2026년) 8조 2,667억원 (21.3% 증가)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로봇, 선박 등 7대 선도분야에 AI 관련 투자를 전폭 확대하는 가운데, 바이오, 방산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R&D 성과를 가시화하고 초혁신경제를 실현한다.

우선 국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첨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2025년 11,780억원 → 2026년 12,909억원).

이와 더불어 조선(2025년 1,192억원 → 2026년 1,944억원), 로봇(2025년 1,486억원 → 2026년 1,735억원) 등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R&D를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우위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또한, 주력산업(자동차, 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의 AI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적 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2026년 1,666억원, 신규), 반도체 첨단산업 국가전략 이행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공정·장비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2026년 473억원, 신규).

[표 6-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합계	68,172	82,667	21.3	
소재부품기술개발(R&D)	11,780	12,909	9.6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3,904	3,397	△13.0	
로봇산업기술개발(R&D)	1,486	1,735	16.8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R&D)	1,192	1,944	63.1	
산업기술국제협력(R&D)	2,088	2,322	11.2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1,662	2,014	21.2	
K- 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	1,666	순증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R&D)	-	473	순증	

📌 지식재산일반 부문

-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 (2025년) 3,567억원 → (2026년) 4,142억원 (16.1% 증가)

지식재산일반 부문에서는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및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고(2025년 422억원 → 2026년 513억원), 인공지능 심사기술 개발 등 AI 기반 심사지원 인프라를 확충(2025년 20억원 → 2026년 36억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의 특허제도와 심사 경향 등 실무 정보를 우리 기업에게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신설하였다(8억원).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IP 담보부 대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2025년 23억원 → 2026년 155억원),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식재산기반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사업(100억원)’을 신설한다. 또한, 정책 현안 및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확대한다(2025년 11억원 → 2026년 63억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위조상품 및 모방상품으로 인한 우리기업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인공지능 위조상품 판정지원(2026년 29억원), K-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2026년 94억원)을 신설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업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하여 위조상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한다.

[표 6-7] 지식재산일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합계	3,567	4,142	16.1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422	513	21.6	
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혁신	20	36	80.0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23	155	573.9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	94	순증	
인공지능 위조상품 판정지원	-	29	순증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1면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07

SOC 분야



7-1 재정지원 방향

- 2026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주요 기간망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2025년 25.4조원 대비 9.1% 증가한 27.7조원 규모이다. SOC 분야는 5극 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통안전 및 교통편의성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5극 3특 중심 균형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5극 3특 중심의 균형성장’이라는 정책 방향하에 모두가 잘 사는 국토공간 조성과 전 국민의 교통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국가 주요 기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부문의 경우 더욱 촘촘한 지방 거점도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국가 기간 철도망, 권역별 지방 광역철도 구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남부내륙철도 등 고속, 일반철도망 구축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GTX B·C, 부산-양산-울산 광역 철도 등 권역별 지방 광역철도가 신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울산 도시철도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도 적기 개통,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지속해나간다.

도로 부문의 경우, 도서 산간지역, 국토 최남단 등 지역간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도 77호선 등 해저터널, 해상교량 등을 통하여 도서, 산간지역 등 교통 벽지 접근성을 높여주는 주요 간선망들에 대한 신설·개량·확장 사업을 중점 투자한다. 나아가, 수도권 진출입시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 고속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구간에 대한 지하 고속도로 신설·확장 투자도

지속해나간다. 이에 더하여, 지방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인 광역도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공항 부문의 경우 현재 사업 추진중인 8개 신공항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강화한다. 울릉도 소형공항 등 도서지역 소형 공항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덕도, 새만금 등 주요 거점공항들도 한국공항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투자 여력을 함께 활용하여 지속 지원한다.

📌 노후 교통인프라 안전개선 및 위험 예방

도로 싱크홀, 철도, 항공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노후화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지적된 주요 국가 기간 교통시설에 대한 시설개량·보수 등 안전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지적된 전국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량을 완성하는 한편, 조류충돌 예방 시스템,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도입 등 새로운 안전시설도 추가해나간다.

한편, 집중호우 등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도로의 싱크홀, 포트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시급한 고위험 지역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철도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AI CCTV를 신설·확충하고 교량·옹벽 등 철도 유지보수 구간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등 철도 안전에 대한 투자도 계속한다.

📌 국민 교통 이용 접근성·편의성 개선

국민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교통 취약계층 및 교통벽지의 교통접근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들의 교통요금 부담은 경감하고 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월 5~6만원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 청년, 어르신 등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많은 모든 국민들이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제1회)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또한 수도권 주민들이 광역 교통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취약 계층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확대, 특별교통 수단 확충 등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도 지속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고령 운수사업 종사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자격 검증시설도 신설하여 모든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 모빌리티 및 SOC 부문내 AI 접목

차세대 모빌리티와 AI 전환 관련 투자도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술 등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AI 모빌리티 시범도시(자율주행 실증도시 통합 운영)를 조성하고, 신속한 기술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차량, 특화 AI 학습센터,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은 그간, 다양한 활용분야에도 불구하고 외산 의존도가 높은 5대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AI 드론 국산화를 지원하고 국내 활용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시교통문제의 대안으로 추진중인 UAM (Urban Air Mobility)은 실증 및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환승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기반 마련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 부문에서도 3D 설계(BIM), 주요자재 공장생산(OSC), 장비 자동화(MC), 드론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하여 건설업 부문의 안전성 제고와 공정 효율화를 지원해나간다.

[표 7-1] SOC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부문	2025년 (a)	2026년 (b)	증감율 ((b-a)/a)
합 계	254,344	277,464	9.1
도로	71,998	62,985	△12.4
철도	70,016	89,496	27.8
항공·공항	13,533	13,481	△0.4
물류등기타	33,467	40,993	22.5
지역및도시	19,860	22,663	14.1
산업단지	2,779	2,519	△9.3
수자원	21,878	23,824	8.9
해운·항만	20,889	21,502	2.9

7-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도로 부문

- 주요 병목구간 교통체증 개선 및 교통취약 지역 지원을 위한 도로 건설을 지속하는 한편,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등에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
☞ (2025년) 7조 1,998억원 → (2026년) 6조 2,985억원 (△12.4% 감소)

도로 건설 부문의 경우, 주요 정체지역 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와 함께 도서벽지 등 교통취약 지역 연결망에 대한 투자에 집중한다.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인천-서울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산간, 도서벽지 등 교통 취약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해상교량, 터널 등을 활용한 간선망 확충 투자도 지속해 나간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소규모 병목지점에 대한 도로 개선을 위해 교차로 설치, 도로 확장 등도 계속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적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도로 관리 부문의 경우,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그간 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짧은 구간 교량 등 3종 교량·터널에 대한 정기점검을 계속해나가고, 노후 교량·터널에 대한 보수 및 개축을 확대 지원해나간다. 또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 아이스, 비탈면 붕괴 등에 대비하여 제설대책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비탈면 IOT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또한, 도로 건설 사업시 지속되고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D 설계(BIM), 장비 자동화(MC), 드론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해나간다.

[표 7-2] 도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71,922	62,985	△12.4
고속도로	10,445	10,239	△2.0
국도	17,731	16,695	△5.8
민자도로	11,715	4,618	△60.6
도로관리	27,415	26,136	△4.7
지자체도로건설지원	4,617	5,013	8.6

☞ 철도 부문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비수도권 광역철도 투자에 집중하여 지역간 이동성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간 간선망 역할을 하는 일반철도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한, 철도시설 안전성 개선을 위해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한다.
☞ (2025년) 7조 16억원 → (2026년) 8조 9,496억원 (27.8% 증가)

철도건설 분야는 출퇴근 시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해 GTX 등 광역급행철도 및 지방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고속철도의 편리한 운영을 위해 인덕원-동탄 구간을 복선 전철화하고 호남권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한편, 광주송정-순천, 남부내륙철도, 강릉-제진등 지역간 간선망 역할을 하는 일반철도 건설도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철도안전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시설 노후화에 따라 안전시설 보강 투자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금년에는 철도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AI CCTV를 확충하는 한편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 유지보수 대피 공간 보강도 병행하여 투자한다.

또한, 시설 유지보수의 경우, 열차운행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등 첨단장비를 지속 도입하여 안전성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며, 스마트 SOC 등 시설,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해 나간다.

[표 7-3]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 계	70,016	89,496	27.8
고속철도	4,654	3,932	△15.5
일반철도	12,586	22,900	81.9
광역철도	9,131	9,692	6.1
철도안전및운영	37,146	43,529	17.2
도시철도	6,499	9,444	45.3

✎ 항공·공항 부문

- 8개 신공항 개항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미래 항공교통시장 선도를 위해 드론 국산화 차세대 항공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2025년) 1조 3,533억원 → (2026년) 1조 3,481억원 (△0.4% 감소)

현재 추진중인 8개 신공항이 적기 개항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지속한다. 가덕도 신공항·제주 제2공항 등 공항건설 사업이 대규모 재정투입을 요하는 국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항공사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의 투자여력까지 활용하여 공항이 당초 계획된 시점에 개항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간다.

항공산업 부문은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항공교통시장 선도를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그간 활용도가 높았으나 외산 드론에 의존하였던 소방, 건설관리, 배송 등 5대 분야 드론의 국산화를 신규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 드론산업 육성 및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표 7-4] 항공·공항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13,533	13,481	△0.4
공항건설 및 관리	11,878	11,500	△3.2
항공발전, 운영지원	1,655	1,985	19.9

물류 등 기타 부문

- 대중교통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고,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등 교통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 (2025년) 33,467억원 → (2026년) 40,993억원 (22.5% 증가)

고물가 상황에서 시민들의 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4년 K-패스를 도입하였다. 금년에는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를 신설하여 전 국민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다. 나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도 증차하여 광역권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저상버스 보급,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취약 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령 운수사업 종사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 검증시설도 신설한다.

[표 7-5]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33,467	40,993	22.5
대중교통육성	6,591	10,538	59.9
자동차및교통정책	1,920	2,492	29.8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역 및 도시·수자원 등 기타 부문

-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국가하천 등 수자원관리 및 미래 해운·항만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 ☞ 지역및도시 : (2025년) 19,860억원 → (2026년) 22,663억원 (14.1% 증가)
- ☞ 수자원: (2025년) 21,878억원 → (2026년) 23,824억원 (8.9% 증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 나간다. 국가균형발전 및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신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간 국정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와 더불어 국립 박물관 단지 등 기반시설 구축도 계속한다.

홍수 예방을 위해 홍수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배수영향구간)에 대한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또한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하천 주변의 사람·자동차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여 집중호우시 침수구역을 이용하는 행락객을 신속히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한편, 취·양수장 시설 개선도 가속화하여 녹조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취수 여건을 마련하고,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표 7-6] 지역 및 도시, 수자원 부문 등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지역및도시	19,860	22,663	14.1
산업단지	2,779	2,519	△9.3
수자원	21,878	23,824	8.9

해운·항만 부문

-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북극항로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편리한 연안교통 제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한다.
 ☞ (2025년) 2조 829억원 → (2026) 2조 1,428억원 (2.9% 증가)

항만 자동화, 선박 대형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고, 지역 핵심 기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항만·주요항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한다. 또한 항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드론테러 등 신종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을 지속하며 항만보안시설 유지보수에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복잡·다양화 양상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취약지구 정비도 실시한다.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 증대에 따라 민간기업의 북극항로 진출 지원을 위해 외항선사의 친환경 저탄소선박 건조 지원금을 확대하고, 쇄빙선 신조 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북극해기사 등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관련 교육과정 개발, 교육인원 확대 및 극지 실습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북극항로 기점 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항 항만배후단지의 글로벌 물류허브화를 위한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을 지원하여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한다.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여객운임 보조,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지원, 국고 여객선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선 편의시설의 확충 및 선상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등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교통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표 7-7] 해운·항만 부문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해운·항만	20,889	21,502	2.9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2026년도 나라살림
제2부
2026년도 예산안
제3부
기초운용계획
2026년도 예산 및

08

농림·수산·식품 분야



8-1 재정지원 방향

- 2026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8.0조원으로 2025년 25.9조원 대비 2.1조원, 8.3% 증가하였다. AI·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화를 통해 우리 농어업의 체질 개선하고, 유통구조 혁신 및 수출 활성화로 K-FOOD 가치사슬을 강화하였다. 또한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과 필수먹거리 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및 환경 개선 등 농어촌 삶의질 제고에도 대폭 지원 예정이다.

📌 AI·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화를 통해 우리 농어업의 체질 개선

농어업 AI 대전환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AI기반 농업 혁신, 수출 산업화할 수 있는 투자 기반이 확충 되도록 국가 농어업 AX 플랫폼(807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데이터기반 노지 농업 솔루션(약 1,400농가) 등을 신규 도입하여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피지컬 AI 농작업 협업로봇, AI 위성기반 작황 예측, 중소농가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 첨단 R&D 및 실증지원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농식품 유망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 미래혁신성장 펀드를 신설하고, 양식시설 현대화, 장비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피셔리 전문교육·판로 등 창업·교육(133억원)을 추진한다.

📌 유통구조 혁신 및 수출 활성화로 K-FOOD 가치사슬 강화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고(APC·FPC 등 76개소 → 135개소) 기존 유통시설 40개소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개별 지원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통합·전환하고 결제·정산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600 → 1,000억)한다. 또한 지자체 도매시장과 연계한 온라인도매시장 물류체계 구축도 시범 운영한다.

2025년 10월 기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112.4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수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경쟁력 있는 우수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투자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수출기업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 약 2배(460 → 870개사) 확대하고 해외 물류 요충지에 거점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농식품의 품질 유지 및 통합물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수출전문단지에 AI·ICT 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하여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K-푸드 위조상품에 대해 농식품부, 특허청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재외공간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등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과 필수먹거리 식비 지원 확대

식량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락작물 직불 재배면적을 (2025년) 176천ha → (2026년) 205천ha로 확대하고 단가 인상(조사료 500 → 550만원/ha, 옥수수 100 → 150만원/ha, 콩 100 → 150만원/ha) 및 신규 품목(수급조절용벼, 알팔파, 수수, 울무, 메밀)을 추가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2,440 → 4,196억원)한다. 청년농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공공비축농지 임대 또한 확대 추진(+1,700ha)한다.

농수산물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해 민간 RPC 벼매입자금을 확대(용자 1.3조 → 1.4조)하고, 쌀 품목별 자조금 단체 지원(160억원), 김 계약재배 전용 용자를 신설(408억원)한다.

국산 콩 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콩 공공비축 물량을 2배(3 → 6만톤) 확대한다. 또한 밀·콩 등 전락작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지원을 강화(61 → 90개소)하고,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산 콩 원료공급단지 및 가공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2025년 32억원 → 2026년 64억원)하여 국산 콩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 및 소비기반 조성에 힘을 계획이다.

필수먹거리 소비 지원을 위해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1회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5.4만명) 대상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신설하여 월 4만원 상당의 식비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예산을 확대(2025년 381억원 → 2026년 740억원)하여 지원대상을 추가(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신부·영유아·아동 → 청년 추가)하고 및 지원기간을 확대(10 → 12개월) 하였다. 또한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하여 임신부 16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4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

☑ 소득안전망 확충 및 환경 개선 등 농어촌 삶의질 제고 지원

인구소멸지역 공모를 통해 월 15만원 수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0개군, 2,341억원)을 추진한다. 농가 평년수입의 일정수준(최대 85%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9종 → 14종) 확대 및 신규 품목(5종) 도입한다.

생활·영농쓰레기 수거(68억원) 및 해양폐기물 처리비용(527억원)을 지원하는 국토 대청소 사업을 통해 농어촌 환경 개선하는 한편, 난개발된 농어촌을 쾌적한 환경으로 재구조화하고 거점위주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확대(118개소, 1,045억원 → 133개소, 1,519억원) 추진한다.

또한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창업·업무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운영(15 → 18만명)과 여성농어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지원(5 → 8만명)도 확대한다.

[표 8-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258,878	280,315	8.3
농업·농촌	189,155	203,192	7.4
수산·어촌	31,931	34,794	9.0
임업·산촌	28,408	32,131	13.1
식품업	9,383	10,198	8.7

8-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농업·농촌 부문

- AI·데이터 기반의 농업 스마트화, 유통구조 혁신 및 수출 활성화로 K-FOOD 가치사슬 강화,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과 필수먹거리 식비 지원을 확대,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및 환경 개선 등 주요 과제의 성과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6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2025년) 18조 9,155억원 → (2026년) 20조 3,192억원 (7.4% 증가)

농어업 AI 대전환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AI기반 농업 혁신, 수출 산업화할 수 있는 투자 기반이 확충 되도록 농업 AX 플랫폼(705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데이터기반 노지 농업 솔루션(1,400농가) 등을 신규 도입하여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피지컬 AI 농작업 협업로봇, AI 위성기반 작황 예측, 중소농가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 첨단 R&D 및 실증지원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 유망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 미래혁신성장 펀드를 신설한다.

식량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 재배면적을 확대(176천ha → 205천ha)하고, 하계품목 단가인상(조사료 500 → 550만원/ha, 옥수수 100 → 150만원/ha,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 100 → 150만원/ha) 및 신규 품목(수급조절용벼, 알팔파, 수수, 울무, 메밀)을 추가(2,440억원 → 4,196억원)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확산과 2030 NDC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319 → 407억원) 및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233억원 → 356억원)하여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농의 논타작물 및 영농형 태양광 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비축농지 임대사업의 확대(+1,700ha)를 추진한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7,000억원을 지속 지원하고, 산불피해 농업인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최대2년) 3,645억원을 지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9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하여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군 대상 공모를 통해 월 15만원 수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0개군, 2,341억원)을 추진하고, 농가 평년수입의 일정수준(최대 85%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9종 → 14종) 확대 및 신규 품목(5종) 도입한다.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영농쓰레기 수거를 지원하는 국토 대청소 사업을 시행하고,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확대한다(118개소, 1,045억원 → 133개소, 1,519억원).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3개소 → 4개소).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도 확대 지원한다(5억원 → 23억원). 축산분야에도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2개소 추가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00억원을 지속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도 2개소 새로 구축한다(145억원). 또한,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16개소 신규로 조성하고,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대응형 사과하우스를 시범적으로 구축한다(102억원).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업관측을 강화하여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확대(2025년 18억원 → 2026년 347억원)하고, 마늘, 양파의 출하처 및 출하시기를 관리하는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약 2천 톤, 28억원) 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바우처 형태로 개편·확대(73억원 → 186억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정산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600 → 1,000억)한다. 또한 지방 도매시장과 연계한 물류체계를 시범 구축(59억원)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힘을 계획이다. 한편,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40개소를 신규 구축하여(474억원)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6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0만톤으로 지속 추진(10,254억원)한다. 전락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콩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3 → 6만톤)하고, 전락작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지원을 강화(61 → 90개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콩 원료공급단지 및 가공설비를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2025년 32억원 → 2026년 64억원)하여 생산, 가공 및 소비기반 조성에 모두 힘을 계획이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14,124억원 → 15,699억원)한다. 재해복구비 단가를 높이고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농기계와 축사·시설하우스 내 설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2025년 381억원 → 2026년 740억원)한다.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기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을 추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10 → 12개월) 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주민의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편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5만명에서 18만명으로 확대하고,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린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지속 지원(263개소)한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서 규정한 종식 기한(27.2월) 내 원활한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업계 전·폐업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223억원). 개사육 농장주를 대상으로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원하고,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한 시설물 잔존가액, 잔여견 보호·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8-2] 농업·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189,155	203,192	7.4
국가 농업 AX 플랫폼	-	705	순증
공익기능증진직불	29,536	29,703	0.6
맞춤형농지지원(옹자)	11,134	18,077	62.4
농업자금이차보전	6,819	7,297	7.0
배수개선	4,852	6,436	32.7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1,157	1,631	41.0

수산·어촌 부문

- 수산물 수출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활성화·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적극 강화하고, 연근해·양식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어촌 유입·정착을 위해 생활여건 및 일자리 등을 확충하고 귀어 활성화 및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 및 어선사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확대 등 어업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2025년) 3조 1,874억원 → (2026년) 3조 4,563억원 (8.4% 증가)

어촌에 청년을 유입 및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여건 및 일자리 등을 확충한다. 어항 인근에 청년바다마을을 추가 조성(3 → 6개소, 30 → 45억원)하고 귀어 정착지원금 수혜대상을 확대(355 → 420명, 30 → 35억원)한다. 또한 청년의 어선 임대비용 및 어업교육을 확대 추진(11 → 20억원)하고 양식장 임대(8억원) 및 임대형 스마트양식단지를 구축(3개소, 60억원)하며,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어항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3,378 → 3,745억원)한다.

‘K-Seafood’의 수출 활성화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100 → 158개사, 116 → 168억원)한다. 또한 K-GIM 브랜드 글로벌화를 위해 K-GIM 명칭 확산 사업(3억원) 및 한류스타를 통한 마케팅(20억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이밖에 김 생산 안정화를 위해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11 → 14억원) 및 가공설비 지원(81 → 102억원) 등을 확대하고,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전용 용자지원(408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시설의 규모·효율화를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정산·결제자금을 지원(105억원)하고, 수산물 산지유통시설을 확대(32 → 64억원)하고, 전남나주 소재 소비지유통시설 증축(30억원) 및 충남 홍성 소재 소비지유통시설을 신규 추진(4억원)한다. 또한 부산 공동어시장(100억원) 및 통영 거점 위판장(28억원), 제주 거점 위판장(18억원) 등 노후화된 거점 위판장을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며,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시설 개선(15억원) 및 제주·강구·삼천포 소재 위판장 현대화(8억원)를 신규 추진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편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타연계
계획

어업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유해 시설 교체 등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을 신규 지원(15억원)하고, 위치소실 어선 발생시 업무처리 자동화, 안전모니터링 대상 확대(근해 → 연근해) 등을 위한 어선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기능개선(19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및 국내·외 불법어업 단속 강화를 위한 어업지도선 건조 예산을 확대(400억원 → 544억원)하고, 남해안 원거리 출어선 안전 확보 및 통신 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어선안전국 이설 사업(20억원)을 지원한다.

[표 8-3] 수산·어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31,931	34,794	9.0
수산물해외시장개척	546	791	45.0
어업지도관리	449	583	29.9
국가어항	3,378	3,745	10.9

목 임업·산촌 부문

- 일상화,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임업인 소득안정 및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기여하며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 (2025년) 2조 8,408억원 → (2026년) 3조 2,131억원 (13.1% 증가)

연중·대형·동시다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산불의 조기 진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헬기 도입(계속 10대, 신규 2대), 다목적 산불진화차(12대)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산불진화임도 예산 확대(1,353 → 1,399억원), 산림 내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감시망 확충(100개소), 산불예보시스템 고도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선제적 산사태 재난 대비를 위해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46천개소, 87억원)를 지속 추진하고, 토석류 조기감지를 위해 산림수계지도 구축예산을 대폭 확대(20 → 40억원)하며, 산사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곡 정비(산림유역관리, 237 → 1,202억원) 대폭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피해 확산 저지와 효율적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1,008억원), 일반병해충 방제(254억원) 등을 실시한다.

임업인의 소득안정 및 임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임업직불금확대(517 → 532억원), 임업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129억원)을 지속 추진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창출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11억원)을 실시한다.

목재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교육을 실시(3억원)하며, 미래세대의 목재 친숙도 향상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20개소)와 목공체험관 운영(4억원)을 추진 한다.

산림휴양 수요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동서트레일(4차년도, 21km)을 조성하고, 우선 개통 구간에 편의시설 설치(8억원)를 추진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표 8-4] 임업·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28,408	32,131	13.1
숲가꾸기*	2,392	820	△65.7
조림*	1,077	184	△83.0
사방사업	2,784	3,185	14.4
임도시설	1,900	1,854	△2.4
산림헬기 도입·운영	939	1,938	106.5
산불방지대책	579	854	47.5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517	532	2.9
산림휴양등산증진	257	205	△20.4

* 숲가꾸기, 조림은 지특 이관으로 '25년은 국·공사유림 포함, 26년은 국유림만 포함

📌 식품업 부문

- 식품 분야 농식품 수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바우처 등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농식품 제품의 신선도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아울러, 푸드테크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 (2025년) 9,383억원 → (2026년) 10,198억원 (8.7% 증가)

2025년 10월 기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112.4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수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경쟁력 있는 우수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투자를 확대한다.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 약 2배(460 → 870개사) 확대한다. 또한 해외 물류 요충지에 거점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농식품의 품질 유지 및 통합물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거래 및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글로벌 온라인몰 내 한국 식품관 운영을 확대(11 → 15개소)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중소 식품 수출기업의 공동마케팅 지원을 확대(11 → 20회)한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50 → 60회)한다. 한편,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신규 2개소 추가하는 등 K-푸드의 미래성장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표 8-5]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9,383	10,198	8.7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927	1,158	24.8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	99	119	20.5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1,634	1,434	△12.2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09

국방 분야



9-1 재정지원 방향

- 2026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65.9조원으로 2025년 61.2조원 대비 7.5% 증가한 규모이다. 군 자금심 고취를 위해 간부 처우 개선 및 장병 복무여건 제고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전투능력 향상을 위해 신형 전투차량, 드론, 개량 전투피복 등을 본격 보급하는 등 군수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한국형 전투기(KF-21, 스텔스전투기 등), AI·드론·로봇 등 최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 보수인상, 단기복무장려금 확대,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도입 등 경제적 보상을 강화한다. 군 당직근무비를 대폭 인상(평일 2 → 3만원, 휴일 4 → 10만원)하고, 직책수행경비 지급대상을 확대(소령 신설)한다.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간부 대상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군 급식은 3년간 동결되었던 급식비 단가를 인상(1일 13 → 14천원)하고, 지역상생자율 특식을 확대 개편(연 4 → 8회)한다. 군 복무기간 중 학업연속성 보장을 위해 병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e북 구입비 및 구독료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전투능력 향상 및 예비군 보상 강화

'70년대 개발되어 운용중인 노후 전투차량(2½·5톤)을 성능이 개량된 차량으로 본격 교체하고, 전장병 드론 운용능력 숙달을 위한 상시 교육·훈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 야전부대에 교육용 상용드론을 대대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병사들의 동계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투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성·기능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신형 전투피복 4종을 전 병사에게로 확대 보급한다.

동원훈련 I 형, 동원훈련 II 형 훈련비를 각각 82,000원, 40,000원에서 95,000원, 50,000원으로 인상하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5~6년차 지역예비군들의 기본, 작계훈련시 훈련비도 신설(각 10,000원)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숙영기간 중 급식, 도시락비, 전투식량 단가 인상을 통해 훈련 시 제공되는 식사의 질을 높여 양질의 훈련 여건을 보장한다.

☞ 최첨단 무기체계로의 전환 및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추진

인구감소에 따른 군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거리자폭드론,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변화하는 미래전 양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AI·드론·로봇 등 최첨단 무기로의 전환 및 KF-21(보라매),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첨단무기의 국산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최대 위협인 북 핵·미사일에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북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하기 위한 지휘·정찰 능력을 고도화하고, 한국형 다층구조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대량보복능력을 강화하였다.

☞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투자 확대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스타트업 발굴, 육성 및 수출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방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산혁신클러스터 등을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9-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전력운영 부문

- 군 자금심 고취를 위해 간부 처우 개선 및 장병 복무여건 제고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전투능력 향상을 위해 신형 전투차량, 드론, 개량 전투피복 등을 본격 보급하는 등 군수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 전력운영비 : (2025년) 43.4조원 → (2026년) 45.9조원 (5.8% 증가)

(1) 군 간부 처우 개선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공통 보수인상률(26년 +3.5%) 외에도 추가 보수인상률(최대 +3.1%)을 적용하여 경제적 보상을 강화한다. 단기복무장려수당(부서관 대상)을 단기복무장려금(장교 대상) 제도와 통합하여, 부서관 임관을 확정지을 경우 임관 전이라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서관 단기복무장려금 지원대상을 현재 현역모집 부서관에서 민간획득 부서관과 학군부서관(RNTC)까지 확대하고,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학사 졸업여부에 따라 장려금 지원여부가 결정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졸업 후 학사사관을 지원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초급간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숙련된 군 인적자원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을 신설한다.(3년간 월 30만원 한도, 납입금의 100% 매칭 지원)

군 당직근무비를 각각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소령 대상 직책수행경비를 신설한다(월 3 ~ 5만원). 부대 지휘 및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전투역량강화비를 전년대비 증액(+3.2%)하고, 부대 최선임 부서관인 주임원사의 지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주임원사활동비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한다.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간부 대상으로는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격년 주기, 20만원)을 추진한다.

(2) 장병 복무여건 제고

미래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복무여건 제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군 급식은 3년간 동결되었던 급식비 단가를 인상(1일 13천원 → 14천원)한다. 지역상생장병특식도 지역상생자율특식으로 확대 개편하여, 연 4회 특식 제공에 더해 장병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 자율적 증·부식을 제공함으로써 장병 급식 만족도 제고와 군부대 인근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또한, 훈련중 간부가 영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영내 급식에 따른 추가 차액도 확대 지원한다.

군 복무기간 중 학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병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변화하는 MZ 병사들의 독서 트렌드를 반영하여 e북 구입비 및 구독료 지원 사업을 신설(연간 8만원 한도, 자기부담 20%)하고, 근무 외 시간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장병 문화 지원 사업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모든 장병이 기본적인 AI 이해와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장병 대상 AI 소양교육을 추진한다. 군 내 AI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군 간부 대상 AI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전장병 AI 집합교육과 토론·실습 현장 여건 마련을 위해 거점 교육장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민·군 AI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군 AI 경진대회 규모를 확대하고, 산·학 연계 실증교육과 AI 최신 기술개발, 전력화 등을 동시 추진할 목표로 군·산·학 협력센터를 구축한다.

한편, 장병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 지원과 전투력 재충전을 위해 낡은 운동기구를 대대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인사발령 등으로 이사할 경우 지급되는 이사비 단가를 인상하고, 사다리차 비용도 신규 지원(1회 36만원)하여 잦은 이사로 인한 군 간부들의 이사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3)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군수지원 강화

'70년대 개발되어 운용중인 노후 전투차량(2½·5톤)을 성능이 개량된 차량으로 본격적으로 교체를 시작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동 전투력을 보강한다. 또한

개인화기 조준경, 고성능확대경, 피아식별IR 등 위리어플랫폼 장비를 지원하여 장병의 전투역량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해안경계작전체계 구축도 지원하여 경계작전의 과학화·효율화도 도모한다.

또한, 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현대전 양상에 대비하여 전장병 드론 운용능력 숙달을 위한 상시 교육·훈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 야전부대에 교육용 상용드론을 대대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병사들의 동계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투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성·기능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신형 전투피복 4종을 전 병사에게로 확대 보급한다.

(4) 예비군 훈련 보상 강화

동원훈련 I 형, 동원훈련 II 형 훈련비를 각각 82,000원, 40,000원에서 95,000원, 50,000원으로 인상하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5~6년차 지역예비군들의 기본, 작계훈련시 훈련비도 신설(각 10,000원)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숙영기간 중 급식, 도시락비, 전투식량 단가 인상을 통해 훈련 시 제공되는 식사의 질을 높여 양질의 훈련 여건을 보장한다.

동원훈련장 생활관, 식당, 안보교육관, 야외화장실 등 예비군훈련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예비군 대원들의 안전한 훈련 환경도 조성한다.

[표 9-1] 전력운영비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계	434,007	458,989	5.8
① 급여정책	188,134	192,347	2.2
② 군인·공무원연금기금전출금	40,088	44,518	11.1
③ 급식 및 피복	25,294	26,382	4.3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③ 군수지원및협력	66,119	71,077	7.5
④ 군사시설건설및운영	50,986	54,629	7.1
⑤ 정책기획및국제협력	15,845	16,659	5.1
⑥ 국방행정지원	7,013	7,824	11.6
⑦ 군인사및교육훈련	8,653	10,320	19.3
⑧ 국방정보화	8,068	8,333	3.3
⑨ 장병보건및복지향상	17,890	21,160	18.3
⑩ 예비전력관리	2,646	2,600	△1.7
⑪ 책임운영기관 운영	2,600	2,609	0.3
⑫ 군인복지기금 전출금	671	530	△21.0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설문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방위력 개선 부문

- 급변하는 미래전 양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AI·드론·로봇 등 최첨단 무기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 3축체계도 더욱 고도화 한다. K-방산 4대강국 진입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 방위력 개선 : (2025년) 17.8조원 → (2026년) 20.0조원 (11.9% 증가)

(1) 첨단 무기체계로의 전환

러·우전쟁을 계기로 급변하는 미래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전통적·재래식 무기를 전투기·AI·로봇 등 최첨단 무기로의 신속한 전환을 추진한다. 한국형 최신 전투기(보라매, KF-21)의 최초 개발·양산을 차질없이 지원한다(12,213 → 22,580억원). 이와 함께 전투기에 장착할 전용 미사일(320 → 971억원)과 첨단 항공 엔진(신규86억원)을 국내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위한 연구(신규636억원)도 착수한다.

(2) 한국형 3축체계의 고도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선제적·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고도화한다. 적의 도발징후가 포착될 경우 이를 선제타격 하기 위한 킬체인(KF-21, F-35A 등), 적의 미사일을 다양한 고도에서 공중 격추시키기 위한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 중거리·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적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보복응징을 대량보복응징((KMPR), 특임여단전력보강 등) 등 한국형 3축체계에 대한 투자를 '25년 6.1조원 → '26년 8.8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3) 방위산업 육성지원

K-방산 4대강국 진입을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관련 예산을 '25년 0.3조원 → '26년 0.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 기반의 방산기업 육성 및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함정MRO 클러스터 등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 4개소(총 400억원)를 추가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계약학과 장학생, 지역기반 거점대학 및 이차보전·방산수출 지원펀드 규모를 확대한다. 방산분야에 새롭게 진입하는 스타트업에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개발품을 무기체계에 실증시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신설하였다.

[표 9-2] 방위력 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178,462	199,653	11.9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	138,396	154,467	11.6
국방기술개발	25,371	28,398	11.9
방위산업 육성	2,113	3,454	63.5
획득지원, 행정지원 등 기타	12,582	13,334	6.0

10

외교·통일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 2026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0조원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하였다. ODA 예산은 5.4조원 수준으로 감축하고,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하였다.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외교 전략 수립, 공공외교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 예정이며, 해외동포 청년의 국내 유치·정착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도 신설하였다. 한편,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개선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고, 국민 공감 대북·통일정책 등을 확대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ODA 효율화·내실화 추진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우리 ODA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여, ODA 예산의 효율화·내실화를 추진한다.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재점검하고, 일시적으로 확대된 사업을 정상화한다. 인도적지원(6,775 → 3,415억원)과 국제기구 재량분담금(3,833 → 2,807억원) 규모를 감축한다. 저성과·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효율화한다. EDCF 민간·국제기구 협력 차관을 조정(7,752 → 2,731억원)한다. 부처별로 분산 시행 중인 소규모 초청연수를 통폐합(11개 부처, 13개 사업)하여, KOICA 플랫폼을 활용한 통합 초청연수 브랜드 사업(30억원)으로 재편한다. 우리 ODA의 효과성·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량 있는 시행기관의 성과 있는 사업 위주로 사업을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연설문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 확대

ODA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국익과 연계할 수 있는 실용적 ODA 사업을 확대한다. 개도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대개도국 차관을 확대(13,747 → 16,275억원)한다. 철도차량 공급, 랜드마크 건설 등 사업의 대형화, 패키지화를 통해 ODA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개도국 산업인재의 국내 학위연수 및 지역 산업체 직무실습을 지원하는 사업(68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기반 강화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신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새로운 외교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9억원)할 계획이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 사우스 등 새로운 협력 지역과 경제·인프라·인적교류 등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68억원)를 개최하여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 확대(225 → 256억원)하고, 해외 동포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학업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31억원)을 신규 추진하여 차세대 인재의 국내 유치와 정착,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유대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 남북협력기금 확대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 지원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여 남북 공동성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이와 함께 국민합의에 기반한 대북·통일정책 마련을 위해 통일관련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맞춤형 평화·통일문화체험 확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실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등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표 10-1]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77,218	70,395	△8.8
외교·통상 부문	66,563	57,576	△13.5
통일 부문	10,654	12,819	20.3

10-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외교·통상 부문

-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위해 ODA를 국익 연계형으로 개편하고, 신정부 정책에 맞춘 외교 전략과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해 5조 7,57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2025년) 6조 6,563억원 → (2026년) 5조 7,576억원 (△13.5% 감소)

(1) 국익 연계 실용적 ODA로 개편

2026년 ODA 예산은 5,4조원으로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를 중점 추진한다.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사업을 확대한다. 우선, 개도국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인재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개도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국내 학위연수 및 지역 산업체 직무실습을 지원하는 사업(68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부처별 산재한 소규모 초청연수를 통·폐합하여, KOICA 신속 트랙 플랫폼을 통한 통합 초청연수 브랜드 사업(30억원)을 신설한다.

우수 기술·제품을 가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연계한 ODA를 지원한다.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452 → 529억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팀스(TIPS), 조달청 혁신제품 제도와 연계를 강화한다. 철도차량 공급, 랜드마크 건설 등 가시성·효과성 높은 대형 사업 위주로 EDCF 대개도국 차관(1.4 → 1.6조원)을 확대한다. 또한 우리 강점을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7면

제2부

2026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살린 전략형 ODA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부(KOICA)의 개발협력 전문성과 각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을 결합한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 사업을 확대(127 → 320억원)한다.

[표 10-2] ODA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 ODA 규모 〉 * 외교·통일 분야 외 타분야 포함	65,835	53,548	△18.7
EDCF 대개도국차관	13,747	16,275	18.4
KOICA 개도국 기술인재 양성 지원	-	68	순증
KOICA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	127	320	151.6

(2)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기반 강화

국제정세와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새로운 외교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9억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등 새로운 협력 지역과의 경제, 인프라, 인적 교류 등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기반을 한층 넓힐 예정이다. 또한 2026년에는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첫 번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68억원)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 확대(225 → 256억원)하였다.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주요 외교계기와 연계한 기념사업도 추진하여 국제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외교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신설(7억원)하였다.

아울러 해외 동포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유치·정착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도 신규(31억원) 추진된다. 학업 지원(150명)에는 국내 대학 등록금 50% 지원, 어학연수, 학업장려금 등이 포함되며, 취업 지원(250명)에는 직업교육 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정착금 등이 제공된다.

[표 10-3] 외교·통상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 외교·통상 부문 〉	66,563	57,576	△13.5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	9	순증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2	68	2,752.3
공공문화외교	225	256	13.7
재외동포 인재 유치·정착	-	31	순증

통일 부문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 지원 등을 위해 통일 부문 총지출은 1조 2,819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 통일 : (2025년) 1조 654억원 → (2026년) 1조 2,819억원 (20.3% 증가)
 - ☞ 남북협력기금 : (2025년) 7,981억원 → (2026년) 10,001억원 (25.3% 증가)

(1)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

국민주권정부로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대북·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추진(17.5억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및 대상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7억원)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협업형 평화통일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3억원)한다.

아울러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민주 시민 교육을 추진하다. 자유·안보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토론형 교육으로 전환(1.1 → 2.2억원)하고, 국민들의 통일현장 견학을 확대하여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9.5억원), DMZ 평화 걷기 사업(2억원)을 추진하며, 북한자료 접근·이용에 관한 핵심 거점인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완공(129 → 147억원)하여 국민의 대북·통일인식 및 정책 참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평화공존과 남북교류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복합 플랫폼인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를 새로 건립(총사업비 396억원)한다.

(2) 남북협력기금 확대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견인하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공동성장의 미래를 위한 경제교류협력보험(25 → 37억원), 경험기반(무상)(1,026 → 2,209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59 → 73억원), 개성공단 기반조성(21 → 35억원) 등 분야별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산림·환경협력 등 민생협력지원 사업(4,759 → 5,554억원) 등에 지원을 확대한다.

(3) 인도적 문제 해결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이산가족의 날',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법정기념일 행사(각 1억원)를 개최하여 이산가족·납북자 가족 등의 아픔을 치유하고 대내외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 확대(47 → 63억원), 심리안정지원 강화(5 → 10억원) 등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고용·심리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표 10-4] 통일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 통일 부문 〉	10,654	12,819	20.3
국내통일기반조성	87	94	7.8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2	130	6,50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351	366	4.4
경제교류협력보험	25	37	49.5
경협기반(무상)	1,026	2,209	115.2
경제교류협력대출	59	73	25.3
개성공단 기반조성	21	35	62.5
민생협력지원	4,759	5,554	16.7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정답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1 재정지원 방향

- 2026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27.3조원으로 2025년도 25.0조원 보다 9.2% 증가하였다. 특히 2026년에는 현장대응 인력·장비 확충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안전 사고에 대비한 예방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였다.

📌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 수법 고도화에 대응하여 현장 중심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신입 경찰 인력 충원 확대 및 저위험층 확충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AI 기술 도입과 미약 탐지 장비 확충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범죄피해구조금을 개편하고, 국선번호인 증원 및 회생법원 신설 등을 지원한다. 교정, 검찰, 경찰 등 시설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투자를 축소하고, 재난안전 시설 보강에 집중 투자하여 실질적 안전성을 강화한다.

📌 재해 예측·예방·대응 지원 강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해 예측·예방·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 잦은 태풍 등 풍수해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우수저류시설설치 등 예방 인프라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그리고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의 재해위험요인 일괄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해경 등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대응기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중용량포시스템 등 현장 대응 장비를 확충·고도화하는 한편, 노후아파트 화재 연기감지기 보급 등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규모 재난 대응력도 강화한다.

[표 1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a)	2026년(b)	증감률((b-a)/a)
합계	250,031	272,989	9.2
법원 및 헌재	24,621	26,701	8.4
법무 및 검찰	46,212	49,349	6.8
경찰	139,078	147,037	5.7
해양경찰	20,060	21,047	4.9
재난관리	20,062	28,855	43.8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 '신속한 회생 사건 처리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회생법원 이전 및 신설과 통합도산 지원센터 설치, 저소득층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 ☞ 서울회생법원 이전 : (2025년) 0억원 → (2026년) 169억원
 -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설치 : (2025년) 0억원 → (2026년) 30억원
 - 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 : (2025년) 0억원 → (2026년) 4억원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 (2025년) 14억원 → (2026년) 30억원
- 한편 법원 청사 내·외부의 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사 유리문 강화필름 부착, 소형 화물 투시기 추가 설치, 형사 법정 내 안전 방호막을 설치한다.
 - ☞ 청사 유리문 강화필름 부착 : (2025년) 0억원 → (2026년) 23억원
 - 소형 화물 투시기 : (2025년) 8억원 → (2026년) 15억원
 - 형사법정 안전방호막 설치 : (2025년) 0억원 → (2026년) 7억원
 - 구치감 승강기 통제장치 설치 : (2025년) 0억원 → (2026년) 2억원

회생법원 설치를 확대하여 회생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를 통하여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회생법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협소한 서울 회생법원 청사를 외부로 이전하고 이전 공간에 법정 등을 설치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과밀화를 해소한다. 또한,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도 신설한다('26. 3.). 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등 도산 관련 유관기관을 통합 배치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통합도산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 기반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와 법정 내 피고인 피습사건 등으로부터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해 보안도 대폭 강화한다. 첫째, 보안 관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후 CCTV 교체 및 X-RAY 화물투시기 28대를 추가 설치한다. 둘째, 각급 법원 청사 유리문에 강화 필름을 부착하고('26년 12개 법원) 109개 형사 법정 내 안전방호막 설치 등 법정 내부 안전을 확보한다. 셋째, 91개 구치감 승강기에 출입통제장치를 설치를 통해 구속 피고인의 도주 방지를 강화한다.

[표 11-2]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합계	24,621	26,701	8.4	
서울회생법원 이전	-	169	순증	공사비 56, 보증금 69 등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	29	순증	서울법원종합청사 과밀화 해소
대전회생법원 설치	-	14	순증	설계비 및 1년차 공사비
대구회생법원 설치	-	10	순증	설계비 및 1년차 공사비
광주회생법원 설치	-	6	순증	청사 내 설치
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	-	4	순증	서울회생 10개소, 광주회생 4개소
저소득층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14	30	118	미지급금 해소 및 최근 증가세 반영 등
강화필름 부착	-	23	순증	전국 12개 법원 설치
노후 CCTV 교체 및 설치	26	25	△3.0	아날로그 카메라 교체, 디지털 카메라 화소 상향
X-Ray 소형화물 투시기 보급	8	15	104	28대 설치
형사법정 안전방호막 설치	-	7	순증	형사법정 109개소 설치
구치감 승강기 통제장치	-	2	순증	91개소 설치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연설문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법무 및 검찰 부문

- 첨단 수사기술과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보이스피싱 등 지능화·국제화되는 범죄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재범 위험군에 대한 치료·관리 강화를 통해 범죄 재발을 예방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에 대한 회복·자립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사회통합 기반을 확충하여 범죄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 ☞ 마약수사 : (2024년) 96억원 → (2025년) 106억원
 - ☞ 범죄피해자 치료자립 지원 : (2024년) 214억원 → (2025년) 278억원
 -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 (2024년) 126억원 → (2025년) 148억원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2024년) 176억원 → (2025년) 216억원

지능화·국제화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의 유입 단계부터 차단하고, 재범 위험군 관리와 피해 회복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함께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 보호·관리와 수용자 가족 지원을 통해 범죄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 기반을 확충한다.

먼저, 마약류 범죄와 같이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첨단 마약수사 장비를 확충하고,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유입 경로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수사 역량 고도화와 함께 불법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마약 범죄의 유입과 확산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여,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조직적·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중국 등 주요 거점국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총책 검거 중심의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동시에 대검찰청 '전센터'(보이스피싱 진위확인 서비스)를 지속 운영·보완하여 국민이 범죄를 인지하기 전 단계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범죄 발생 이후에는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둔다. 범법 정신질환자의 이상·공격 행동을 조기에 인지·관리하기 위해 AI 기반 행동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범 고위험 출소자의 재범 차단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수용 시설을 확충하고, 치료·관리와 사회 복귀 지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뒷받침한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단속 이후의 관리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법정 이수명령 대상 확대와 함께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개별 재활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범 특성을 고려한 첨단 치료기기를 활용하여 치료·재활의 실효성을 높인다. 단약 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출소 이후까지 연계되는 회복이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사망·장해·중상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미성년 자녀·손자를 잃은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두터운 보상을 통해 생계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생계 위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비를 신설하여 피해 직후의 생활 공백을 완화한다. 상담·치료·법률·의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스마일센터의 야간·주말 운영을 확대하고, 살인 피해 유가족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심리적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분산된 피해자 지원 정보를 연계하는 온라인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한편,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 보호·관리는 인권 보호와 사회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보호기간 상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독립적·중립적 심의·구제를 담당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보호처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동시에 체류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정착이 지역사회 치안과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체성 교육과 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사회 통합 기반을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의 구속으로 돌봄 공백에 놓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생필품 및 학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신청자 선별 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국가 지원이 필요한 수용자 자녀 전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출소 후 사회 복귀를 함께 도모한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초공용계획

[표 11-3] 법무 및 검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합계	46,212	49,349	6.8	
마약수사	96	106	10.4	· 마약수사관 상호 파견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7.3	8.4	15.1	· AI 국제규범 대응 범위 확대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214	278	30.5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 스마일센터 주말·야간 운영 ·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 살인 피해 유가족 치료 프로그램
범죄피해구조금	96	118	23.1	·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26	45	71.7	· 대한상사중재원 온라인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소년원생수용	270	292	8.2	· 인성교육·직업훈련 확대
갱생보호	468	485	3.4	· 보호수용 시설 확충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126	148	17.4	· 시기반 행동분석시스템 구축
보호관찰활동	171	177	3.4	·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운영
외국인보호관리	214	240	12.1	· 외국인보호처분에 대한 구제 강화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76	216	22.7	· 동포체류지원 및 사회통합교육 강화
마약류 수용자의 전주기 관리강화	12	57	386.8	· 마약류 수용자 전담 교육실 등 조성 및 치료 등
수용자 위기자녀 지원	2	6	150	· 수용자의 구속으로 돌봄 사각지대 미성년 자녀 지원

경찰 부문

-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통한 민생·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해 피싱·마약 등 범죄 수사 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 및 관계성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대응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현장 대응력 및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장비·시스템에 투자를 확대하며, 치안 환경 변화에 상응한 경찰 직무 역량 제고를 위해 실전형·체험형 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신형장비를 보급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사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 ☞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 (2025년) 131억원 → (2026년) 249억원
- ☞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 : (2025년) 69억원 → (2026년) 96억원
- ☞ 사회적약자보호활동 : (2025년) 165억원 → (2026년) 185억원
- ☞ 해외치안협력강화 : (2025년) 121억원 → (2026년) 137억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인력·장비 등 치안인프라를 확충한다.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경찰관을 전년 대비 1,600명 충원하여 年 6,400명을 채용·교육하고, 저위험권총 및 차세대 외근조끼 등 국민과 경찰관 모두의 안전을 위한 현장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및 시·도청 피싱사기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사칭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부서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사기 범죄에 대한 단계적 대응을 강화한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하여 수사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SNS 상 마약 채널 첩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마약범죄 수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를 위한 장비 지원 확대, 이동학대 영상분석 프로그램 전 시·도경찰청 확대 보급한다. 또한,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법무부 간 스토킹 위치추적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한국인 대상 해외 범죄 발생 시 적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파견 인력을 확대하고 국외도피사범 송환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공조체계를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기초공공계획
2026년도 예산 및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외치안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예방 중심의 치안 패러다임 전환과 현장 중심의 실전적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SNS 내 사제총기 제작 등 위험정보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총포·화약·도검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순찰 노선 지정·범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지역경찰업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역량 제고를 위해 실감형 가상훈련(VR)·확장현실(XR)을 활용한 훈련을 확대하고 차세대 외근조끼·신형 전자총격기 등 장비를 현대화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 각종 조서 질문 내용 추천 등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수사서류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스캔 시스템을 확충하여 수사의 신속성·완결성도 제고한다.

[표 11-4] 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합 계	139,078	147,037	5.7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122	131	7.4	· 총포화약 안전관리 등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	69	96	38.6	·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 등
사회적약자보호활동	165	185	12.0	· 사회적약자보호 종합플랫폼 등
해외치안협력강화	121	137	13.4	· 해외파견 인력 증원 등
경찰인재개발	66	118	78.8	· 신입 경찰 총원 확대 등

해양경찰 부문

- 노후 중형 공기부양정 교체, 연안안전관리 드론 도입, 동력구조보드 추가 확보를 통해 연안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고, VTS레이더 확충과 노후 레이더 신규 교체를 통해 해상교통관제 음영구역을 해소하고 해상사고를 예방한다.
 - ☞ 연안구조장비도입 : (2025년) 120억원 → (2026년) 168억원
 -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 (2025년) 74억원 → (2026년) 78억원
 - ☞ VTS 확충 : (2025년) 14억원 → (2026년) 53억원
 - ☞ VTS 개량 : (2025년) 126억원 → (2026년) 216억원
- 한편,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전담함정(2척)과 서해 전력 증강을 위한 대형함정(3척) 건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CCTV 영상 분석 프로그램 확충, 범피증거물 보관장비 도입, 신속한 통신수사를 위한 조회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미약 밀반입 등 해상에서의 각종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 함정건조 : (2025년) 1,571억원 → (2026년) 2,025억원
 - ☞ 범피수사활동 : (2025년) 79억원 → (2026년) 95억원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안사고 위험이 높은 중부권 5개 파출소에 연안안전관리 드론을 도입한다.

또한, 갯벌 등 저수심 해역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내용연수(15년)를 초과한 노후 중형 공기부양정을 교체하고, 동력구조보드를 전국 파출소에 보급할 수 있도록 확충하여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력을 강화한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상교통을 관리하는 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 센터 레이더 4개소(부산기장·새만금신항·거제도·청산도)를 확충하여 레이더 음영구역을 해소하고, 노후 레이더 지속적 교체(19대)로 성능을 개선한다.

한편, 불법 외국 어선의 고의적 시간별기(조종실 철문 봉인 후 NLL 이북 도피 등) 및 강력한 저항 등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불법조업 어선에 직접 계류가 가능하도록 함정 높이 상향 및 충격흡수 시설을 갖춘 단속전담함정(400톤급)을 도입하고, 서해상 주변국의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기초공공계획
2026년도 예산 및

해양구조물 설치 및 해양조사활동 등 주변해역 감시 및 대응 강화를 위한 3천톤급 대형함정 3척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선박을 활용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 및 유통 근절을 위해 효율적인 영상정보 수집 분석을 위한 CCTV 영상 축약·분석 프로그램* 등 신종 단속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신속한 통신수사를 위한 조회시스템 구축으로 범죄수사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 30분 길이 CCTV 영상을 53초로 요약, 1주일 분량을 7시간만에 분석 가능

[표 11-5] 해양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합계	19,923	20,885	4.8	
연안구조장비도입	120	168	40.4	노후 공기부양정, 연안구조정 교체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74	78	6.3	연안구조장비 도입
VTS 확충	14	53	283.6	교통관제 음영구역해소
VTS 개량	126	216	71.3	레이더 성능개선
함정건조	1,571	2,025	28.9	단속 및 서해전력 강화
범죄수사활동	79	95	20.9	마약수사장비, 통신수사시스템

재난관리 부문

-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호우·태풍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원 등을 집중 투자하고,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안전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 ☞ 재해위험지역 정비 : (2025년) 8,803억원 → (2026년) 10,688억원
 - ☞ 재난대책비 : (2025년) 3,600억원 → (2026년) 10,100억원
- 대형화재, 산불, 전기차화재 등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 장비·훈련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생활 속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아파트 화재 연기감지기 보급,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을 신규 지원한다.
 - ☞ 노후아파트 화재 연기감지기 보급(신규) : (2026년) 72억원
 -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신규) : (2026년) 23억원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산사태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사업을 지속 확대 지원한다. 펌프장 설치, 지방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급경사지 정비 등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방정부가 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재해위험 정비를 추진하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25년 0.9조원 → '26년 1.1조원).

특히, 풍수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하천·펌프장·하수도 등 각각의 개별시설을 통합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일괄 정비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대폭 확대(신규 35 → 42개소)하였다. 아울러, 대규모 강우시 빗물을 일시에 저장하여 도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도 신규 설치(+6개소)하는 등 재해예방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재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대책비를 대폭 확대한다.('25년 3,600억원 → '26년 10,100억원) 또한, 재난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 재난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재난 피해자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 및 대응할 계획이다.

그리고 AI·드론 등을 활용하여 재해예측·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드론을 재난안전상황실에 연계하는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재난안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난 대응 사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고위험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특수 소방장비를 지속 확충한다. 산불·화학재난·집중호우 등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헬기, 고성능화학차, 초대형 물탱크차 등 특수장비를 도입하고,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소화약제 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대용량 및 중용량 포 방사시스템을 전국 권역에 배치하여 대형 유류·화학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도입 및 노후 구급차 교체를 통해 국민 체감형 소방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재안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생활 속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에 화재 연기감지기를 신규 보급하고, 소방력 도착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불 비상소화장치를 산림인접마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하여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표 11-6] 재난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사업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비고
합계	22,728	20,062	△11.7	
재해위험지역 정비	8,803	10,688	21.4	전국 922개소 정비
재난대책비	3,600	10,100	180.6	재난피해 복구비 (주택, 공공시설 복구비 등)
국민안전산업펀드	-	50	순증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노후아파트 화재 연기감지기 보급	-	72	순증	연기감지기 50만 세대 보급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	23	순증	456개소 설치 지원
중용량포 방사시스템	-	88	순증	중용량포 방사시스템 4대 도입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12-1 재정지원 방향

- 2026년 일반·지방행정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21.4조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한 수준이다. 2026년에는 AI 정부 실현, 첨단전략산업 분야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및 과거사 극복 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AI 정부 실현

공공부문 AI 대전환 지원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업무 생산성 향상 등 AI혁신정부 구현에 중점 투자한다. 행정데이터 학습이 가능한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토대로 '26년에는 서비스 고도화·연계에 집중하고, 자료 검색, 문서 초안 작성 등 기본적인 서비스와 함께 각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를 구축·공유한다.

한편 국민들이 지역간 격차 없이 균등한 디지털 행정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AI확산도 지원한다. 민원접수 일자리·복지 등 개인 맞춤형 혜택 추천 등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통서비스를 AI로 표준화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로 확산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및 청년층 금융지원 강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 하기 위해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월 납입한도 50만원에 대해 가입유형에 따라 최대 6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매칭하여 저소득 청년에게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행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율을 차등화하여 지역간 격차를 완화한다.

또한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확산 구축 및 확산 등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한편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우대원칙을 시범 도입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포괄보조) 규모 및 대상도 확대하여 지역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자율성을 강화한다.

☞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 등 극복에 국가책임 강화

국가폭력 피해자·유족들을 위한 트라우마치유시설의 운영에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시설건립을 지원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강제동원 피해자 추념을 위한 국외 추모조형물 건립 등도 지원한다.

[표 12-1]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1,106,710	1,213,657	9.7
지방행정·재정지원	689,216	725,339	5.2
재정·금융	351,390	413,703	17.7
입법 및 선거관리	11,666	12,993	11.4
정부자원관리	11,165	16,408	47.0
일반행정	36,527	36,684	0.4
국정운영	6,745	8,530	26.5

1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현안 해결 등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 (2025년) 68조 9,216억원 → (2026년) 72조 5,339억원 (5.2% 증가)

지방교부세는 2025년 67.0조원에서 2026년 69.3조원으로 3.5% 증가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15조원) 확대, 지방채 인수(0.1조원 → 1.0조원) 등으로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전체규모는 68.9조원에서 72.5조원으로 +3.6조원 증가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지원을 의무화하고, 국비지원 규모 대폭 확대(－→ 1.15조원) 및 국비할인율 인상 등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 2026 여수세계 섬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지역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섬 방문의 해’를 지원(20억원)하고, 지방정부가 공중화장실 내 안전관리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상시형 불법촬영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 설치를 신규로 지원(63억원)하였다.

한편 섬 발전 협력 및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를 추진한다.

[표 12-2]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689,216	725,339	5.2
지방교부세	670,385	693,550	3.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11,500	순증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섬방문의 해 지원)	－	20	순증
지역발전활성화(안전한 화장실 조성)	1	64	5,682

제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서설

제2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재정 · 금융 부문

- 서민금융, 미래 성장동력 확보, 청년 · 지역경제 지원 등을 위해 재정 · 금융부문에 41조 3,703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5년) 35조 1,390억원 → (2026년) 41조 3,703억원 (17.7% 증가)

저소득 ·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성격이 유사한 기존 햇살론 상품을 통 · 폐합하여 상품체계를 단순화하고 상품 취급 창구를 확대하여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한다. 나아가 특례보증 상품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저소득 · 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국가보증채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연기금 · 민간금융 · 국민 등)을 활용하여 5년간 총 15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고,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청년도약계좌 대비 혜택을 대폭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을 지속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표 12-3] 재정 · 금융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351,390	413,703	17.7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1,297	순증
국민성장펀드	-	10,000	순증
청년미래적금	-	7,446	순증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000	500	△50.0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 헌법개정 논의 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의견수렴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국회 조성 및 안전한 의정활동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선거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입법 부문의 경우 헌법개정 논의에 대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의 개헌 공감대 확산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사업 및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안전한 의정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보안취약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중요장소 사각지대 CCTV 증설 등 상시보안 체계를 강화한다.

선거관리 부문의 경우 '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소 설치·모니터링 강화 및 선거장비 및 물품 신규제작 등 관련 예산을 증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선거정보시스템 보안 및 방호 강화 등을 위해 독립 건물인 선거 정보센터 신축 예산이 신규 반영 되었다.

[표 12-4]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11,666	12,993	11.4
헌법개정 논의 지원	-	71	순증
청사 안전·보안 강화	22	47	113.6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0.5	188	37,600
선거정보센터 신축	-	2.5	순증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서면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정부자원관리 부문

-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전산망 신속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재난 대응력을 제고한다.
 ☞ (2025년) 1조 1,165억원 → (2026년) 1조 6,408억원 (47.0% 증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민이 문의하면 AI가 부처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국민 중심의 통합민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신규, 18억원). 또한, 민간기업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한다(신규, 40억원).

공공부문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반복적 업무 자동화, 협업도구 연계 등 업무관리 혁신을 지원하고(42 → 187억원),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해나갈 계획이다(신규, 206억원).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국가전산망이 복구될 수 있도록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을 조속히 추진한다(3,434억원). 또한, 향후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와 배터리를 분리하는 등 시설 안정성도 강화한다.

[표 12-5] 정부자원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11,165	16,408	47.0
전자문서소통시스템	105	262	148.4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	206	순증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1,733	4,107	137.0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831	1,920	131.1

일반행정 부문

- 과거사 명예 및 피해회복 지원으로 국민 화해와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사시설 유지·관리, 통계조사, 정부포상 등을 확대하여 안정적 정부 운영을 지원한다.
 ☞ (2025년) 3조 6,527억원 → (2026년) 3조 6,684억원 (0.4% 증가)

국민통합을 위해 발전적 과거사 해결을 도모한다.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20억원 → 38억원)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추념 등을 위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건립(184억원),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7억원),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조형물 건립(4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경제 총조사(14억원 → 659억원), 청사시설 관리 및 위탁(1,391억원 → 1,479억원), 정부포상(108억원 → 134억원) 등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정부 운영지원 및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표 12-6] 일반행정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 계	36,527	36,684	0.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20	38	93.9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	184	순증
경제총조사	14	659	4,519.8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1,391	1,479	6.3
정부포상	108	134	24.3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서정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정운영 부문

- 국정과제의 실천과제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경인사연 PBS제도를 폐지하여 출연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다.
 ☞ (2025년) 6,745억원 → (2026년) 8,530억원 (26.5% 증가)

기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과도한 수탁과제 몰입을 방지하고 출연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과제 수주 경쟁을 통하여 인건비·경상비를 충당하던 PBS제도를 폐지하여 연구기관의 인건비·경상비를 출연금으로 100% 지급(1,293억원 추가소요)한다. 또한, 당초 정부부처에 있던 연구용역 예산을 연구기관 일반사업 내 '정부지원과제' 항목(신규, 230억원)으로 이관하여 부처의 연구과제를 신속하게 수행한다.

PBS 폐지 이후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양에서 질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의무 평가 대상 보고서의 수를 확대한다. 또한, 부처의 연구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정부의 국정과제 등 국가의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연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표 12-7] 국정운영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a)	2026년 (b)	증감률 ((b-a)/a)
합계	6,745	8,530	26.5
경인사연 출연연구기관	5,454	7,176	31.6

제3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제1장 2026년도 예산

제2장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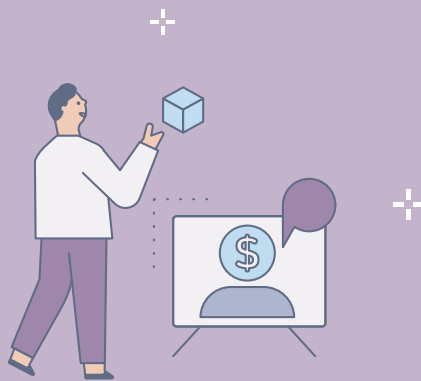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6

제1장

2026년도 예산

1. 2026년도 예산총칙
2. 일반회계
3. 특별회계
4. 계속비
5. 명시이월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20 **나라살림**
26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6

01

2026년도 예산총칙



■ 제1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507,599,746,420,000 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395,554,000,000 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6,607,627,000,000 원
④ 등기특별회계	288,517,000,000 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30,284,000,000 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382,961,000,000 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7,058,176,000,000 원
⑧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435,354,000,000 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9,384,000,000 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58,268,000,000 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90,366,000,000 원
⑫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30,336,000,000 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62,478,000,000 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6,089,000,000 원
⑮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911,235,000,000 원
⑯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7,339,932,000,000 원
⑰ 영유아특별회계	9,294,789,000,000 원
⑱ 양곡관리특별회계	2,611,728,000,000 원
⑲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08,451,000,000 원
⑳ 조달특별회계	788,225,000,000 원
㉑ 우편사업특별회계	5,410,731,000,000 원
㉒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556,659,000,000 원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서정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사랑
캠페인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안용계획

- 제2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2026년도 계속비는 별첨「계속비」와 같다.
-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 제5조 2026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명시이월비」와 같다.
- 제6조 202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 제8조 2026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40,000,000,000,000 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 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0,000,000,000 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 원

- 제9조 2026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9,000,000,000,000 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227,400,000,000,000 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5,0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④ 외국환평형기금(원화)	13,665,000,000,000 원

-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번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연설문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초연용계획

-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2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55,324,000,000 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90,000,000,000 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14,274,000,000 원

■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855,969,000,000 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69,635,000,000 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6,008,000,000 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521,195,000,000 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1,055,324,000,000 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94,418,000,000 원

■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6년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3,381,780,000,000 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서정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0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s



2-1 세입예산 (Revenue Budget)

가. 총괄표

구 분 Classification	2025년도 본예산 FY 2025 Main Budget		2025년도 추경예산 FY 2025 Supplementary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내국세 (Internal Taxes)	338,129,200	71.4	329,151,889	66.2
2. 관세 (Customs Duties)	8,409,300	1.8	8,409,300	1.7
3.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104,800	3.2	14,001,191	2.8
4. 교육세 (Educational Tax)	6,040,200	1.3	5,776,493	1.2
5.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4,121,500	0.9	4,121,500	0.8
6.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101,854,421	21.5	135,505,464	27.3
• 국채발행 (Borrowing from Bonds)	82,765,297	17.5	114,948,803	23.1
• 기타수입 (Others)	19,089,124	4.0	20,556,661	4.1
합 계 (Total)	473,659,421	100	496,965,837	100

※ 일반회계 세입 규모임.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정답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6년도 예산 FY 2026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343,889,346	67.7	5,760,146	1.7	14,737,457	4.5
7,221,426	1.4	△1,187,874	△14.1	△1,187,874	△14.1
16,412,159	3.2	1,307,359	8.7	2,410,968	17.2
6,443,294	1.3	403,094	6.7	666,801	11.5
4,623,299	0.9	501,799	12.2	501,799	12.2
129,010,222	25.4	27,155,801	26.7	△6,495,242	△4.8
108,304,108	21.3	25,538,811	30.9	△6,644,695	△5.8
20,706,114	4.1	1,616,990	8.5	149,453	0.7
507,599,746	100	33,940,325	7.2	10,633,909	2.1

구 분 Classification	2025년도 본예산 FY 2025 Main Budget
1. 국세 (Tax Total)	371,805,000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338,129,200
나. 관세 (Customs Duties)	8,409,3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104,80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6,040,200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4,121,500
2.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101,854,421
가.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5,554,167
나.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8,062,410
다.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1,054,294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13,062
마.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3,818,802
바.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424
사.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Excess Fund)	8,500
아. 세계잉여금 (Net Carry Over)	—
자.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83,142,762
(국채발행) (Government Bonds Floatation)	82,765,297
합 계 (Total)	473,659,421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5년도 추경예산 FY 2025 Supplementary Budget	2026도 예산 FY 2026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율(%) Rate	금액 Amount	증감율(%) Rate
361,460,373	378,589,524	6,784,524	1.8	17,129,151	4.7
329,151,889	343,889,346	5,760,146	1.7	14,737,457	4.5
8,409,300	7,221,426	△1,187,874	△14.1	△1,187,874	△14.1
14,001,191	16,412,159	1,307,359	8.7	2,410,968	17.2
5,776,493	6,443,294	403,094	6.7	666,801	11.5
4,121,500	4,623,299	501,799	12.2	501,799	12.2
135,505,464	129,010,222	27,155,801	26.7	△6,495,242	△4.8
6,803,265	9,084,326	3,530,159	63.6	2,281,061	33.5
8,062,410	8,024,188	△38,222	△0.5	△38,222	△0.5
1,054,294	1,771,365	717,071	68.0	717,071	68.0
213,062	253,346	40,284	18.9	40,284	18.9
3,818,802	1,137,860	△2,680,942	△70.2	△2,680,942	△70.2
424	296	△128	△30.2	△128	△30.2
8,500	45,000	36,500	429.4	36,500	429.4
218,439	—	—	—	△218,439	순감
115,326,268	108,693,841	25,551,079	30.7	△6,632,427	△5.8
114,948,803	108,304,108	25,538,811	30.9	△6,644,695	△5.8
496,965,837	507,599,746	33,940,325	7.2	10,633,909	2.1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안용 계획

나. 국세수입 내역 (Tax Revenues)

구 분 Classification	2025년도 본예산 FY 2025 Main Budget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338,129,200
(1) 소득세 (Income Tax)	126,819,207
(가) 신고분 (Not Withheld Income Tax)	41,469,831
(나) 원천분 (Withheld Income Tax)	85,349,376
(2) 법인세 (Corporation Tax)	88,254,358
(3) 상속세 (Inheritance Tax)	14,505,872
(가) 상속세 (Inheritance Tax)	8,463,696
(나) 증여세 (Gift Tax)	6,042,176
(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87,638,775
(5) 개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	9,666,300
(6) 증권거래세 (Security Transaction Tax)	3,845,400
(7) 인지세 (Stamp Tax)	883,646
(8) 기타내국세 (Other Internal Tax)	6,515,642
나. 관세 (Customs Duties)	8,409,3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104,80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6,040,200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4,121,500
합 계 (Total)	371,805,000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6년도 예산 FY 2026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43,889,346	5,760,146	1.7
132,020,846	5,201,639	4.1
43,054,839	1,585,008	3.8
88,966,007	3,616,631	4.2
86,547,444	△1,706,914	△1.9
17,016,300	2,510,428	17.3
10,946,781	2,483,085	29.3
6,069,519	27,343	0.5
86,603,871	△1,034,904	△1.2
9,434,414	△231,886	△2.4
5,375,303	1,529,903	39.8
773,380	△110,266	△12.5
6,117,788	△397,854	△6.1
7,221,426	△1,187,874	△14.1
16,412,159	1,307,359	8.7
6,443,294	403,094	6.7
4,623,299	501,799	12.2
378,589,524	6,784,524	1.8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서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다. 소관별 세입예산 (Revenues Budget by Agencies)

소 관 Agency	2025년도 본예산 FY 2025 Main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0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297	-	-	297
0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547	-	-	547
03. 국회(National Assembly)	4,518	-	-	4,518
04. 대법원 (Supreme Court)	502,770	-	-	502,770
05.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44	-	-	244
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1,299	-	-	1,299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13	-	-	13
08. 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770	-	-	770
0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9,093	-	-	9,093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Prime Minister's Secretariat)	279	-	-	279
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381,049,480	82,765,297	-	463,814,777
① 내국세 (Internal Taxes)	338,129,200	-	-	338,129,200
② 관세 (Customs Duties)	8,409,300	-	-	8,409,300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104,800	-	-	15,104,800
④ 교육세 (Educational Tax)	6,040,200	-	-	6,040,200
⑤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4,121,500	-	-	4,121,500
⑥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9,244,480	82,765,297	-	92,009,777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392,267	-	-	392,267
13.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371,737	-	-	371,737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73,679	-	-	273,679
15.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1,507	-	-	1,507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1,543,683	-	-	1,543,683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329,476	-	-	329,476
18.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43,392	-	-	143,392
19. 국가보훈부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9,861	-	-	9,861
20.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07,390	-	-	107,390
2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1,333	-	-	21,333
22. 산업통상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188,767	-	-	188,767
23.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279,754	-	-	1,279,754
24. 기후에너지환경부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65,228	-	-	65,228
25.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325,397	-	-	325,397

2026년도 예산 FY 2026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274	-	-	274	△23	-	-	△23
553	-	-	553	6	-	-	6
4,657	-	-	4,657	139	-	-	139
551,610	-	-	551,610	48,840	-	-	48,840
245	-	-	245	1	-	-	1
1,299	-	-	1,299	-	-	-	-
13	-	-	13	-	-	-	-
863	-	-	863	93	-	-	93
9,219	-	-	9,219	126	-	-	126
279	-	-	279	-	-	-	-
388,617,413	108,304,108	-	496,921,521	7,567,933	25,538,810	-	33,106,744
343,889,346	-	-	343,889,346	5,760,146	-	-	5,760,146
7,221,426	-	-	7,221,426	△1,187,874	-	-	△1,187,874
16,412,159	-	-	16,412,159	1,307,359	-	-	1,307,359
6,443,294	-	-	6,443,294	403,094	-	-	403,094
4,623,299	-	-	4,623,299	501,799	-	-	501,799
10,027,889	108,304,108	-	118,331,997	783,409	25,538,810	-	26,322,220
401,537	-	-	401,537	9,270	-	-	9,270
130,719	-	-	130,719	△241,018	-	-	△241,018
363,931	-	-	363,931	90,252	-	-	90,252
1,545	-	-	1,545	38	-	-	38
-	-	-	-	-	-	-	-
1,548,832	-	-	1,548,832	5,149	-	-	5,149
381,782	-	-	381,782	52,306	-	-	52,306
153,126	-	-	153,126	9,734	-	-	9,734
9,846	-	-	9,846	△15	-	-	△15
134,949	-	-	134,949	27,559	-	-	27,559
22,318	-	-	22,318	985	-	-	985
175,074	-	-	175,074	△13,693	-	-	△13,693
1,294,736	-	-	1,294,736	14,982	-	-	14,982
97,633	-	-	97,633	32,405	-	-	32,405
326,445	-	-	326,445	1,048	-	-	1,048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소 관 Agency	2025년도 본예산 FY 2025 Main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26. 성평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32,942	-	-	32,942
27.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971	-	-	200,971
28.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423,100	-	-	423,100
29.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9,821	-	-	249,821
30.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62,005	-	-	62,005
3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2,671	-	-	42,671
33. 국가데이터처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3,579	-	-	3,579
34. 지식재산처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	-
36.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7	-	-	27
38.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30,951	-	-	30,951
3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	-	-	-
40. 공정거래위원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539,426	-	-	539,426
41.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01,107	-	-	101,107
42.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912	-	-	912
43.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2,167	-	-	2,167
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41,010	-	-	41,010
45.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296,420	-	-	296,420
46.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100,291	-	-	100,291
48. 우주항공청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	-	-	-
49.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 Agency)	1,026	-	-	1,026
50.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56	-	-	256
51.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424,172	-	-	424,172
52.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1,465,264	-	-	1,465,264
53.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4,563	-	-	4,563
54. 국가유산청 (Korea Heritage Service)	54,534	-	-	54,534
55.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2,023	-	-	12,023
56.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98,504	-	-	98,504
57.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58,609	-	-	58,609
58.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8,828	-	-	8,828
60.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9,136	-	-	9,136
61.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7,028	-	-	7,028
합 계 (Total)	390,894,124	82,765,297	-	473,659,421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6년도 예산 FY 2026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34,697	-	-	34,697	1,755	-	-	1,755
243,957	-	-	243,957	42,986	-	-	42,986
89,189	-	-	89,189	△333,911	-	-	△333,911
250,225	-	-	250,225	404	-	-	404
110,575	-	-	110,575	48,570	-	-	48,570
47,044	-	-	47,044	4,373	-	-	4,373
3,693	-	-	3,693	114	-	-	114
701,827	-	-	701,827	701,827	-	-	701,827
57	-	-	57	30	-	-	30
-	-	-	-	△30,951	-	-	△30,951
20,613	-	-	20,613	20,613	-	-	20,613
609,684	-	-	609,684	70,258	-	-	70,258
155,827	-	-	155,827	54,720	-	-	54,720
794	-	-	794	△118	-	-	△118
2,360	-	-	2,360	193	-	-	193
63,134	-	-	63,134	22,124	-	-	22,124
311,025	-	-	311,025	14,605	-	-	14,605
52,737	-	-	52,737	△47,554	-	-	△47,554
1,679	-	-	1,679	1,679	-	-	1,679
1,015	-	-	1,015	△11	-	-	△11
334	-	-	334	78	-	-	78
668,475	-	-	668,475	244,303	-	-	244,303
1,476,290	-	-	1,476,290	11,026	-	-	11,026
5,158	-	-	5,158	595	-	-	595
52,949	-	-	52,949	△1,585	-	-	△1,585
11,635	-	-	11,635	△388	-	-	△388
101,956	-	-	101,956	3,452	-	-	3,452
22,708	-	-	22,708	△35,901	-	-	△35,901
10,984	-	-	10,984	2,156	-	-	2,156
8,227	-	-	8,227	△909	-	-	△909
7,892	-	-	7,892	864	-	-	864
399,295,638	108,304,108	-	507,599,746	8,401,514	25,538,810	-	33,940,325

제 1 부

제 1 차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결 및

제 2 부

2026년도 나라관세법

제 3 부

기 1000000
2026년도 예산 및

라. 성질별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by Objects)

구 분 Classificati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11.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5,554,167
51. 관유물대여료 (Rent From Land & Buildings)	93,408
52. 정부출자수입 (Dividends & Profits)	1,045,447
53. 전대차관이자수입 (Interest from Tied Loans)	1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Others)	4,415,311
12.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8,062,410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Fine & Confiscation)	3,818,232
57. 변상금 및 위약금 (Indemnities & Penalties)	126,872
58. 가산금 (Penalties to Delinquency)	207,218
59. 기타경상이전수입 (Others)	3,910,088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1,054,294
62. 병원수입 (Hospital Income)	17,498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5,613
65. 면허료 및 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907,438
66. 입학금 및 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1,132
67. 항공항만 및 용수수입 (Revenues from airport, Harbors & Water)	8,390
68. 실습수입 (Revenues from School Experiments)	3,312
69. 잡수입 (Other)	110,911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6년도 예산 FY 2026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9,084,326	3,530,159	63.6
90,467	△2,941	△3.1
1,450,094	404,647	38.7
1	-	-
7,543,764	3,128,453	70.9
8,024,188	△38,222	70.9
3,975,305	157,073	△0.5
141,373	14,501	4.1
222,724	15,506	11.4
3,684,786	△225,302	7.5
1,771,365	717,071	68.0
18,624	1,126	6.4
8,646	3,033	54.0
1,649,258	741,820	81.7
1,109	△23	△2.0
7,141	△1,249	△14.9
3,214	△98	△3.0
83,373	△27,538	△24.8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서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구 분 Classificati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14.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13,062
4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Executive Agency Management)	1,174
51. 관유물대여료 (Sales of Gov't Properties)	2,701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12,708
65. 면허료 및 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171,054
66. 입학금 및 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428
69. 잡수입 (Other)	24,997
15.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3,818,802
71. 고정자산매각대 (Sales of Capital Assets)	6,466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Sales of Land & Intangible Assets)	67,864
73.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Sales of Inventory & Current Assets)	3,744,472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424
75. 융자원금회수 (Collection of Principals A/C' s)	368
77. 전대차관원금회수 (Collection of Counterpart Sub-Loan)	56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Excess Fund)	8,500
84. 유가증권매각대 (Sales of State-holding Stocks)	8,500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83,142,762
91. 전입금 (Transfer from Gen. A/C)	377,465
92. 예탁원금수 (Principal Collection on Deposits)	-
94. 예수금 (Collection of Trust Fund)	82,765,297
95. 예탁이자수입 (Interest from deposit)	-
합 계 (Total)	101,854,421

2026년도 예산 FY 2026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253,346	40,284	18.9
		순감
2,701	-	-
14,088	1,380	10.9
206,577	35,523	20.8
428	-	-
29,552	4,555	18.2
1,137,860	△2,680,942	△70.2
7,066	600	9.3
66,967	△897	△1.3
1,063,827	△2,680,645	△71.6
296	△128	△30.2
240	△128	△34.8
56	-	-
45,000	36,500	429.4
45,000	36,500	429.4
108,693,841	25,551,079	30.7
284,697	△92,768	△24.6
104,028	104,028	순증
108,304,108	25,538,811	30.9
1,008	1,008	순증
129,010,222	27,155,801	26.7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결 및
0면적

제 2 부

2026년도 나관세법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2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가. 총괄표

구 분 Classification	2025년도 본예산 FY 2025 Main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일반 · 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112,786,758	23.8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22,969,245	4.8
3. 통일 · 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4,693,510	1.0
4. 국방 (National Defense)	61,720,102	13.0
5. 교육 (Education)	99,381,483	21.0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4,554,631	1.0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6,124,201	1.3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81,831,646	17.3
9. 보건 (Health)	15,973,595	3.4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10,783,042	2.3
11.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12,321,526	2.6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19,187,205	4.1
13. 통신 (Communication)	1,142,269	0.2
14. 국토 및 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8,920,793	1.9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8,869,415	1.9
16. 예비비 (Reserve Fund)	2,400,000	0.5
합 계 (Total)	473,659,421	100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5년도 추경예산 FY 2025 Supplementary Budget		2026년도 예산 FY 2026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126,981,735	25.6	113,877,253	22.4	1,090,495	1.0	Δ13,104,482	Δ10.3
23,703,127	4.8	24,889,585	4.9	1,920,340	8.4	1,186,458	5.0
4,643,649	0.9	4,054,300	0.8	Δ639,210	Δ13.6	Δ589,349	Δ12.7
61,771,839	12.4	66,382,021	13.1	4,661,919	7.6	4,610,182	7.5
97,145,217	19.5	100,546,006	19.8	1,164,523	1.2	3,400,789	3.5
4,681,130	0.9	5,145,739	1.0	591,108	13.0	464,609	9.9
6,501,600	1.3	5,634,025	1.1	Δ490,176	Δ8.0	Δ867,575	Δ13.3
82,410,993	16.6	89,808,459	17.7	7,976,813	9.7	7,397,466	9.0
15,866,711	3.2	16,230,709	3.2	257,114	1.6	363,998	2.3
11,707,043	2.4	10,452,727	2.1	Δ330,315	Δ3.1	Δ1,254,316	Δ10.7
16,038,372	3.2	16,515,632	3.3	4,194,106	34.0	477,260	3.0
19,343,615	3.9	19,618,330	3.9	431,125	2.2	274,715	1.4
3,059,418	0.6	3,874,983	0.8	2,732,714	239.2	815,565	26.7
10,419,473	2.1	16,011,351	3.2	7,090,558	79.5	5,591,878	53.7
8,891,915	1.8	10,558,626	2.1	1,689,211	19.0	1,666,711	18.7
3,800,000	0.8	4,000,000	0.8	1,600,000	66.7	200,000	5.3
496,965,837	100	507,599,746	100	33,940,325	7.2	10,633,909	2.1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관세법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안요계획

나. 소관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Agencies)

구 분 Classificati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0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95,628
0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139,048
03. 국회 (National Assembly)	776,135
04. 대법원 (Supreme Court)	1,977,639
05.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58,424
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363,407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35,764
08. 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41,656
0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929,000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Prime Minister's Secretariat)	659,106
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40,931,020
• 예비비 (Contingency)	2,400,000
• 일반경비 (General Adm.)	38,531,020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8,593,081
13.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99,322,129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4,221,776
15.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328,907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4,340,427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43,400,743
18.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69,720,872
19. 국가보훈부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6,309,226
20.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3,293,191
2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7,259,351
22. 산업통상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6,084,286
23.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71,004,819
24. 기후에너지환경부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8,187,343
25.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5,718,293
26. 성평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714,248
27.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3,421,254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6년도 예산 FY 2026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05,148	9,520	10.0
132,162	△6,886	△5.0
810,089	33,954	4.4
2,095,880	118,241	6.0
62,109	3,685	6.3
484,745	121,338	33.4
37,171	1,407	3.9
144,365	2,709	1.9
960,500	31,500	3.4
827,808	168,702	25.6
46,726,482	5,795,462	14.2
4,000,000	1,600,000	66.7
42,726,482	4,195,462	10.9
12,836,437	4,243,356	49.4
100,445,001	1,122,872	1.1
3,562,057	△659,719	△15.6
342,356	13,449	4.1
4,614,659	274,232	6.3
45,898,906	2,498,163	5.8
73,173,076	3,452,204	5.0
6,545,284	236,058	3.7
3,803,656	510,465	15.5
6,524,998	△734,353	△10.1
7,443,455	1,359,169	22.3
73,729,282	2,724,463	3.8
7,901,409	△285,934	△3.5
6,539,533	821,240	14.4
889,986	175,738	24.6
27,846,384	4,425,130	18.9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결 및
0편(정)0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구 분 Classificati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28.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3,420,330
29.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171,553
30.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6,408,567
31.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45,733
3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745,075
33. 국가데이터처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562,765
34. 지식재산처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25,268
36.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42,414
37. 국가교육위원회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10,342
38.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48,738
3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
40. 공정거래위원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163,370
41.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4,183,766
42.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05,090
43.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148,765
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64,548
45.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2,004,000
46.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658,250
48. 우주항공청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961,414
49.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 Agency)	107,063
50.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473,196
51.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7,846,163
52.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13,488,033
53.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331,129
54. 국가유산청 (Korea Heritage Service)	1,214,364
55.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940,866
56.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2,188,082
57.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471,706
58.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468,435
5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211,837
60.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112,759
61.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1,992,265
6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16,763
63. 10·2901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10·29 Itaewon Disaster)	—
합 계 (Total)	473,659,421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6년도 예산 FY 2026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236,518	△ 183,812	△ 5.4
8,343,302	2,171,749	35.2
6,842,025	433,458	6.8
60,588	14,855	32.5
775,759	30,684	4.1
456,670	△ 106,095	△ 18.9
623,605	623,605	순증
29,695	4,427	17.5
43,869	1,455	3.4
11,313	971	9.4
-	△ 48,738	순감
72,968	72,968	순증
189,199	25,829	15.8
4,651,626	467,860	11.2
111,719	6,629	6.3
104,462	△ 44,303	△ 29.8
72,884	8,336	12.9
2,097,794	93,794	4.7
689,932	31,682	4.8
1,120,101	158,687	16.5
112,716	5,653	5.3
517,822	44,626	9.4
19,965,293	2,119,130	11.9
14,221,023	732,990	5.4
336,463	5,334	1.6
1,285,507	71,143	5.9
997,290	56,424	6.0
2,495,016	306,934	14.0
513,524	41,818	8.9
547,624	79,189	16.9
285,944	74,107	35.0
202,767	90,008	79.8
2,088,487	96,222	4.8
-	△ 16,763	순감
13,303	13,303	순증
507,599,746	33,940,325	7.2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다. 기능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

기능 Functi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112,786,758	23.8
1) 입법 및 선거관리 (Legislation & Election Administration)	1,139,542	0.2
2) 국정운영 (National Administration)	662,302	0.1
3) 지방행정·재정지원 (Support for Local Administration & Finance)	67,147,094	14.2
4) 재정·금융 (Budget & Finance)	39,413,712	8.3
5) 정부자원관리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1,075,496	0.2
6)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3,348,613	0.7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22,969,245	4.8
1) 법원 및 헌재 (Law Court & Constitutional Court)	2,036,063	0.4
2) 법무 및 검찰 (Justice & Prosecution)	4,365,695	0.9
3) 경찰 (Police)	13,556,285	2.9
4) 해경 (Maritime Police)	1,965,216	0.4
5) 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1,045,986	0.2
3. 통일·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4,693,510	1.0
1) 통일 (National Unification)	364,671	0.1
2) 외교·통상 (Foreign Affairs & Trade)	4,328,839	0.9
4. 국방 (National Defense)	61,720,102	13.0
1)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25,351,601	5.4
2) 전력유지 (Maintenance of Military Force)	18,049,142	3.8
3) 방위력개선 (National Defense Improvement)	17,846,163	3.8
4) 병무행정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473,196	0.1
5. 교육 (Education)	99,381,483	21.0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Pre/Primary/Secondary School Education)	81,010,325	17.1
2) 고등교육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17,686,706	3.7
3) 평생·직업교육 (Lifelong & Vocational Education)	520,680	0.1
4) 교육일반 (General Education)	163,772	0.0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6년도 예산 FY 2026 Budget		증 감 Change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113,877,253	22.4	1,090,495	1.0
1,294,834	0.3	155,292	13.6
827,808	0.2	165,506	25.0
69,457,770	13.7	2,310,676	3.4
37,402,258	7.4	△2,011,454	△5.1
1,558,279	0.3	482,783	44.9
3,336,304	0.7	△12,308	△0.4
24,889,585	4.9	1,920,340	8.4
2,157,989	0.4	121,926	6.0
4,644,354	0.9	278,659	6.4
14,291,010	2.8	734,725	5.4
2,059,252	0.4	94,036	4.8
1,736,980	0.3	690,994	66.1
4,054,300	0.8	△639,210	△13.6
379,527	0.1	14,856	4.1
3,674,773	0.7	△654,066	△15.1
66,382,021	13.1	4,661,919	7.6
26,324,757	5.2	973,156	3.8
19,574,149	3.9	1,525,007	8.4
19,965,293	3.9	2,119,130	11.9
517,822	0.1	44,626	9.4
100,546,006	19.8	1,164,523	1.2
81,857,306	16.1	846,981	1.0
17,972,109	3.5	285,403	1.6
548,902	0.1	28,222	5.4
167,689	0.0	3,917	2.4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기능 Functi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4,554,631	1.0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3,006,629	0.6
2) 관광 (Tourism)	6,210	0.0
3) 체육 (Sports)	6,148	0.0
4)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1,214,364	0.3
5) 문화 및 관광일반 (General Culture & Tourism)	321,280	0.1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6,124,201	1.3
1) 해양환경 (Marine Environment)	141,518	0.0
2) 환경일반 (General Environment)	5,982,683	1.3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81,831,646	17.3
1) 기초생활보장 (Basic Livelihood Guarantee)	21,861,616	4.6
2) 취약계층지원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5,446,608	1.1
3) 공적연금 (Public Pension)	6,236,892	1.3
4) 보훈 (Patriots & Veterans Affairs)	6,309,226	1.3
5) 주택 (Housing)	3,467,064	0.7
6) 사회복지일반 (General Social Welfare)	586,502	0.1
7) 아동·보육 (Children and Child Care Centers)	4,851,839	1.0
8) 노인 (Senior)	26,639,358	5.6
9) 성평등·청소년·가족 (Gender Equality, Youth, and Family)	714,248	0.2
10) 고용 (Employment)	4,853,708	1.0
11) 노동 (Labor)	192,996	0.0
12) 고용노동일반 (Employment and Labor (General))	671,589	0.1
9. 보건 (Health)	15,973,595	3.4
1) 보건의료 (Healthcare)	3,088,951	0.7
2)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12,139,569	2.6
3) 식품의약품안전 (Food & Drug Safety)	745,075	0.2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10,783,042	2.3
1) 농업·농촌 (Agriculture & Farming Villages)	8,200,217	1.7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2,188,082	0.5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394,743	0.1
4) 식품업 (Food)	-	-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6년도 예산 FY 2026 Budget		증 감 Change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5,145,739	1.0	591,108	13.0
3,521,519	0.7	514,890	17.1
7,291	0.0	1,081	17.4
7,341	0.0	1,193	19.4
1,285,507	0.3	71,143	5.9
324,081	0.1	2,801	0.9
5,634,025	1.1	△490,176	△8.0
171,845	0.0	30,327	21.4
5,462,180	1.1	△520,503	△8.7
89,808,459	17.7	7,976,813	9.7
23,986,807	4.7	2,125,191	9.7
5,966,455	1.2	519,847	9.5
6,683,521	1.3	446,629	7.2
6,545,284	1.3	236,058	3.7
7,054,791	1.4	3,587,727	103.5
700,089	0.1	113,587	19.4
5,702,811	1.1	850,972	17.5
25,739,182	5.1	△900,176	△3.4
889,986	0.2	175,738	24.6
5,401,084	1.1	547,376	11.3
321,903	0.1	128,907	66.8
816,546	0.2	144,957	21.6
16,230,709	3.2	257,114	1.6
3,065,949	0.6	△23,002	△0.7
12,389,001	2.4	249,432	2.1
775,759	0.2	30,684	4.1
10,452,727	2.1	△330,315	△3.1
7,513,824	1.5	△686,393	△8.4
2,495,016	0.5	306,934	14.0
435,423	0.1	40,680	10.3
8,464	0.0	8,464	순증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페이지

제 2 부

2026년도 나라갈래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안용 계획

기능 Functi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12,321,526	2.6
1) 무역 및 투자유치(Trade & Investment Inducement)	931,925	0.2
2) 에너지 및 자원개발(Development of Energy & Resources)	2,250	0.0
3) 산업·중소기업일반(General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3,338,713	0.7
4) 산업혁신지원(Support for Industrial Innovation)	5,259,564	1.1
5) 창업 및 벤처(Start-up and Venture)	813,538	0.2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pport)	1,975,536	0.4
7) 지식재산일반 (Knowledge Management (General))	-	-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19,187,205	4.1
1) 도로 (National Road)	6,790,544	1.4
2) 철도 (Railroad)	7,373,964	1.6
3) 해운·항만 (Marine Transportation & Ports)	1,838,594	0.4
4) 항공·공항 (Aviation & Airport)	1,119,568	0.2
5) 물류 등 기타 (Distribution & Others)	2,064,535	0.4
13. 통신 (Communication)	1,142,269	0.2
1) 방송통신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274,609	0.1
2) 정보통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867,660	0.2
14. 국토 및 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8,920,793	1.9
1) 수자원 (Water Resources)	2,187,795	0.5
2) 지역 및 도시 (Region & City)	6,732,768	1.4
3) 산업단지 (Industrial Complex)	230	0.0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8,869,415	1.9
1) 과학기술연구지원 (Support for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3,678,415	0.8
2) 과학기술일반 (General Science & Technology)	701,124	0.1
3)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Science and Technology - Human Resources and Culture)	137,394	0.0
4) 과학기술연구개발 (Science and Technology - Research Development)	4,352,482	0.9
16. 예비비 (Reserve Fund)	2,400,000	0.5
1) 예비비 (Reserve Fund)	2,400,000	0.5
합 계 (Total)	473,659,421	100.0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6년도 예산 FY 2026 Budget		증 감 Change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증감률(%) Rate
16,515,632	3.3	4,194,106	34.0
1,111,231	0.2	179,306	19.2
21,271	0.0	19,021	845.4
4,620,887	0.9	1,282,174	38.4
6,495,326	1.3	1,235,762	23.5
875,607	0.2	62,069	7.6
2,987,948	0.6	1,012,412	51.2
403,362	0.1	403,362	순증
19,618,330	3.9	431,125	2.2
6,418,049	1.3	△372,495	△5.5
8,403,176	1.7	1,029,212	14.0
1,456,635	0.3	△381,959	△20.8
998,636	0.2	△120,932	△10.8
2,341,834	0.5	277,299	13.4
3,874,983	0.8	2,732,714	239.2
327,182	0.1	52,573	19.1
3,547,801	0.7	2,680,141	308.9
16,011,351	3.2	7,090,558	79.5
2,382,439	0.5	194,644	8.9
13,627,937	2.7	6,895,169	102.4
975	0.0	745	323.9
10,558,626	2.1	1,689,211	19.0
4,275,231	0.8	596,816	16.2
792,100	0.2	90,976	13.0
195,029	0.0	57,635	41.9
5,296,266	1.0	943,784	21.7
4,000,000	0.8	1,600,000	66.7
4,000,000	0.8	1,600,000	66.7
507,599,746	100.0	33,940,325	7.2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초연계 계획

라. 성질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s)

구 분 Classificati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44,078,931
11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44,078,931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25,499,316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20,637,953
220 여비 (Travel Expenses)	619,243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97,808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179,194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996,824
260 연구용역비 (Research and Service Expenses)	1,881,302
270 안보비 (National Security Expenses)	929,000
280 정보보안비(Intelligence Security Expenses)	157,992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270,481,680
310 보전금 (Compensation)	25,012,378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 Sector)	11,102,543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204,126,495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2,562,525
350 일반출연금 (General Funds)	7,892,755
360 연구개발출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s)	19,784,985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22,735,503
410 건설보상비 (Compensation Cost for Construction & Facilities)	428,248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6,802,915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13,416,527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31,049
460 출자금 (Investment)	2,056,764
490 지분취득비 (Share of Assets)	—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29,091,646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29,091,646
600 전출금등 (Transfers)	79,370,863
610 전출금등 (Transfers and Others)	79,370,863
70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2,401,482
710 예비비 및 기타 (Reserve Fund and Others)	2,401,482
합 계 (Total)	473,659,421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6년도 예산 FY 2026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46,200,544	2,121,613	4.8
46,200,544	2,121,613	4.8
26,947,833	1,448,517	5.7
21,056,200	418,247	2.0
639,566	20,323	3.3
28,190	△69,619	△71.2
186,829	7,635	4.3
1,055,982	59,158	5.9
2,778,433	897,131	47.7
960,500	31,500	3.4
242,134	84,142	53.3
281,533,812	11,052,132	4.1
26,362,910	1,350,532	5.4
11,283,443	180,900	1.6
204,780,783	654,288	0.3
2,329,141	△233,384	△9.1
12,740,613	4,847,858	61.4
24,036,922	4,251,938	21.5
26,514,624	3,779,121	16.6
467,765	39,517	9.2
7,405,591	602,676	8.9
15,170,801	1,754,274	13.1
57,794	26,745	86.1
3,394,308	1,337,544	65.0
18,365	18,365	순증
25,668,448	△3,423,198	△11.8
25,668,448	△3,423,198	△11.8
96,733,029	17,362,166	21.9
96,733,029	17,362,166	21.9
4,001,457	1,599,975	66.6
4,001,457	1,599,975	66.6
507,599,746	33,940,325	7.2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

제 2 부

2026년도 나관세법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마. 2026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

구 분 Classification	인건비(100) Personnel Expense					
	계 Total	보수(110-01) Wages	기타직보수(110-02)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상용임금(110-03) Wages for Fixed- Term Contract Employees	일용임금(110-04) Wage for Daily Employees	연가보상비(110-05) Stipends for Non- Used Vacations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4,116,836	3,631,575	86,982	293,360	77,311	27,608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7,053,492	16,271,833	219,925	433,656	14,888	113,190
3. 통일·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727,817	491,587	3,546	224,368	6,990	1,326
4. 국방 (National Defense)	19,381,183	18,774,044	26,357	366,181	5,820	208,780
5. 교육 (Education)	265,259	247,604	1,172	15,222	428	833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571,156	312,261	16,393	233,152	7,023	2,327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514	320	—	194	—	—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1,212,003	883,305	118,662	183,585	19,783	6,667
9. 보건 (Health)	394,326	278,750	6,343	105,078	2,021	2,134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1,002,742	721,423	73,341	184,018	18,493	5,467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463,628	401,501	36,813	20,009	2,414	2,891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585,384	487,943	69,329	18,761	5,719	3,632
13. 통신 (Communication)	114,161	101,445	8,810	2,834	275	798
14. 국토 및 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47,088	37,321	536	8,863	65	303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264,953	219,585	9,307	31,951	2,371	1,739
16. 예비비 (Reserve Fund)	—	—	—	—	—	—
합 계 (Total)	46,200,544	42,860,499	677,516	2,121,233	163,601	377,696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물건비(200) Goods Service	이전지출(300) Current Transfer	자산취득(400) Asset Acquisition	상환지출(500) Repayment of Loans	전출금등(600) Transfers	예비비및기타(700) Contingency & Others	합 계 Total
3,440,154	73,003,633	2,664,671	25,668,448	4,982,322	1,190	113,877,253
4,002,925	2,368,691	1,320,172	-	144,140	165	24,889,585
774,961	2,370,703	80,818	-	100,000	-	4,054,300
14,697,167	9,243,641	18,544,311	-	4,515,718	-	66,382,021
195,108	73,056,830	54,749	-	26,974,059	-	100,546,006
687,218	2,997,618	754,180	-	135,553	13	5,145,739
13,347	132,912	25,072	-	5,462,180	-	5,634,025
558,558	73,696,524	156,862	-	14,184,430	81	89,808,459
487,276	14,765,450	146,812	-	436,846	-	16,230,709
682,240	1,442,528	759,274	-	6,565,936	7	10,452,727
410,183	9,259,692	25,450	-	6,356,679	1	16,515,632
363,067	4,732,260	153,607	-	13,784,013	-	19,618,330
76,011	3,621,012	47,791	-	16,008	-	3,874,983
303,645	1,001,477	1,659,622	-	12,999,520	-	16,011,351
255,973	9,840,841	121,234	-	75,625	-	10,558,626
-	-	-	-	-	4,000,000	4,000,000
26,947,833	281,533,812	26,514,624	25,668,448	96,733,029	4,001,457	507,599,746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결 및
0회연계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안용 계획

바. 2026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

구 분 Classification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 방 National Defense	교 육 Education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4,116,836	17,053,492	727,817	19,381,183	265,259	571,156
110 보수 (Wages)	3,631,575	16,271,833	491,587	18,774,044	247,604	312,261
110 기타직보수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86,982	219,925	3,546	26,357	1,172	16,393
110 상용임금 (Wages for fixed-term employees)	293,360	433,656	224,368	366,181	15,222	233,152
110 일용임금 (Daily wages)	77,311	14,888	6,990	5,820	428	7,023
110 연가보상비 (Stipends for Non-Used Vacation)	27,608	113,190	1,326	208,780	833	2,327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3,440,154	4,002,925	774,961	14,697,167	195,108	687,218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926,400	2,769,601	663,535	12,807,172	173,251	600,186
220 여비 (Travel Expenses)	162,430	114,881	66,188	158,236	5,661	15,750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21,167	6,501	521	-	-	-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50,191	43,588	19,328	47,356	1,282	3,579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127,734	844,306	2,496	44,158	1,046	2,584
260 연구용역비 (Research and Service Expenses)	189,436	130,423	21,087	1,500,976	13,869	65,120
270 안보비 (National Security Expenses)	960,500	-	-	-	-	-
280 정보보안비 (Intelligence Security Expenses)	2,296	93,626	1,807	139,270	-	-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73,003,633	2,368,691	2,370,703	9,243,641	73,056,830	2,997,618
310 보전금 (Compensation)	290,295	217,706	30,552	2,452,514	147,032	21,193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 Sector)	424,422	601,175	365,889	814,374	203,015	1,907,142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신 Communication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계 Total
514	1,212,003	394,326	1,002,742	463,628	585,384	114,161	47,088	264,953	-	46,200,544
320	883,305	278,750	721,423	401,501	487,943	101,445	37,321	219,585	-	42,860,499
-	118,662	6,343	73,341	36,813	69,329	8,810	536	9,307	-	677,516
194	183,585	105,078	184,018	20,009	18,761	2,834	8,863	31,951	-	2,121,233
-	19,783	2,021	18,493	2,414	5,719	275	65	2,371	-	163,601
-	6,667	2,134	5,467	2,891	3,632	798	303	1,739	-	377,696
13,347	558,558	487,276	682,240	410,183	363,067	76,011	303,645	255,973	-	26,947,833
7,029	468,808	244,488	566,971	188,607	221,838	60,995	148,705	208,614	-	21,056,200
205	29,911	12,309	21,386	18,176	21,809	2,705	1,941	7,978	-	639,566
-	-	-	-	-	-	-	-	-	-	28,190
13	6,226	1,358	2,886	4,542	3,176	631	486	2,187	-	186,829
488	16,877	2,107	3,858	3,603	3,281	818	325	2,302	-	1,055,982
5,612	36,736	227,013	87,139	194,449	112,964	7,334	152,187	34,090	-	2,778,433
-	-	-	-	-	-	-	-	-	-	960,500
-	-	-	-	806	-	3,528	-	801	-	242,134
132,912	73,696,524	14,765,450	1,442,528	9,259,692	4,732,260	3,621,012	1,001,477	9,840,841	-	281,533,812
7	11,892,714	11,296,660	8,156	3,400	2,054	68	35	524	-	26,362,910
73,445	1,508,308	1,856,613	312,109	1,954,098	822,150	20,820	362,597	57,285	-	11,283,443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계 및
04편(04) 예산안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안(04) 예산안

구 분 Classification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 방 National Defense	교 육 Education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69,389,406	1,084,135	20,633	132,218	72,276,253	798,255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365,773	11,835	747,752	732,691	115,819	11,238
350 일반출연금 (General Funds)	1,819,469	188,423	1,205,877	137,827	179,817	52,722
360 연구개발출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s)	714,268	265,417	-	4,974,017	134,894	207,068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2,664,671	1,320,172	80,818	18,544,311	54,749	754,180
410 건설보상비 (Compensation Cost for Construction & Facilities)	-	3,203	13,480	78,924	296	18,292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116,516	372,533	31,941	5,085,399	48,298	236,650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364,579	911,639	34,131	13,378,675	6,110	67,909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5,211	22,797	1,267	1,314	45	1,329
460 출자금 (Investment)	2,160,000	10,000	-	-	-	430,000
490 지분취득비 (Share of Assets)	18,365	-	-	-	-	-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25,668,448	-	-	-	-	-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25,668,448	-	-	-	-	-
600 전출금 등 (Transfers)	4,982,322	144,140	100,000	4,515,718	26,974,059	135,553
610 전출금 등 (Transfers and Others)	4,982,322	144,140	100,000	4,515,718	26,974,059	135,553
70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1,190	165	-	-	-	13
710 예비비 및 기타 (Reserve Fund and Others)	1,190	165	-	-	-	13
합 계 (Total)	113,877,253	24,889,585	4,054,300	66,382,021	100,546,006	5,145,739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신 Communication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계 Total
24,300	59,455,055	267,675	702,141	13,458	33,561	-	583,693	-	-	204,780,783
1,845	65,989	32,882	170,925	14,277	13,042	5,286	5,262	34,525	-	2,329,141
33,315	774,458	114,285	35,913	2,200,372	3,146,992	2,750,380	49,889	50,874	-	12,740,613
-	-	1,197,335	213,284	5,074,086	714,461	844,458	-	9,697,633	-	24,036,922
25,072	156,862	146,812	759,274	25,450	153,607	47,791	1,659,622	121,234	-	26,514,624
-	1,700	-	66,613	-	-	-	285,207	50	-	467,765
1,840	103,728	13,624	389,666	14,617	50,203	1,920	932,454	6,202	-	7,405,591
23,232	35,096	51,981	226,655	9,242	28,073	13,920	5,066	14,495	-	15,170,801
-	16,338	1,207	2,089	1,591	3,931	152	38	487	-	57,794
-	-	80,000	74,250	-	71,400	31,800	436,858	100,000	-	3,394,308
-	-	-	-	-	-	-	-	-	-	18,365
-	-	-	-	-	-	-	-	-	-	25,668,448
-	-	-	-	-	-	-	-	-	-	25,668,448
5,462,180	14,184,430	436,846	6,565,936	6,356,679	13,784,013	16,008	12,999,520	75,625	-	96,733,029
5,462,180	14,184,430	436,846	6,565,936	6,356,679	13,784,013	16,008	12,999,520	75,625	-	96,733,029
-	81	-	7	1	-	-	-	-	4,000,000	4,001,457
-	81	-	7	1	-	-	-	-	4,000,000	4,001,457
5,634,025	89,808,459	16,230,709	10,452,727	16,515,632	19,618,330	3,874,983	16,011,351	10,558,626	4,000,000	507,599,746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03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회 계 별 Account	2025년도 본예산 FY 2025 Main Budget
(15) 농어촌구조개선 (Agriculture & Fisheries Structure Adjustment S/A)	15,017,289
(17) 교통시설 (Transportation Facilities S/A)	15,557,181
(18) 등기 (Registration S/A)	278,574
(20) 교도작업 (Prison Labor S/A)	123,680
(24) 에너지 및 자원사업 (Energy & Resources Project Management S/A)	6,305,822
(25) 환경개선 (Environment Improvement S/A)	7,346,834
(26)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S/A)	2,284,287
(29) 우체국보험 (Postal Insurance Service S/A)	1,105,924
(34) 주한미군기지이전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of U.S. Armed Forces in Korea S/A)	572,137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Construction of Administrative City S/A)	220,483
(36) 국방 · 군사시설이전(Relocation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 S/A)	1,500,274
(37) 혁신도시건설 (Construction of Innovative City S/A)	204,936
(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Construction of Cultural Hub City of Asia S/A)	120,079
(39) 지역균형발전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A)	14,744,002
(40) 유아교육지원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 S/A)	3,102,013
(41) 고등 · 평생교육지원 (Higher-lifelong Education Support S/A)	16,663,592
(42) 영유아 (The Early Childhood S/A)	—
(51) 양곡관리 (Grain Management S/A)	2,792,542
(52) 책임운영기관 (Agency)	1,267,739
(56) 조달 (Public Procurement S/A)	737,698
(57) 우편사업 (Postal Business S/A)	5,378,351
(58) 우체국예금 (Postal Office deposit S/A)	5,786,760
총계 (Gross Total of Special Accounts)	101,110,197
순계(회계간, 계정간거래 제외)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91,683,729
순계(계정간거래 제외)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97,936,709
순계(일반지출)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82,087,699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5년도 추경예산 FY 2025 Supplementary Budget	2026년도 예산 FY 2026 Budget	본예산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대비 증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율(%) Rate	금액 Amount	증감율(%) Rate
15,551,169	17,395,554	2,378,265	15.8	1,844,385	11.9
15,629,745	16,607,627	1,050,446	6.8	977,882	6.3
278,574	288,517	9,943	3.6	9,943	3.6
123,680	130,284	6,604	5.3	6,604	5.3
6,145,901	6,382,961	77,139	1.2	237,060	3.9
7,724,233	7,058,176	△288,658	△3.9	△666,057	△8.6
2,284,287	2,435,354	151,067	6.6	151,067	6.6
1,105,924	999,384	△106,540	△9.6	△106,540	△9.6
572,137	358,268	△213,869	△37.4	△213,869	△37.4
220,483	290,366	69,883	31.7	69,883	31.7
1,500,274	530,336	△969,938	△64.7	△969,938	△64.7
204,936	162,478	△42,458	△20.7	△42,458	△20.7
121,079	116,089	△3,990	△3.3	△4,990	△4.1
16,215,948	22,911,235	8,167,233	55.4	6,695,287	41.3
3,102,013	-	△3,102,013	순감	△3,102,013	순감
16,306,843	17,339,932	676,340	4.1	1,033,089	6.3
-	9,294,789	9,294,789	순증	9,294,789	순증
2,792,542	2,611,728	△180,814	△6.5	△180,814	△6.5
1,267,739	508,451	△759,288	△59.9	△759,288	△59.9
737,698	788,225	50,527	6.8	50,527	6.8
5,378,351	5,410,731	32,380	0.6	32,380	0.6
5,786,760	5,556,659	△230,101	△4.0	△230,101	△4.0
103,050,316	117,177,144	16,066,947	15.9	14,126,828	13.7
93,424,846	105,348,664	13,664,935	14.9	11,923,818	12.8
99,911,892	112,780,441	14,843,732	15.2	12,868,549	12.9
83,821,422	96,083,303	13,995,604	17.0	12,261,881	14.6

04

계속비 Multiyear Expenditure



(단위: 천원)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	-	-	-	-

0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단위: 천원)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	-	-	-	-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06

국고채무부담행위 Debts from National Treas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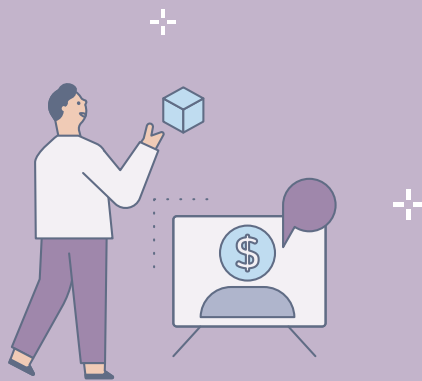
(단위: 천원)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	-	-	-	-

제2장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1. 기금요약
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3. 기금 수입
4. 기금 지출



20 **나라살림**
26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6

01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구분 Classification	기금명 Name of Fund
사회보험성기금 Social Security Fund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계정성기금 Account Fund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 복권기금 (Lottery Fund) -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금융성기금 Financial Fund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Guarantee Fund)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 무역보험기금 (Trade Insurance Fund) -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demption Fund)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국가유산보호기금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Fund) -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 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 -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구 분 Classification	기 금 명 Name of Fund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대응기금 (Korea Climate Action Fund)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 남북협력기금(Inter-Korean Cooperation Fund)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문화예술진흥기금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 보훈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 사학진흥기금 (Fund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Fund for the Patriotic Martyrs and Patriots) -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eomjin River) - 영화발전기금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합 계	총 67개 기금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단위: 조원, In trillion won)

구분 Classification	운용규모 Fund Operation			
	2025년도 FY 2025	2026년도 FY 2026	증감률(%) Rate	
운용규모 (Total)	955.0	990.8	3.7	
수입	■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247.0	261.8	6.0
	■ 정부내부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208.0	203.9	△2.0
	■ 차입금 (Borrowings)	237.7	264.4	11.2
	■ 여유자금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262.2	260.6	△0.6
지출	■ 사업비 (Project Cost)	205.4	222.1	8.1
	• 사회보험성 (Social Security Fund)	114.9	124.6	8.4
	• 사업성 (Project Fund)	76.2	82.3	8.0
	• 금융성·계정성 (Financial/Account Fund)	14.2	15.2	7.0
	■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2.7	3.2	15.9
	■ 정부내부지출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449.0	465.0	3.6
	■ 여유자금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298.0	300.5	0.9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0면적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03

기금 수입 Fund Revenues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총 계 (Total)	2,618,135	2,039,050	2,644,329	2,606,073	9,907,588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218,403	13,800	-	43,905	276,108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7,849	1,019,575	2,256,521	892	3,284,837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239,017	76,409	-	36,194	351,619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48,000	26,206	-	-	74,206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55	1,150	-	25	1,230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13,902	75	-	4,423	18,399
국유유산보호기금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Fund)	109	1,800	-	117	2,026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30,944	15,299	-	2,565	48,808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1,063,855	118	-	783,684	1,847,657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24,564	8,168	-	1,858	34,590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20,349	10,818	-	5,518	36,685
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	690	209	-	459	1,358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5,776	1,139	-	2,918	9,833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8,401	41,095	-	1,500	50,997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8,401	1,626	-	1,976	5,419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1,356	—	—	685	2,042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Guarantee Fund)	16,040	2,603	—	19,884	38,526
기후대응기금 (Korea Climate Action Fund)	8,320	18,557	—	2,180	29,05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535	—	—	128	2,663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391	9,738	—	4,149	14,27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5,110	—	—	17,139	22,24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24,518	2,040	—	3,923	30,48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233	232	—	0	465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1,587	—	—	3,553	5,13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558	29,472	—	1,094	31,124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4,265	10,514	—	3,024	27,802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3,876	19,623	—	291	23,790
무역보험기금 (Trade Insurance Fund)	15,476	705	—	41,550	57,730
문화예술진흥기금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936	4,209	—	1,181	6,32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11,608	41,166	—	57,357	110,131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8,733	500	—	1,253	10,48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60	911	—	480	1,451
보훈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	1,830	1,153	—	2,537	5,520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계 및
연계 예산안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안
기획예산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복권기금 (Lottery Fund)	83,313	3,008	-	9,543	95,8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	64,758	8,266	-	69,367	142,39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2,856	309	-	2,557	5,722
사학진흥기금 (Fund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1,970	1,880	-	261	4,11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476	500	-	6,787	7,763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849	853	-	269	1,97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115,062	50,297	-	43,642	209,002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393	120	-	142	65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40,594	26,498	-	-	67,092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7,004	2,288	-	2,308	11,6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Fund for the Patriotic Martyrs and Patriots)	95	938	-	481	1,514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33,874	800	-	72,341	107,015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21	3,609	-	260	3,890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314	8,066	-	381	8,761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333	-	-	212	54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eomjin River)	1,007	-	-	796	1,803
영화발전기금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367	963	-	365	1,69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demption Fund)	48,767	-	-	100	48,867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14,017	340,806	205,650	790,874	1,351,347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4,026	-	-	3,106	7,132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242	4,207	-	500	4,950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7,140	571	-	1,258	8,969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453	1,545	-	535	2,53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3,361	-	-	1,937	5,2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10,951	7,179	-	6,991	25,121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31,164	4,559	-	9,413	45,137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9,340	1,418	-	449	11,20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18,561	-	-	30,139	48,700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248,652	187,518	141,000	503,360	1,080,530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54,529	19,352	41,158	90	115,129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4	112	-	34	150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134	1,290	-	79	1,504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7,269	3,189	-	757	11,215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5,075	-	-	300	5,375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사항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04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총 계 (Total)	2,220,994	31,525	4,650,037	3,005,031	9,907,588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183,591	1,186	21,394	69,937	276,108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1,000	42	3,283,687	109	3,284,837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299,837	674	1,203	49,904	351,619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	—	73,526	680	74,206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896	7	18	309	1,230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11,976	6	1,490	4,927	18,399
국가유산보호기금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Fund)	1,670	1	223	132	2,026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36,485	1	9,587	2,735	48,808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548,560	5,801	—	1,293,297	1,847,657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16,782	317	8,219	9,273	34,590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13,266	29	14,500	8,889	36,685
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	380	151	616	211	1,358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5,728	—	1,312	2,793	9,833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47,095	4	—	3,898	50,997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833	162	1,264	2,160	5,419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1,140	27	-	874	2,042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Guarantee Fund)	18,773	2,389	-	17,364	38,526
기후대응기금 (Korea Climate Action Fund)	25,886	34	484	2,653	29,05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098	40	-	524	2,663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0,001	22	3,746	509	14,27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4,807	579	-	16,863	22,24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24,688	627	201	4,964	30,48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456	-	-	9	465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 insurance Fund)	500	6	-	4,633	5,13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30,125	2	-	997	31,124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25,958	653	69	1,121	27,802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9,469	281	3,548	492	23,790
무역보험기금 (Trade Insurance Fund)	4,880	1,259	-	51,591	57,730
문화예술진흥기금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5,184	209	226	706	6,32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1,844	14	45,163	63,110	110,131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5,760	41	1,503	3,182	10,48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1,027	1	-	424	1,451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제10편)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안(제11편)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보훈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	1,209	8	608	3,695	5,520
복권기금 (Lottery Fund)	59,430	5	26,709	9,719	95,8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	66,806	316	360	74,907	142,39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1,740	-	300	3,682	5,722
사학진흥기금 (Fund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2,505	82	1,250	275	4,11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666	90	-	7,007	7,763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1,189	12	298	472	1,97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100,024	4,696	50,500	53,782	209,002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460	19	-	177	65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54,709	668	11,715	-	67,092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11,468	7	45	81	11,6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Fund for the Patriotic Martyrs and Patriots)	1,019	1	-	494	1,514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47,423	3,888	60	55,645	107,015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	3,085	804	3,890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8,066	-	373	322	8,761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178	2	112	253	54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eomjin River)	899	18	-	885	1,803
영화발전기금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882	133	-	680	1,696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demption Fund)	27	31	48,000	809	47,496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	3,279	552,130	795,938	1,402,894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4,178	20	-	2,934	6,432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4,682	2	53	212	6,401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8,287	189	26	467	9,142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541	3	1,500	489	2,59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2,878	17	7	2,397	4,8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9,246	891	8,000	6,983	21,829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26,812	78	15,091	3,155	38,752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7,024	233	3,537	414	10,01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14,876	636	-	33,188	48,092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364,645	3	393,047	322,835	1,033,915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52,884	1,517	60,728	-	115,595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118	6	-	27	100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1,300	-	94	109	1,714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8,609	18	431	2,157	10,254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4,517	91	-	767	5,626

제 1 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 채택

제 2 부

2026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6년도 예산 및
기안용 계획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김동규	예산소통협력과 과장	종합 편집
고병국	예산소통협력과 사무관	"
위은정	예산소통협력과 사무관	"
박종협	예산소통협력과 주무관	"
김경국	예산총괄과 과장	제2부 제1장 2026년도 나라살림 종합
신경아	예산총괄과 서기관	"
원봉희	예산총괄과 사무관	"
고영록	예산총괄과 사무관	"
허정태	예산총괄과 사무관	"
이도희	예산총괄과 사무관	"
허장범	예산총괄과 사무관	"
윤동형	예산총괄과 사무관	제3부 중 예산통계
김승하	예산총괄과 주무관	"
장 영	예산총괄과 주무관	"
김동현	예산총괄과 주무관	"
이원종	예산총괄과 주무관	"
박정민	예산정책과 과장	제2부 제1장 2026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부 제2장 2026년도 자원배분 방향,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정민철	예산정책과 서기관	"
박근형	예산정책과 사무관	"
김진수	예산정책과 사무관	"
김유현	예산정책과 사무관	"
황보환	예산정책과 사무관	"
진선홍	예산정책과 주무관	"
정희철	예산기준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이정은	예산기준과 사무관	"
권민상	예산기준과 사무관	"
정찬구	예산기준과 사무관	"
김현후	예산기준과 사무관	"
이영우	예산기준과 주무관	"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이석한	재정시스템개선팀 팀장	"
허현정	재정시스템개선팀 사무관	"
공귀환	재정시스템개선팀 주무관	
진민규	기금운용혁신과 과장	제3부 제2장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통계
이상희	기금운용혁신과 사무관	"
이대권	기금운용혁신과 사무관	"
최현규	기금운용혁신과 사무관	"
문정민	기금운용혁신과 사무관	"
조상우	기금운용혁신과 주무관	"
신반야	기금운용혁신과 주무관	"
(공석)	고용노동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일자리 분야
안재영	고용노동예산과 사무관	"
유동석	고용노동예산과 사무관	"
권영현	고용노동예산과 사무관	"
김태호	고용노동예산과 사무관	"
이혜인	고용노동예산과 주무관	"
권혁제	고용노동예산과 주무관	"
박환조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환경 분야
김재오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 사무관	"
이진영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 사무관	"
박형민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 사무관	"
박병국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 주무관	"
정원	인적자원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교육 분야
박재현	인적자원예산과 사무관	"
김성용	인적자원예산과 사무관	"
최동혁	인적자원예산과 사무관	"
이승준	인적자원예산과 주무관	"
김현아	인적자원예산과 주무관	"
정성원	문화체육관광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문화·체육·관광분야
이국희	문화체육관광예산과 서기관	"
심민준	문화체육관광예산과 사무관	"
최지애	문화체육관광예산과 사무관	"
최성민	문화체육관광예산과 사무관	"
고동성	문화체육관광예산과 주무관	"
김도희	문화체육관광예산과 주무관	"
최용호	국토교통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SOC분야
유다빈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권준수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송옥현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홍주연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정성구	국토교통예산과 주무관	"
김정애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김지수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이승민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남동현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현민섭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주무관	"
윤한나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주무관	"
김건민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이한결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 사무관	"
박진영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 사무관	"
이정훈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 사무관	"
김기홍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 주무관	"
김상우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 주무관	"
박현창	농림해양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농림·수산·식품분야
김영수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정동현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김미선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김상민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정혁주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권혜현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정성원	농림해양예산과 주무관	"
한상학	농림해양예산과 주무관	"
이중진	과학기술혁신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R&D분야
김기문	과학기술혁신예산과 사무관	"
이태왕	과학기술혁신예산과 사무관	"
노승우	과학기술혁신예산과 사무관	"
김소연	과학기술혁신예산과 주무관	"
박철건	국민복지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보건·복지 분야
하치승	국민복지예산과 사무관	"
김준성	국민복지예산과 사무관	"
김도희	국민복지예산과 사무관	"
성호영	국민복지예산과 사무관	"
조래혁	국민복지예산과 주무관	"
손채윤	국민복지예산과 주무관	"
(공석)	연금보건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강준이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별첨

작성자와
편집자
포인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이재학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박재석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정희진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조해림	연금보건예산과 주무관	"
김혜영	지역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노영래	지역예산과 사무관	"
고광민	지역예산과 사무관	"
박준수	지역예산과 사무관	"
최재영	지역예산과 주무관	"
임대한	국민안전예산과 과장	"
이동각	국민안전예산과 사무관	"
정채환	국민안전예산과 사무관	"
강인주	국민안전예산과 사무관	"
김현록	국민안전예산과 주무관	"
강미자	법사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공공질서·안전 분야
박성현	법사예산과 사무관	"
김연수	법사예산과 사무관	"
정중현	법사예산과 사무관	"
이정학	법사예산과 주무관	"
김지희	법사예산과 주무관	"
이한철	행정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외교·통일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이성택	행정예산과 사무관	"
한현철	행정예산과 사무관	"
김동욱	행정예산과 사무관	"
서종국	행정예산과 사무관	"
임종찬	행정예산과 주무관	"
이지환	행정예산과 주무관	"
김영웅	지방재정팀 팀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노민규	지방재정팀 사무관	"
차경은	지방재정팀 주무관	"
박진호	국방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국방분야
박준영	국방예산과 사무관	"
손우성	국방예산과 사무관	"
한명진	국방예산과 사무관	"
이소영	국방예산과 사무관	"
임진호	국방예산과 주무관	"
박성주	방위력강화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이미숙	방위력강화예산과 사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이윤혁	방위력강화예산과 사무관	"
엄지원	방위력강화예산과 사무관	"
유석찬	방위력강화예산과 주 무관	"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 예산개요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소통협력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개요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 나라살림 예산개요

-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020-10
- 발 행 처 기획예산처
- 발 행 인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소통협력과
- 발 행 일 2026년 2월
- 연 락 처 Tel. 044-214-2412